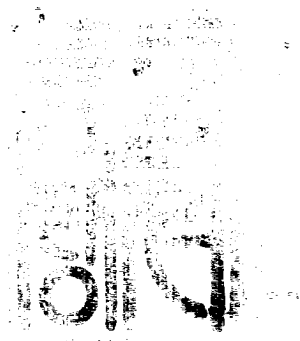


2001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 4 권)

북한실태 (경제)



통 일 부

본 논문집은 2001년도 북한 및 통일문제 신진연구자(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5권의 책으로 편집·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1.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형 연구 ...1
고 영 삼 (부산발전연구원)
2.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분석 : 점진적 이행의 CGE모형 45
이 영 훈 (고 려 대)
3.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85
유 승 훈 (호 서 대)
4. 시범적 통일로서의 통일특구에 관한 연구 135
조 진 철 (미국 포틀랜드대학)
5.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185
양 문 수 (LG경제연구원)

<부 록>

1. 권별 수록 논문 일람표 225
2. 최근 연도별 연구 과제 목록('96 ~ 2001년) 227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형 연구



고 영 삼
(부산발전연구원 전문위원)

목 차

【 요약문 】	3
1. 머리말	5
2. 북한의 IT 생태계 실태	7
3. 남북한간 IT 교류 현황	20
4. 민간부문의 대북한 IT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	33
5. 요약 결론	41
※ 참고문헌	43

【 요약문 】

6·15 공동선언 이후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IT교류의 노력들이 있어왔다. 통일 IT포럼(The IT Forum For Unification)의 결성, 북한 전문 인터넷업체의 북한 방문, 신의주·단동 지역에 IT교육센터 설치, 프로그램 남북 공동개발 방안, 북한 개발 소프트웨어 상품화·판매지원 방안 검토, 한국 인터넷정보센터의 북한내 인터넷정보센터인 북한인터넷정보센터(KPNIC) 설립 지원과 통일 도메인(ko) 확보 및 공동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등 많은 노력들이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우리에게 통일의 시너지효과와 정보화의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일으켜 매크로 시너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IT분야에서의 교류관심과 실제 교류는 증대하고 있으나, 남북한간 민족정서와 언어의 동질감을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질적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체제의 이질성은 경제협력의 성과를 예측불허의 상태로까지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제3국과 교류하는 것보다 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한편 시대는 탈냉전을 넘어 화해의 시대로 가고 있으나, 북한정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수적 흐름들은 일관된 어떤 정책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들고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북한에의 진출이 기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의 관점에서 보나, 정보화의 관점에서 보나 이시기에 민간부문의 IT교류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보호·조정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계획들이 부족함에 착안하여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설득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IT 교류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
- 둘째, 남북경협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를 각 부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제를 정비할 것.
- 셋째,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민관합자, 공사 등의 컨설팅 공식기구를 설치하여 대북 경협 혹은 IT 투자/진출 관련업무를 전담할 것.

넷째, 마세나르 국제협약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과 지혜를 발휘할 것.

다섯째, 남북한 IT 교류와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보고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류해야 할 것

북한에서 정보화가 반드시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고 북한을 해체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은 향후 정보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 당국의 접합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 머리말

1.1 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IT 교류

21세기의 초반은 이전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른바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패러다임 전환은 두 개의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분단에서 통일(의 시대)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IT(의 시대)이다.

전자의 경우 보수적 기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단 반세기만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이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던 '분단의 시대'에서 '통일의 시대'로 가는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보기이다. 거시적인 부분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통일을 앞당겨 나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IT는 오늘날 국가의 산업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가장 주요한 방안이 되고도 있지만, 특히 정보화가 내재적으로 가진 특징인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민주성 때문에 각국의 전통적인 정치사회적 틀은 상당히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보문명의 큰 흐름 속에서 있는 분단국가인 우리가 이러한 두 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잘 활용한다면 민족발전에 매우 크다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날 정보화 전략은 각국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남북한간의 IT를 매개로 한 각종 전략은 통일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민족 국가의 국력을 한층 성숙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IT교류의 노력들이 있어왔다. 얼른 생각나는 것만 해도 통일 IT포럼(The IT Forum For Unification)의 결성, 북한 전문 인터넷업체의 북한 방문, 신의주-단동 지역에 IT교육센터 설치, 프로그램 남북 공동개발 방안, 북한 개발 소프트웨어 상품화·판매지원 방안 검토,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북한내 인터넷정보센터인 북한인터넷정보센터(KPNIC) 설립 지원과 통일 도메인(ko) 확보 및 공동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등 많은 노력들이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우리에게 통일의 시너지효과와 정보화의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일으켜 매크로 시너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

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IT분야에서의 교류관심과 실제 교류는 증대하고 있으나, 남북한간 민족정서와 언어의 동질감을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질적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체제의 이질성은 경제협력의 성과를 예측불허의 상태로까지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제3국과 교류하는 것보다 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한편 시대는 탈냉전을 넘어 화해의 시대로 가고 있으나, 북한정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수적 흐름들은 일관된 어떤 정책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들고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북한에의 진출이 기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의 관점에서 보나, 정보화의 관점에서 보나 이시기에 민간부문의 IT교류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보호·조정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계획들이 부족함에 착안하여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설득력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목표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I: 북한의 IT 생태계의 특성을 정책(states policy)의 측면과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 북한의 IT 생태계는 그곳이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우리의 경우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상당히 허용되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 국방위원과 노동당의 블랙박스적 판단에 의존해 있다. 그러나 최근 남한의 기획력과 자본, 중국의 경영감각을 빌어 평양에 IT 대학을 설립하기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교조적 사회주의가 아닌 형태의 독특한 메카니즘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II: 남한의 IT 교류의 현황과 각 기업의 전략,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및 정책은 무엇인가? : 북한과의 교류는 그 특성상 교류의 깊이 및 속도의 조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정

부의 이에 대한 정책, 민간기업의 교류 현황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III: IT 교류에 있어서 정부 역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 이 부분은 정부의 현재 정책상 문제점 및 민간기업의 애로점을 파악하는 한편, 이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향과 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과제 IV: 남북한간 성공적인 IT 교류·협력을 위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이 부분은 본 연구과제의 중심사항으로서 가능한 한 실행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문헌조사의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북한의 IT policy에 관련된 정책보고서, 관련분야의 우리나라 국가출연연구소의 정책보고서, 국회 생산자료, 통일IT포럼의 논의를, 세미나 자료, 관련분야 국내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2. 북한의 IT 생태계 실태

2.1 북한의 IT정책과 IT산업

2.1.1 북한의 발전과 정보통신의 역할

오늘날 IT는 세계 각국에서 자국을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앞서서 산업화를 추구하였던 서구 국가는 물론이고, 산업화의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도 IT를 국가발전의 중심 축으로 설정하고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은 북한이 더 이상 해외 각국의 발전 노하우를 외면할 수도 없고, 세계사적 문명의 흐름인 IT 전략을 더 이상 채택하지 않을 수도 없게 하였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국가발전에 있어서 정보통신산업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면서 산업정책의 '중공업 중심의 대내 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산업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정책은 이에 기반하여 구상 추진되었는데, 이를 김유향(2000)은 크게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제1단계(1960~70년대): 전자 및 통신산업의 초기 발전시기로서 자체 개발전략이 기본목표를 이룬다. 1960년대 중반의 자동화 기기, 컴퓨터, 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전개되는 시기부터 1970년대 후반의 자립적 기술개발 시도가 실패를 거듭하던 시기이다.

제2단계(1980~1990년대 초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개선되고 본격적인 육성전략이 시도되던 시기로서 김일성의 유럽순방을 기점으로 외부기술의 적극적 도입전략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의 낙후가 경제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1988년 3월 당 중앙위 6기 13차 전원회의에서 2차에 걸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차: 1988.7~1991.6, 2차: 1991.7~1994.6)을 수립, 전자·정보기술 분야의 육성을 강조하였다.¹⁾

그러나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의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면서, 단기간 내 과학기술발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1991년 10월 개최된 '전국과학자대회'를 통해 과학기술부문의 중장기 계획인 「2000년 과학기술발전전망목표」를 제시하며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입안하였다.²⁾

특히 이 시기는 기술 낙후가 심화된 원인을 80년대 중반까지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주체성이 강조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이들 계획 기간 중에는 국민소득의 3~4%를 과학연구사업 강화에 투자하기로 계획하였는데, 특히 여기서 극소형 전자계산기, 광섬유 통신 등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표로 제기 되었다.

또한 이시기는 컴퓨터산업 정책이 선구적으로 시도되었다. 컴퓨터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1987년 김일성 교시와 1989년의 김일성 교시에서 강조되고

1)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88-91)은 15개 종합과제와 44개 대상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초대규모 집적회로, 대출력 고내압 반도체생산의 공업화와 경제 주요 부분의 전산화의 일환으로 「조선컴퓨터센터」를 중심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며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울러 하드웨어와 자동화 요소 등의 생산에 비중을 두었다.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94)은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의 전산화와 초대규모 집적회로 생산의 공업화를 당면 목표로 하였으며, 16메가 초대규모 집적회로 개발과 함께 32비트 초소형 컴퓨터의 공업화와 64비트 초소형 컴퓨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박찬모, 1999: 124).

2) 주요 내용은 ① 2000년까지 수학 등 기초과학 발전 토대 구축 ② 컴퓨터, 원자력 이용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 도모 ③ 금속전자기계공업, 경공업, 농업 등 산업 전부분의 과학기술발전 ④ 2000년까지 연간 국민소득의 5%를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하고 박사, 준박사 등 20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 ⑤ UNDP등 유엔산하 과학기술기구와의 교류증대 및 지원기금확보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 ⑥ 연구단지 조성, 공장기업소 등 현장연구소의 현대화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이다. 특히 컴퓨터와 전자 분야에서는 대규모의 집적회로 연구와 고속반도체 개발, 32비트급 컴퓨터의 공업화 실현, 64비트급 컴퓨터 개발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있는데, 여기에서는 컴퓨터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중형컴퓨터와 초소형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생산해 북한경제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수요를 북한 자력으로 원활히 보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컴퓨터 부문을 경제의 보조적 수단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식이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은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기울이며 공장자동화 등에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공작기계 숫자조종화(수치제어), 유연생산체계(공장자동화)를 확대하고 제품의 원가를 낮추는 등 품질제고와 생산증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제3단계(1990년대 중반-현재): 80년대 이후 노력해온 IT산업 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외에, 특히 통신 현대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한 단계이다. 이 시기는 특히 전자관련 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던 전략을 포기하고,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전략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전략의 전환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의 중점 부문으로서는 반도체 개발, 전자 부품의 80% 국산화 등이다. 또한 대외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였는데, 그 주요부문이 전자관련 부문이다.³⁾

또한 이 시기 북한은 컴퓨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발전 목표는 ①국가 차원의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 ②경제부문 자료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확립 ③데이터베이스 구축 ④공장자동화 ⑤애니메이션 제작 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 세계적인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군 및 산업의 정보화 추진과 사회정보화의 차단이라는 분리정책이 시도되어 왔던 시기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IT는 자국의 국가발전에 있어서 1988년 이후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볼 때 북한의 IT는 그 성과의 유무와는 별개로 남한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남한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들어서 선진국의 산업구조 조정의 환경 하에서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모색 속에서 정보통신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그것은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라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다(고영삼, 1998: 109- 115).

3) 북한의 기본적 전략은 외국 기업의 기술력과 자국의 노동력을 결합, 경쟁력을 가진 가전 제품을 생산해 동남아 등지에 수출한다는 것이다. 최근 나진, 선봉지구를 중심으로 선진 자본과 기술도입을 추진중인 것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뒤늦은 산업화를 만회하고 이후 들이닥친 IMF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국가적 총력으로써 정보기술을 진흥하고, 또한 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하였던 것에 비하여, 북한의 경우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처럼 가열찬 추진력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정보화가 가진 개방성의 특징 때문에 북한의 경우 정보화는 단순한 국가경쟁력의 제고와는 다른 입장에서 간주되었던 것이다.

2.1.2 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특성

1) 통신 인프라 현황

국제통신연합(ITU)의 '세계통신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통신회선은 약 120만 회선이며, 전화보급율은 인구 100명당 5회선 수준이다(이태섭, 2000:12). 그러나 전화 통신망 또한 공공 행정망부터 먼저 설치되었고, 당간부들은 개인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일반 주민들은 대개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공중전화는 평양, 함흥 등 대도시의 주요지점과 시·군 지역의 통신소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도로써 1996년 현재 2,720여대의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이니(이태섭, 2000: 12), 통신 인프라의 열악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시외전화는 개인의 생활상의 필요에 부응하기보다는 산업목적과 행정목적 위주의 구성되어 있다. 시외전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지방의 도, 시, 군, 리로 연결되는 선형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구역에 따라 중앙, 도, 군, 읍 및 중요산업기지를 연결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통신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하여 전화의 자동화, 디지털화를 추진중인데, 1997년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16개 시/군간의 통신선로를 광섬유 케이블로 교체하고,⁴⁾ 평양과 70여개 시/군간의 교환기를 수동에서 자동식으로 전환하였다. 시외전화 교환방식의 디지털화 비율은 4.6%대 정도이기는 하지만 현재 유엔개발계획(UNDP)의 협력하에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4) 현재까지 평양 - 함흥간, 평양 - 신의주간, 신의주 - 평안북도 내 16개 시, 군 및 노동자 지구 등에 광케이블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주로 중국과의 무역에 초점을 두고 케이블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1〉 남북한 통신시설 현황 비교

구분	단위	북한(A) (1994.9 ITU)	한국(B)	비교(A/B)
가입전화시설수	천회선	1,307	20,223	0.06
전화 가입자 수	천회선	1,089	16,686	0.06
100인당 보급률	대	5.2	37.9	0.14
공중전화 시설수	회선	2,720	285,133	0.01
1000인당 공중전화보급률	대	0.13	6.5	0.02
국제전화 회선수	회선	120	12,051	0.01
TLX 가입자 수	회선	1,862	13,500	0.14
교환기 디지털화율	%	4.6	58.5	0.08
종사원 수	명	15,000	59,907	0.25

자료: ITU(국제통신연맹, 1994.9)을 한국전산원(2000: 310)에서 인용

북한의 국제통신망은 유선망과 무선망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현재 평양-북경-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무선망과 신의주-북경, 청진-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유선망 등 구 사회주의권과의 구간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그러나 서방권과는 90년대 들어와서야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방으로는 평양-싱가포르-홍콩간의 단파무선과 중국의 북경지구국을 중계지로 하는 간접통신망이 있다. 미국과의 통신은 AT&T가 95년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리스의 세 도시에서 평양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현재 평양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국제자동전화(IDD)는 세계 170개 도시로 통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제전화의 회선수는 70년대에는 5회선, 80년대 33회선으로 증가, 97년 120회선에 이르고 있다. 위성통신사업은 80년대 이후 공산권통신위성기구(INTERSPUTNIK)와 INTELSAT에 차례로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요 위성지구국으로는 1985년에 중국의 지원으로 기상정지위성수신국이 평양에 설치(기상위성수신과 통신위성시설의 기능)되었고, 1986년에 프랑스의 기술로 인텔샷 위성통신기지국이 평양에 건설(포물경수신안테나, TV, 전신전화, 사진, 텔렉스의 송수신 설비)되어 있다. 이로써 미국, 일본 등 태평양 지역나라를 제외한 서방 여러나라와 위성통신 및 위성 TV중계가 가능해졌다. 1989년에는 국내통신과 위성통신을 총괄하는 국제통신센터가 평양에 완공되었다. 또한 90년 11월 일-북한간 위성통신 회선 개설 협정을 체결, 인텔 샷을 통해 전화 3회선, 텔렉스 10회

선의 위성통신회선을 갖고 있어, 교민이 많은 일본과는 1990년 11월부터 직통위성회선 및 국제전용선을 통하여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김유향, 2000).

2) IT 및 정보화 현황

북한의 정보화 사정은 극히 열악하다. 북한은 현재 군수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발자를 공산권에 대하여 수출을 금지하는 바세나르 협정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고성능 컴퓨터의 수출을 금지하는 타이어 IV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첨단컴퓨터 기기의 유입이 극히 어려워 전반적으로 정보화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먼저 컴퓨터 현황을 보면, 현재 바세나르 협약의 규제를 받고있어 대형 컴퓨터의 도입이 매우 힘든 북한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국방산업 분야에서 고성능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C의 경우 현재 평양의 조립공장에서 매년 3만여대 정도의 32비트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는 정도이다. 대개 16비트에서 32비트 컴퓨터가 주종을 이루며 전국적으로 10여만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찬모, 1999:126; 통일부, 2000; 김유향, 2000)

북한의 컴퓨터 보급율은 극히 저조해 노동당과 국가보위부, 은행, 대형 기업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일부 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컴퓨터 관련 학과의 경우도 교수들은 펜티엄PC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학생들은 아직 386·486PC를 활용하는 수준 정도이며 최근 PC 보급이 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컴퓨터 교육기관인 평양 전자계산기대학에서는 1997년부터 펜티엄급 컴퓨터 200대 정도를 갖춘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선컴퓨터센터”에는 최신 선 스파크 워크스테이션 등 많은 선진국 기자재가 도입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윈도NT등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리눅스 환경의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비용절감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언어는 C언어와 C++, Visual Basic, Java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유향, 2000).

한편, 남한과 같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IT 인력의 배양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IT인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 > 1985년 4년제 컴퓨터 요원 양성 전문기관인 「조선계산기단과대학」 설립
- > 1986년 프로그램 개발전문기관인 「평양정보센터」 설립
- > 1990년 「조선컴퓨터센터」 설립, 90년 이후부터 매년 전국적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 특히 주요 대회 입상자들에게 대학 입학 특전 부여 우수한 인재들의 소프트웨어 분야로의 진출 계속 유도
- > 1998년부터 각급 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의무 교육 시작
- > 1999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처음으로 컴퓨터과학대학 설치, 김책공업대학, 평양전자계산기대학 등 주요 대학에 프로그램학과 설치
- > 1996년 4월 평양정보센터가 일본의 오사카정보센터(OIC)와 공동으로 'O&P Training Center' 설립 정보통신인력에 대한 교육 담당

이상과 같은 노력으로 북한은 1986년부터 1999년까지 약 10만명 정도의 정보통신 관련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현재 전공 분야 종사자는 약 5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또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100여개 대학 및 120여개 단과대학에서 1만명 정도의 IT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최기철, 2001: 34). 한편 현재 북한에는 IT 업체가 약 250여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IT업체보유의 7% 수준을 밑도는 부산지역의 IT업체 숫자보다도 적은 수인데, 결과적으로 북한 지역에서는 IT 업체의 수에 비하여 IT 인력은 고급이전 중급수준이건 간에 남아도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HW IT는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북한은 반도체 분야에서 16메가급 IC를 개발하였고, 조선과학원 산하의 전자공학연구소에서 IC 시험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발전은 있었다. 지난 98년 발사된 '광명성 1호'의 경우 8만가지 이상의 부품을 자체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사기술과 관련된 IT HW는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64M D램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술수준이 못미치는 단계이다.

반면 북한은 SW 분야의 발전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그 기술력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DPRK Academy of Sciences), 평양프로그램센터(PIC: Program Information Center), 조선컴퓨터센터(KCC: Korean Computer Center),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Silver Star), 평양전자계산기단과대학 등의 연구소가 있으며 상위수준의 개발인력은 약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관에서 생산하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은 <표 2>와 같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자동화학부가 있었으나 99년 컴퓨터과학부로, 다시 2000년에는 컴퓨터과학대학으로 개편·확장되어 비전공 학생에게도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개발인원 120명의 프로그램정보센터가 운영 중이다. 김책공업대학도 120여명의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평양프로그램센터는 1986년에 창립되었고 현재 연구인력 100여명이 일을 하고있다. 조선컴퓨터센터는 1990년 조총련지원으로 설립된 컴퓨터종합운영기관이다. 경제가 분야의 전산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표 2〉 북한의 대표적인 정보센터와 생산SW

정보센터	대표적인 SW 생산품
김일성종합대학	3차원 컴퓨터화상처리 SW(황룡 2.0), 기밀보호자료프로그램(비룡)
평양프로그램센터	문서편집프로그램(창덕:MS-DOS용, 윈도우용; 단군: MS-DOS용, 윈도우용, 베킨토시OS용, 유닉스용; 청봉2:윈도우용), 전자출판과 인식프로그램(전자출판체계; 인식), 설계지원체계(산악)
국가과학원	언어지원프로그램(비둘기; கட봉부;배;무지개;스터디 테프리스;비지니스), 게임프로그램(망나니공; 색맞추기; 요술상자; 용), 전자요리집(요리-300)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	인공지능컴퓨터프로그램(은바둑), 태권도프로그램(태권도), 우표DB(조선우표)
조선컴퓨터센터	의료프로그램(고려침구; 금빛말; 종합의료봉사시스템; 체질분류와 진단체계), POS 프로그램(지능출납시스템), 인식프로그램(지문자물쇠; 자동지문검색체계 AFIS2000), 문자인식체계(목란; WINK98), 기계번역프로그램(만경봉 1.0).

자료: 김유향(2000), 한국전산원(2001: 414~417)의 자료 조합

2.2 북한 IT 생태계의 특징

남북한간 IT교류에 있어서 핵심은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IT 생태계의 특징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2.2.1 취약하고 편중된 정보통신 인프라

1960년대의 북한은 당시 세계적으로 몇 나라밖에 조립하지 못했던 전자 계산기를 개발하는 등 정보통신 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빠른 발전을 보였었다. 그러나 70년대를 거쳐 80년대로 가면서 북한은 60년대이래 추진해 온 주체형 발전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현재 매우 열악한 인프라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의 통신 인프라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첫째, 주지하듯이 북한은 현재 매우 열악한 통신인프라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통신망 인프라의 경우 국제통신연합(ITU)의 '세계통신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통신회선은 약 120만 회선이며, 전화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5회선 수준이다(이태섭, 2000:12). <표 3>에서 보면 남한이 2.6명당 1대씩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21명당 1대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남북한 통신시설 비교

구분	북한	남한
T V	11.5명당 1대	4.3명당 1대
라 디 오	9.2명당 1대	1명당 1대
전 화	21명당 1대	2.6명당 1대

자료 : Computer Industry Almanac(1997); 한국전산원(2000:310)

둘째, 한편 북한의 통신시설은 그 양적인 면에서도 많이 열악하지만 그 내용적 의미를 읽으면 더 심각하다. 즉 통신시설의 단순한 구축률 통계보다는 설비의 효율성과 통화 성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화 연결이 잘 되는지, 통화 중 끊어짐의 현상이 있는지 등의 경우를 제고해 볼 때 효율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통신 인프라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성형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지방도시와 지방도시간에 직접적인 연결 형태가 아니고, 평양으로 모여서 다시 분산하는 형식의 중앙집중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태섭, 2000: 130). 이것은 북한의 공공행정구조와 관련이 있다. 북한의 행정관리 체계는 중앙집권적인 부문별 관리체계(내각 - 성 - 관리국 - 기업소)를 기축으로 하여, 여기에 지역별 관리체계(중앙 - 도 - 시·군)를 결합시킨 구조로 되어 있다. 광섬유 케이블 공사와 컴퓨터 망 역시 이같은 구조로 구축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 또한 평양을 중심으로 구축된 것이다. 북한의 외국과의 전화는 평양에서 170여개 도시로 연결되어 있다.

〈표 4〉 북한의 지역별 통신시설 현황

구분	교환시설수	평양과의 회선 수	교환기 명
평양특별시	236,000	-	디지털 크로스바
함흥(함경남도)	122,600	780	"
청진(함경북도)	129,800	650	"
신의주(평안북도)	119,200	320	크로스바
강계(자강도)	123,400	210	"
해산(양강도)	118,700	210	"
남포직할시	74,800	150	"
해주(황해남도)	102,900	250	"
사리원(황해북도)	105,100	250	"
원산(강원도)	107,400	180	"
개성직할시	67,260	150	"
계	1,307,100	3,150	

자료 : ITU(국제통신연맹)(1994.9); 한국전산원(2000: 310)

넷째,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이용에 있어서 편중현상이 심하다. 북한의 전화통신망은 공공 행정망부터 먼저 설치되었는데 특히 국가기관과 당 그리고 군의 전화망은 상대적으로 양호할뿐더러 전체 시설 가운데 차지하는 수도 많아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당간부들은 개인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지라도 일반 주민들은 대개 공중전화를 사용한다고 한다. 통신 인프라가 처음에 군사용 등 공공망의 개념에서부터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IT산업의 경우에도 군사용 통신기술과 통신장비산업이 민수용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다.

2.2.2 사회주의적 국가계획하에서 추진되는 정보통신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적인 마스터 플랜하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IT 인프라가 KT와 하나로 통신 등과 같은 기업들이 추진하는 정보화와 이들의 망을 임대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망 등이 반드시 일관된 하나의 계획 속에서 추진된다고 할 수 없음에 비하여 북한의 경우 완전히 하나의 국가계획 속에서 정보

망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것은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체신의 개념에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신'의 개념보다는 '체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김우향, 2000 참고).

“사회주의하에서 체신은 통신, 방송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연계를 신속 정확히 지어주고 소식을 제때에 전달하여주는 나라의 신경이다. 체신은 중요하게 지휘통신과 산업 통신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당과 국가의 경제 지도와 관리를 보장하며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사이의 긴밀한 생산적 연계를 맺어줌으로써 경제건설에 적극 복무한다. 체신은 또한 주민통신, 방송을 보장함으로써 인민생활에 직접 봉사한다. 체신은 특히 당의 노선과 정책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근로자들에게 신속 정확히 전달침투하며 그 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기동적으로 보장한다. 체신은 현대전의 신경으로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김일성 저작집 2권 p.139)

이상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주의 체신의 역할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체신은 정치/경제/문화/군사 등의 각 기능을 연계시키고 소식을 전달하는 신경망의 기능 담당
- ② 경제건설을 위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
- ③ 인민생활에 직접 봉사하는 수단
- ④ 국방력 강화의 수단
- ⑤ 국가사회의 모든 부문에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달하는 수단

이상에서 볼 때, IT가 남한에서는 국가산업의 발전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비하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특유의 성격이 철저히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인 기능보다는 국가 운영을 위한 도구로서 개념화되어 있는 것이다.⁵⁾ 이 때문에 통신부문에 대한 최종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인

5)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북한의 체신은 통제의 개념이 많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국제전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당 113연락소에 승인하는 일, 국제전화를 취급하는 평양의 국제위성통신국이 국가보위부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는 것, 정부기관이나 대학 등이 국제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통신 내용을 미리

민군의 통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군부의 동의 혹은 묵인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정도인 것이다(한국전산원, 2001: 415).

이러한 북한의 상황에서 인터넷이 극히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해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북한이 인터넷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인재육성을 통하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태의 후진성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인터넷이 사회주의 체제를 흔드는 경로로 파악되기 때문일 것이다.

2.2.3 국가위기의 돌파구로서 전략적 필요성의 정보화

80년대에 체신의 과학화란 이름으로 정보통신 정책을 추진해 오던 북한은 90년대 이르러 경제의 퇴보와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하여 IT 산업 전반의 낙후상태에 빠져들어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최근 IT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IT를 현재와 같은 상황의 국가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을 정도이다.

북한의 IT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유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IT는 북한 경제를 회생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일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으로 나타나는 대외적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이후 에너지난, 식량난이 거의 만성화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말까지 2~4%를 맴돌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990년에 -3%로 하락하고 이후 1996년까지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북한 경제는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전반의 위해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은 자유무역경제제대로서 나진·선봉지구를 선정하면서 내부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또 외자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둘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IT에 대한 관심은 북한의 IT발전전략에 대한 무게를 더욱 실어주고 있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 대한 처방을 고민하고 있던 김위원장은 중국의 상하이(上海) 시내 소프트웨어개발연구소, 인간개념남방연구소 등이 밀집한 과학기술단지를 둘러보면서 IT산업을 통한 북한의 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진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미 1997년과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할 만큼 이미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김위원장은 선(先) 전통산업 육성

서면으로 노동당에 제출해야 하는 것,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국제위성통신국을 통해 수신인에게 연결되는 것 등이 그 보기이다.

후(後) 첨단산업 개발이라는 통상의 수순으로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동시 육성하는 '초(超) 압축성장'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이다. 김 국방위원장이 국가주도의 첨단금융산업 육성으로 요약되는 상하이식 경제특구를 북한에 개발하겠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이다.⁶⁾

김정일위원장의 IT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곧 IT 정책의 추진력으로 바로 연결된다. 그 보기로 1998년 김위원장이 컴퓨터 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이후, 비록 개인용 컴퓨터 보급률은 저조할지라도, 각급 교육기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컴퓨터 교육열풍이 불고 있다. 제법 높은 수준의 전국 대학생 컴퓨터 경연대회가 열렸던 1999년도에는 2만명이 참가하였다고 한다(이태섭, 2000: 16).

2.2.4 발전된 SW 기술수준 보유

북한은 열악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낮은 수준의 HW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SW부문의 기술은 상대적으로 매우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순수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있어야 비로소 발전될 수 있는 HW와는 대조적으로 SW기술은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북한은 음성/문자/지문 등의 인식기술, 각종 제어 등 자동화 시스템의 기술수준, 의료정보시스템 기술 등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기밀보호자료프로그램인 비룡, 문서편집프로그램인 창덕/단군/청봉, 언어지원프로그램인 비둘기/글동무, 인공지능컴퓨터프로그램인 은바둑, 태권도프로그램인 태권도, 의료프로그램인 고려침구/금빛말, 인식프로그램인 지문자물쇠, 자동지문검색체계인 AFIS2000, 문자인식체계인 목란, WINK98 등은 이미 매우 세련된 것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DPRK Academy of Sciences), 평양프로그램센터(PIC: Program Information Center), 조선컴퓨터센터(KCC: Korean Computer Center),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Silver Star) 등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등 예술방면에 관심이 깊어 이러한 것을 콘텐츠로 하는 SW기술도 매우 빠른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6) 김정일도 인터넷의 매니아로서 IT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의 아들인 김정남도 현재 공식적인 직함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컴퓨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북한의 IT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위원장의 중국방문 때는 김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IT기술현황을 둘러보았다.

3. 남북한간 IT교류 현황

3.1 남한의 대북한 IT교류 국가정책

3.1.1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북한의 반응

남한의 북한에의 IT 교류정책은 DJ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포괄적 포용정책 혹은 햇볕정책으로 지칭되고 있다. DJ에게서 햇볕정책은 최근 김종필 자민련당과의 결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정책으로서 그의 남북문제에 대한 평소의 지론과 권력갈등의 정치지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전략이다.

햇볕정책은 아마도 햇볕정책의 철학이라고 불려도 좋을 김대통령의 대북한 철학에 기반하여 있다. 햇볕정책의 철학은 김대통령의 취임사에서부터 나타났다. 김대통령은 그의 취임사(1998. 2. 25)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천명하였다. 즉, ①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고 하는 북한문제에 대한 3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서 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② 정경분리원칙, ③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 ④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탄력적 지원, ⑤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⑥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을 제시하였다(통일부, 1998).⁷⁾

햇볕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하여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통령은 햇볕정책을 ①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정책, ② 접촉·대화·협력을 통해 스스로 변화토록 유도하는 정책, ③ 단순한 유화정책이나 일방적 시혜정책이 아님, ④ 북한의 연착륙 유도, 흡수통일을 배제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통일부, 1998). 종합하여 보면, 북한에 더 큰 아량과 이해를 보이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대북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이 남한의 햇볕정책을 무조건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햇볕정책을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

7) 김대통령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CNN과의 회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CNN 회견, 1999. 5. 5). 김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언급하였다. 첫째, 이제까지의 남북간 불신과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함. 둘째,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함. 셋째, 북한이 개방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할 것. 넷째, 한반도에서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고 군비통제를 실현함. 다섯째, 정권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법적 통일(de jure unification)에 앞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상황을 실현할 것.

을 위기로부터 구해 줄 수 있는 것(연착륙)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변화(시장경제와 민주화)시키려는 정책으로 평가하면서 강한 거부반응, 용이 자체에 대한 모욕감, 오히려 체제강화, 동 정책을 역이용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⁸⁾

3.1.2 남북한 교류에 관한 남한의 법적 태도

남한의 대북한 IT 교류는 통일의 조기 가시화 및 남한 IT산업의 시장 개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권에서 IT교류에 관한 정책은 햇볕정책의 주요한 내용이 되고있다. 일단 IT 교류에 관련된 남한의 법 현황을 보기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가. 제정 목적 및 타법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많은 법률들이 연관되어 있다.⁹⁾ 그러나 정부는 1990년 8월1일 부로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

8) 엄홍철(1999)는 남한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하여 북한당국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햇볕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 : 조선중앙통신(99.6.12)은 "햇볕정책이란 본질에 있어서 반복대결 정책", "명백히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언급하고 있으며, 평양방송(99.7.9)은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으로 발언, 한편 외무성대변인(99.8.17)은 "화해와 협력의 미명하에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저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흡수 통일하려는 모략책동"으로 언급하고 있음

2) 햇볕정책이라는 용어에 모욕감

3) 햇볕정책을 강조할수록 체제무장 강화 : 북한은 "탈사회주의 - 몰락, 붕괴"로 평가하고서 결코 사회주의 체제의 옷을 벗지 않고 북한의 대남 적대능력을 강화시키려고 할 것

4) 햇볕정책을 역이용 : 경제지원을 요구하면서도 남한의 정부를 배제하고 민간부문과 교류협력 확대하려고 한다는 것

9) 외국환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등이다.

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동법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된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있다.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 ③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 ④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 ⑤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 ⑥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 추진
- ⑦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교역시 승인 규정

남북한 주민이 왕래, 통신 접촉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통일부 장관은 교역대상물품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라. 정부의 지원 및 규제사항

정부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보조금의 지급 및 전문가의 협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을 위반할 시에는 벌칙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마. 북한 방문시 신청서에 기재사항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증명서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방문목적, 방문기간, 신장,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바. 협력사업자 승인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의 승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가 있다고 함으로써 매우 폭 넓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 통신역무에 관련한 정부 권한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가능한 통신역무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전기통신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 총괄 분석

이상에서 보듯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한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구정을 하고 있는데, 교류협력에 관련된 모든 정책 구상, 승인, 정부의 지원, 규제에 관하여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남북협력기금법

가. 제정 목적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서 설치된 법이다.

나. 기금의 용도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은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①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②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③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 ④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내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 ⑤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⑥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⑦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가. 제정 목적

동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서 1997년 1월 13일 제정되었다.

나. 보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1년 기간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구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

라.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설립

다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자격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설립하고서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받도록 하고서 통일부장관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도록 한다.

- ①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 ②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 ③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바. 국가의 보로금의 지급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①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 ② 군함·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 ③ 전차·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 ④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 ⑤ 재화 : 시가상당액

4) 국가보안법

앞에서 주지하였듯이 남북교류협력법 3조에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존재에 대하여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경우도 동 조항의 예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제성호, 1998).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8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주민과의 통신 등에 의한 접촉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접촉 내지 교류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보법의 조항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정세의 변동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5) 그 외

전기통신기본법은 남북교류협력법 제48조에 의한 남북한간의 전기통신교류에 준용되는 법이다. 1991년 8월 10일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조항, 전기통신기술 및 설비에 관한 조항,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에 관한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종류(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에 관한 것,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직접적 관련성은 적지만 남북통신교류와 관련하여 전파법의 해당조항들이 부분적으로 준용될 수 있다.

3.2 남한의 대북한 IT교류 동향

3.2.1 남북한간 통신망 연결 및 운영

1) 남북간 직접연결망 현황

남북한간 통신망은 직접연결된 망과 간접연결망이 있다. 먼저 직접연결망 전화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전화이다. 남북한간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에서 쌍방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서울과 평양간 2회선을 가설하였다. 이것은 1945년 남북 쌍방간의 전화운용이 중단된 이래 26년만에 연결된 것이다. 이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남북조절위원장간 전화가 1회선 개통되었으며, 각종 회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해 8월에는 서울과 평양간 회담지원용 전화 18회선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1975년 북측이 일방적인 직통전화 운용을 중단한 이래 일부 전화회선의 재개통 및 폐쇄가 반복되다가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 인수와 관련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직통전화 전화선이 재개통되었다. 2000년 현재 남북한간에는 직접 연결된 전화는 29회선이다.

〈표 5〉에서 남북한 관제통신망은 1998년 10월 남북간에 체결된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항로관제소와 북한의 평양항로관제소간에 연결된 망이다. 남북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1997년 11월 설치된 판문점 경유 남북간 직통전화로 2회선이 있으며, 보조회선은 1998년 2월 인공위성(ASIASATH)을 이용, 남북 직접연결 방식으로 1회선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5〉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현황

(2000.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	서울~평양	2	'71. 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72. 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84. 12.21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71. 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92. 5.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판문점경유)	2	'97. 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98. 2.17
합	계	29	

자료: 통일부(2001)

2) 남북간 간접연결망 현황

한편,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되는 간접연결망 전화는 현재 21회선이 설치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KEDO 경수로 사업을 위하여 1997년 처음 8회선이 설치된 이후 금강산 관광지원용 8회선,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설한 3회선 등 총 21회선이 설치되어 있다.¹⁰⁾

10) 그러나 북한의 신호 경수로부지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중국을 경유하는 국제우편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표 6〉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현황

(2000.12.31 현재)

용도	구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인텔셋~평양~신포	8	'97. 8. 4
		2	2000.7.26
금강산 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6	'98. 11.17
		2	'99. 5.18
평양실내종합체육관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3	2000.11.21
합	계	21	

자료: 통일부(2001)

금강산 관광지원용의 경우 현재 8회선이 가설되어 있다. 현대-아태간의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통신시설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8년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주)과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2일 현대전자산업(주),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온세통신이 공동으로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1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17일 제3국 경유 국제전화방식으로 6회선이 연결되고 1999년 5월 18일 추가로 2회선이 개통됨으로써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망은 모두 8회선으로 늘어났다.

북한은 2000년 7월말부터 금강산관광객의 통신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현대의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관계자들이 평양(건설현장사무실과 숙소)에서 서울로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서울에서 평양으로는 전화를 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체육관건설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평양으로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신망을 구성하는 방법과 기존의 금강산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강산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표 7〉 남한 통신업체의 대북한 사업현황

업 체	사 업 내 용	비 고
한국통신	◦ 경수로건설 통신 구축·운용	1997. 8
온세통신	◦ 금강산 관광통신 구축·운용	1998. 11

자료: 정보통신부(2001)

이에 따라 10월 23일 현대전자, 한국통신, 온세통신은 공동명의로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통신가능 지역을 금강산지역에서 금강산지역과 평양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협력사업 변경을 통일부에 신청하여 11월 20일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남북간 민간차원의 최초의 쌍방향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화 2회선 및 FAX 1회선을 포함 총 3회선이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3.2.2 남북한간 민간 IT 교류현황

민간부분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IT에 대한 높은 관심의 표명 이후 북한의 진출을 서둘러 왔다. 이를 민간기업의 경우와 민간전문가단체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민간기업의 IT 교류 현황

오랜 숙원이었던 IT 분야의 북한진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2001년 들어서 북한의 IT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시장으로서 북한의 가능성은 더욱 인식되었다. 북한 전문 인터넷업체인 하나비즈닷컴 등 IT 벤처기업 대표 6명이 IT 분야의 남북경협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2월 5일 북한을 방문하였다.¹¹⁾ 이들은 민간대표단 자격으로 진행되는 '전체의제 논의'와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개별의제 논의' 등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전체의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장원, 2001)

11) > 하나비즈닷컴(금강산국제그물 관련 회사, 대표 : 문광승),
 > 우암닷컴(화상솔루션 업체, 대표 : 송해자),
 > 기가링크(초고속 네트워크장비 제조업체, 대표 : 김철환),
 > 허브메디닷컴(한방포털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 이승교),
 > 유빅테크(CAD/CAM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 김부섭),
 > 데이터베이스 안준모 이사,
 >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송관호 사무총장) 등이 방문하였다.

〈표 8〉 IT 기기 및 SW 교류 현황

업 체	사 업 내 용	비 고
IM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에서 인쇄회로기판(PCB) 위탁가공 ◦ 최근 컴퓨터 모니터 완제품 생산 	1998. 4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에서 유선전화기 임가공 생산 	2000. 5
하나로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SL 신호분배기 임가공 생산 ◦ 발신자표시 전화기 임가공 계약을 위한 합의서 체결 	2000. 7
오피플랫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 「과학기술자의 벗」 반입·판매 	2000. 10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둑, 장기 등 CD 6종 반입·판매 	2000. 11
하나로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향산 바둑 반입·판매 	2000. 11

자료: 정보통신부(2001)

(1) '전체의제'의 주요내용

가. 신의주 - 단둥 지역에 IT교육센터 설치

신의주 - 단둥지역은 2000년 9월부터 하나비즈닷컴과 금강산국제그룹이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북한의 대남 경험창구)와 공동으로 국제규모의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개발단지 조성을 추진해온 곳이다. 북한은 2002년 신의주 - 단둥벨리 조성을 목표로 3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북한 IT인력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1단계 구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측도 합영법에 따라 합영회사 설립을 위해 50%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다.

나.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서적 보내기 캠페인

현재 북한은 과학기술 서적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원서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마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IT교류 민간대표단은 3~5월 1차로 비정치 기술서적 1000권을 확보, 6월중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타진하였다.

다. 프로그램 남북 공동개발 방안 논의

남북 IT 교류 및 협력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소프트웨어(SW) 등 프로그램 남북한 공동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남북 공동개발을 위해 이

번 방북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련분야 고급인력 정보를 교환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었고,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교류를 위해 건설·의료·공공부문 등 남북한이 협력 가능한 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졌다.

라. 북한 개발 소프트웨어 상품화·판매지원 방안

북한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SEK) 및 소프트웨어엑스포에 출품, 전시하는 문제를 중점 논의하였다. 그리고 향후 남한의 종합 유통 또는 분야별로 상품화가 가능한 기업 후보 3, 4개사를 선정해 이른 시일내에 재방북하는 문제도 논의하였다.

마. 북한을 통일IT포럼에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

2000년에 남한의 IT전문가들이 모여서 발족한 통일IT포럼에 북한측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2) '개별의제'의 주요내용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북한내 인터넷정보센터인 북한인터넷정보센터(KPNIC)의 설립 지원과 통일된 도메인(ko)의 확보 및 공동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¹²⁾ 그리고 기가링크와 우암닷컴은 평양까지 설치된 한국 통신의 광통신망을 이용해 남북 이산가족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화상면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사의 네트워크장비와 부대 장비 일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방포탈사이트 운영업체인 허브메디닷컴은 한방세계화 사업의 하나인 남북한간 한방 임상기술 교류와 동양의학학술대회 준비를 협의하고, 한약재 직거래 및 계약재배에 관해서도 북측과 논의하였다. 각 기업의 개별적인 성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3) 이후 진행사항

하나비즈닷컴과 북한의 평양정보센터(PIC)는 공동으로 2001년 8월 2일 중국 단둥에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하였다. 하나프로그램센터에는 현재 46명의 북측 IT 연구원이 있는데, 이 중 10명은 남한의 기업과 공동으로

¹²⁾ 현재 한국은 'kr', 북한은 'kp'를 국제 공인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SW를 개발하고 있으며, 나머지 36명은 공동개발에 투입되기 위하여 사전 교육 중에 있다. 또한 통일IT포럼과 전자신문사가 주축이 되어 PIC에서 원하는 IT관련 도서 1000권 중 일부를 남북 IT교류협력사업단 제 4차 방문단이 8월 24일 방문하여 PIC에 전달하고 향후 사업을 논의하였다.

〈표 9〉 남한 IT기업의 S/W 교류개척 현황

업 체	사 업 내 용	비 고
하나미즈닷컴	◦ 평양정보센터와 합작으로 단동지역에 S/W공동개발 센터를 설치하여 S/W위탁개발사업기로 계약체결	2001. 2
기기링크	◦ 초고속망 시범사이트를 평양정보센터에 구축키로 하고 3월중 세부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	2001. 2
허브메디닷컴	◦ 북한이 개발한 의료관련 S/W를 남측이 요구하는 사양으로 개작하여 수입 예정	2001. 2
규빅테크	◦ CAM S/W의 공동개발 및 동구권 판매협력 추진	2001. 2
우암닷컴	◦ 영상관련 S/W공동개발 및 사이버영상면회시스템 구축 추진	2001. 2
비트컴퓨터	◦ 중장기적으로 북한내에 사이버 IT교육센터 설립	2001. 2
현대아산	◦ 금강산 IT벨리조성 추진	2001. 1
엔트렉	◦ 3D 애니메이션의 입가공 사업을 위하여 평양에 단지 건립을 위한 MOU 및 설립계약 체결	2001. 1
IMRI	◦ 일본의 조총련계 S/W개발업체인 CGS(조선은행시스템)와 합작하여 일본에 유니코텍을 설립	2000. 7

자료 : 정보통신부(2001)

그 외 한국통신은 민간차원에서 북한의 아태 평화위원회와 개별접촉을 추진하는 한편, 삼성의 대북사업과 연계하거나, 현대 아산이 추진하는 대북 사업 그랜트 컨소시엄(개성공단건설 관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나로 통신은 2000년 7월 평양에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삼천리총회사와 ADSL 신호 분배기(ADSL 신호 분배기는 ADSL 선로에서 인터넷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구분해 내는 기능을 가진 장비) 입가공 계약과 바둑 게임SW, 인터넷 온라인 판권 구매계약을 체결, 북한 삼천리총회사는 월 5만 가압자 분량의 신호 분배기를 생산하여 하나로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독자적으로 대동강 공장에 진출하여 컬러 TV를 비롯한 가전제품을 위탁가공하고 있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2) 민간단체 「통일 IT포럼」 설립

통일 IT포럼은 남북한 IT교류를 위해서 남한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민간기업이다. 2000년 6월 최성모(한국전산원)·김경석(한국정보처리학회)·서현진(전자신문사) 등이 모여서 필요성을 느끼고 처음 제안을 하고서 IT관련 전문가들을 규합하여 9월에 창립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통일IT포럼(ITFU : The Information Technology Forum for Unification)은 '회원간 정보교환 및 논의를 통하여 민간차원의 남북간 정보기술(IT) 교류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상호 균형있는 정보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를 통한 남북경협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① 남북간 IT교류에 대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연구, ② 남북간 IT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여론 조성, ③ 남북 IT교류를 위한 각종 남북 인적교류행사, ④ 국제수준에 부응하는 남북간 IT표준화사업, ⑤ 남북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각종 사업, ⑥ IT를 통한 남북한 기업의 효율적인 경험 지원, ⑦ 남북 통합IT포럼 결성을 위한 각종 사업, ⑧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동 포럼은 현재까지 월례 조찬토론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연례 국제세미나, 북한 방문행사 및 북한인사의 초청행사, 주요 인사 초청 세미나 및 특강, 주례 포럼 집필, 기타 남북IT교류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각종 방문 및 초청 행사 등의 활동을 추진하거나 기획하고 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남북교류는 민간에서 동력을 받는 것이 가장 지속성도 높고 실질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통일IT 포럼의 역할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겠다.

3.2.3 소결

IT분야의 민간교류 협력은 향후 산업의 측면에서 북한측에게는 극히 중요한 반면, 북한의 체제 유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IT는 인체의 신경망과 같은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금강산 개발사업, 경수로 사업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경제교류 및 협력은 필연적으로 통신부문의 협력을 증대시키고, 역으로 통신부문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은 사회·경제·문화 등 타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수반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이동통신법을 제정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지난번 중국 방문이후 IT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여 동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체신회사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현대 관계자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통신시장의 빚장을 풀 경우 그 동안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등에 그쳤던 IT 분야의 남북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남한의 기업에는 상당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한국일보, 2001. 2. 22).

4. 민간부문의 대북한 IT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

4.1 남북 IT 교류에 있어서 문제점

4.1.1 IT 민간 교류에 대한 종합적 계획 부재

현재 민간수준에서는 북한과의 교류가 생소한 일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방북한 남한측 인사는 8000명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신비의 땅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은 DJ의 햇볕정책의 결과로서 분명 역사에 있어서 크다란 획을 그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남북 IT 정책 및 경험의 기본방향은 '정경분리'라고 하는 원칙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전자신문, 2001.09.20), 현재 정부의 IT 교류에 있어서 종합적 계획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이다.

정경분리는 분명히 IT교류에 있어서 크다란 원칙으로서 특히 민간 부문의 교류에 있어서 교류의 일관성을 부여하여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교류는 여전히 정보의 부족, 신뢰성의 의문 등 때문에 여타 외국보다 모험적인 성격이 더 많은 것으로 간주되어 교류의 폭과 깊이가 취약하다. 정부에서는 대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주요 기구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IT교류 물꼬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IT로 인하여 통일한국이 설계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비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4.1.2 정부기구의 역할에 있어서 혼신

현재 북한과의 경험 및 교류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통일부, 산자부, 정통

부, 그리고 과기부 등에서 각각 위원회를 <표 10>에서와 같이 만들어 두고 있다. 이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2001년 9월 국감에서 민주당 임채정 의원의 지적과 같이 각 정부부처는 정책개발과 민관 역할 조정 등을 이유로 협의회, 위원회 형식의 각종 민관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협의회 상호 일부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 등 공식기구와의 연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0> 현재 남북경협관련 정부기구 현황

구 분	기 구 명	비 고
통 일 부	남북경협추진실무협의회	
산 자 부	남북산업협력추진협의회	
정 통 부	정보통신남북협력추진위원회	
과 기 부	남북과학기술협력추진위원회	

또한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남북협력추진위원회와 과학기술부 남북과학기술협력추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을 중복해 위촉하고 있어 위원회간 차별성을 발견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일부 협의체의 경우 발족 직후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일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영에 있어서 실질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인 것이다.

지난 4월 정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를 설립했다. 당초 IT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업체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 및 조정을 통해 과당경쟁을 막고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설립된 이 기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들을 위촉하는데만 3개월이 소요됐다고 한다. 정보통신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이 모임의 발족을 계기로 정보통신부의 자금지원을 기대했으나 정통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불거져 사실상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며 '참여업체들의 구성이 이미 남북경협을 추진중인 업체, 앞으로 추진할 업체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끌어 갈지 고민'이라고 한다(전자신문, 2001.09.18). 현재로서는 정부기구가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활동을 지켜만 보는 방임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4.2 남북 IT 교류의 기본방향

4.2.1 남북한 균형발전을 통한 통일 지향

정보화는 흔히들 새로운 세기의 인류혁명으로 지칭받고 있다. 한국의 정보화가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담아내는 내용이자 형식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정보화 계획은 통일을 지향하는 정보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남북정보화의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보화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우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남북한간에는 IT인프라에서부터 시작하여 많은 격차가 있다. 남북한간 정보통신 인프라의 격차를 최단시간에 단축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북한에 대한 제3국의 지원과 외자유치의 형태보다는 남북한내 자립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좋을 것이다.

또한 언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에서는 MS윈도에 있어서 조선글의 사용에 대하여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와같은 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북한의 정보화가 진행된다면 나중에 통일비용은 더욱 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IT표준의 공동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적인 표준, 서비스의 표준, 장비의 표준 및 용어의 표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남북한간 동일감의 강화 및 통일비용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다.

4.2.2 남북한간 IT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의 제도화

정부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정경분리를 원칙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것은 북한측의 돌발적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기업들에게 일정정도의 신뢰성이 부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일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경협 및 IT교류를 위한 모든 조건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크게는 정경분리정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속할 수 있게,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측 기업인과 기술자들의 신변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제반의 것들이 향후 최고결정권자, 담당자, 정치환경 등에 의하여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4.2.3 도덕적 우위확보를 통한 헤게모니 선점

남한측만 봐도 사실 북한과의 교류에는 계산된 보수적 성향, 그리고 티무

나오는 대북한 경제 여론이 발생하고도 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발생되는 이 같은 조짐들은 특히 정권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점에서 북측에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남측에서는 세 가지 차원의 도덕적 헤게모니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첫째, 북한과의 관계에서 헤게모니이다. IT는 특히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 등의 개방이 수반하는 세계화가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 건전한 방법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북한의 대외 개방문제에 대한 일관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위 선점이다. 미국 부시정부의 대외정책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 특히 강경론의 득세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북한과의 교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정부는 대북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몰고 끌고 가야 한다. 여론은 중요한 것이지만, 여론에 이끌려 가면 대북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겨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미래가 요구하는 통일한국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미래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논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3 성공적인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모형

4.3.1 IT 교류의 중요성 공감 노력

현재 IT 업계에서는 남북한 IT 교류만이 다양한 정치 경제의 환경변화 속에서도 가장 꾸준히 남북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IT분야는 첫째, 남북한간 경험 가운데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지 않는 분야라는 점, 둘째, 북한에서 산업발전계획에 따라 가장 원하는 분야이며 남한 또한 현재 이후 주력 산업분야로서 앞으로 갈수록 결합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배가된 분야라고 하는 점, 셋째, IT가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분야라는 점에서 남북간 동질성의 확보에 절대 기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나아가서 대 국민들에게 IT교류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 IT는 바세나르 협약에서 이야기하듯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IT 경제협력이 궁극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하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오히려 '경협을 통한 남북한의 상

호의존성 증대는 정치적 신뢰를 회복시키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북한도 점점 경협을 통해 군사적 안보만큼 경제적 안보가 중요함을 인식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연철, 2000). IT는 현 상황에서 남북간의 가장 접합한 협력모델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3.2 남북경협을 총괄하는 정부의 직제 정비

정부에서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추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식으로 재원과 인력이 주어지는 식으로 조직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관계에서 IT 경협정책의 현실적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책에서 우선 순위에서 앞서게 만들어가는 특별정책이 필요하다.

〈표 11〉 제도적 장치의 주요내용

종류	내용
투자보장	- 남북 상호투자·허용·증진·우대(최혜국대우, 조세감면 등) 투자 보호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
이중과세	이중 과세의 우려가 있는 조세 대상, 기준, 방지방법 명시
분쟁조절	- 분쟁해결 원칙, 공동분쟁해결기구 구성·운영
청산결제	- 청산결제 대상품목, 규모, 청산대상, 결제통화, 대원제도 등
산업재산권 보호	- 특허·상표권 등 과학기술의 권리 보호 등

자료 : 김연철(2000)

즉, 본격적인 대북 투자국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충 및 재정비하고, 부처간 협의체널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적인 면에서 조직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설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장치는 큰 틀을 만들고 난 뒤, 이러한 틀 속에서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3 대북 교섭의 컨설팅 공식기구 설치

햇볕정책에서 나타나듯이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정경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민간기업의 논리보다는 정부논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기

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면, 우리가 처한 여건 상 민간의 교류 자체가 위협에 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업자들은 남북 IT 교류에 있어서 정치논리의 개입을 반대하고는 있지만, 현재와 같이 정부가 단순히 사업 승인 및 방북 허가서를 발급하는 정도에 머물러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적한다.

북측의 경우 대남 교류를 위하여 공식기구로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라고 하는 창구를 두고 있다.¹³⁾ 북한은 자신들은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남한의 개별기업을 만나고자 하고 있는데, 남한의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북측과 교류를 하고자 할 때 투자의 전망에 대하여 정보의 부족에 시달린다. 남한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식기구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의 IT현황에 대한 소소한 것까지 파악하고 점검하는 정부기구가 있어서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남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교류하는 주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남북한의 IT교류라는 것은 말만큼이나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혼란이 문제이다. 즉 아웃소싱, 인력 채용, 기술공동개발(방식), 기술전수(방식), IT상품 판매(다양한 방식), 인프라 구축 등 남한의 기업이 북한정부와 다양한 방식의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사업별·기업별 어떠한 비즈 모델이 가장 적합한 형태인지를 구체적으로 연구 컨설팅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지역의 SOC 등 건설을 기획·조언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기구는 독립된 회계처리가 가능한 공사 형태의 기구를 설립하여 ① 정보

13) 북한의 경제·무역기관은 크게 노동당과 내각 산하기관으로 크게 분리돼 있다. 노동당 산하에는 조선야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야태), 내각 일원인 무역성 산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국제전람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실질적인 대남 경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야태와 민경련이다.

조선야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94년 10월 노동당 통일선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 초기 설립단계에서 대미·대일 접촉을 관장해 왔으나 95년 남북사업에도 관여하기 시작해 98년 이후에는 사실상 대남사업을 주도하는 최고 핵심기관으로 부상했다. 원대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했으며 남북한 당국회담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장은 김용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및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부위원장은 전금진·이종혁·송호경·전경남 등의 인물이 있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남한기업들의 대북 교역 및 투자사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대남경제사업을 담당했던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의 후신인 광명성경제연합회가 개칭, 98년에 설립됐다. 산하에는 피복·김공업·농수산물 분야에서 대남경협을 전문으로 하는 광명성총회사, 전자·중공업·화학분야에서 대남경협을 전문으로 하는 삼천리총회사, 계약재배 등 주로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개성무역회사, 그리고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금강산관광총회사와 고려산업은행이 있다. 배어장과 단동에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회장은 정은업 무역성 지도관장이 겸임하고 있다. 부회장은 이창호, 서기장은 이의덕 등이 맡고 있다(이성 전자신문, 2001.09.18 특집기사).

제공 ② 사업 알선 ③ 금융 조달 등 제반 사항을 일괄 지원할 수도 있다(김연철, 2000). 아니면 민간기구 형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모든 조건을 검토하고 북한측에 가장 신뢰성을, 남한의 기업에게 기업 활동에 가장 잇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표 12〉 상공신탁관리소(구서독)와 해기회(대만)의 기능과 역할

구분	구서독의 상공신탁관리소	대만의 회기회
조직	- 인방 경제성 산하의 민간단체인 독일상공회의소 내에 설치	-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
역할	- 구동독측 경제부처와 접촉유지, 협상진행, 합의도달을 위임	-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권한 위임 받아 정부를 대신하여 교류업무 수행
주요 기능	- 기업의 경제교류 지원, 교역질서 통제	- 상호방문 관련 서류접수·발급, 투자업무 조정, 통제, 분쟁처리 등

자료 : 김연철(2000)

4.3.4 바세나르 국제협약의 장애 극복

현재 바세나르 협약은 IT부문의 남북 교류에 있어서 넘어야 할 최대의 장애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¹⁴⁾ 동 협약에서 수출통제품목은 크게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과 상용부기 등 두가지이다. 이 가운데 이중용도 품목에는 제품의 기능에 따라 신소재·소제가공·전자·컴퓨터·통신장비·레이저 센서·항법장치·해양기술·추진장치 등 9가지 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기서 IT의 경우 33개 협약 당사국에서 펜티엄급 이상 PC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을 이중용도 물자로 풀이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경우 PC를 펜티엄급이 아닌 486까지도 전략물자로 해석하고 있어 민간기구의 남북교류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¹⁵⁾ 북한지역에는 홍콩, 중국을 통하여 펜티엄급 이상의 PC가 보편적으로 반입

14) 바세나르 협약은 1996년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 미국·러시아·영국 등 33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동 협약은 1994년 코콰(COCOM)이 해체된 이후 구사회주의 국가에의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가 북한,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 테러 및 분쟁이 우려되는 4개국에 대한 수출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협약이다.

15) 현재 인천항 하역창고에는 486급 PC 2,650대가 월달 쟁 번지를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한국정보화교육추진연합이 북한 및 중국에 지원할 중고 컴퓨터인데 바세나르 협약 때문에 아무런 대책없이 지정되어 있다(전자신문, 2001.09.18).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아이러니는 PC 보내기만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IT교류협력사업 전반의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르세르 협약에서 통제품목으로 잡고 있는 많은 품목은 기술발전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허가와 불허가에 대한 판단은 회원국의 재량을 두는 것도 많다.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도 이미 세계 각국에서 일상적인 생필품과 같이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자유로운 입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남북교류를 국가간 수출입이 아닌 민족내부거래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인식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4.3.5 남북한 IT 교류와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보고서

북한 지역의 IT 산업은 현재 북한이 처한 모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카드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남한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IT 교류가 단순히 교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즉 통일된 국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이라고 하는 대 차원의 것을 지향한다고 할 때 현재 IT 교류에 대한 남한 정부의 비전 갖추어진 설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통일IT포럼은 IT분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1세기 통일한국의 IT 발전전략(가칭)'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면서 전문가들이 전략보고서를 만들어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다(전자신문, 2001.06.21). 이같은 것은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보여진다. 현재 남한에서는 경험에서 민간의 자율성의 원칙에 의하여 개별 기업들이 사업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의 초점은 사실상 기업의 이윤추구에 있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과 통일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구상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남한의 개별 기업이 추진하는 장단기적인 안목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계획될지라도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바세나르 협약 등 제약조건을 해결하는 것 등 단계적 비전이 나와야 할 것이다.

5. 요약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민간부문에서 성공적인 IT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취해야 할 역할을 구상하여 보았다. 주지하듯이 남한측에서는 이미 상당한 기업들이 북한에의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상해를 방문한 후 IT 발전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극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남북한간 IT 교류에 있어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에서 취해야 할 역할을 분석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IT 교류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
- 둘째, 남북경협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를 각 부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제를 정비할 것.
- 셋째,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민관합자, 공사 등의 건설당 공식기구를 설치하여 대북 경협 혹은 IT 투자/진출 관련업무를 전담할 것.
- 넷째, 바세나르 국제협약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과 지혜를 발휘할 것.
- 다섯째, 남북한 IT 교류와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보고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류해야 할 것

필자는 북한에서 정보화가 반드시 북한의 개방을 앞당길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보화는 원론적 차원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이미 싱가포르, 중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 철저히 차단 프로그램 등의 기술과 정책을 통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체제 붕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북한도 내적으로 전국적인 컴퓨터 통신망을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인터넷을 수용할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이 보안시설과 망까지의 정책적 차원의 준비를 끝낸다면 인터넷을 확산하는데 주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남한의 정부는 통일한국 건설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재구조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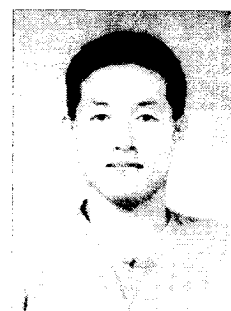
【참고문헌】

-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 김도환 외 2인, 『소프트 웨어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김유향, 북한의 정보통신부문 발전과 정보화, 통일부 신진연구자 논문, 2000.
- 김희수 외 3인,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노승준, 디지털 민족공동체 수립방안: 인식과 행동의 방향, 『지식정보화를 위한 통일 IT포럼』, 한국지역정보학회, 2001.
- 김연철, 북미관계개선이 남북교류에 미치는 영향, 통일IT포럼 2000년 11월 주제발표, 2000.
- 김연철,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0.
- 김정원, GIS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에서의 정보기술의 역할』, 통일IT포럼, 2001.
- 김주진, 북한에서의 정보통신 역할과 그 발전과정, 『북한에서의 정보기술의 역할』, 통일IT포럼, 2001.
- 박찬모, '북한의 정보기술과 남북협력', 『통일시론』, 1999.
- 염홍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평가, 『1999년 통일문제세미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9.
- 유완영, 지식경영을 통한 남북경협 투자사례, 『북한에서의 정보기술의 역할』, 통일IT포럼, 2001.
- 윤장번 외, 『정보통신 일반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 이광훈 외 7인,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 이경수, 남북협력을 통한 IT산업 발전방향, 『북한에서의 정보기술의 역할』, 통일IT포럼, 2001.
- 이남용, 남북 IT 교류와 정보화 표준, 『지식정보화를 위한 통일 IT포럼』, 한국지역정보학회, 2001.
- 이인찬 외,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이인찬, 『정보통신벤처기업의 성장환경과 지원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 이장원, 『민간주도 남북 IT교류 동향 및 시사점』,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 2001.
- 이태섭, '북한의 정보기술 산업 현황과 남북 협력 과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0.
- 정국환, 『북한의 정보화 동향분석』, 한국전산원, 1996.
- 정재형, 남북 IT교류협력 과정에서의 법률적 고찰, 『지식정보화를 위한 통일 IT포럼』, 한국지역정보학회, 2001.
- 정희성, 컴퓨터 한글자판 남북통일 시안, 통일IT포럼 2000년 10월 주제발표, 2000.
- 제성호, '남북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남북교류협력법을 중심으로', 1998.
- 최기철, '남북한 IT 산업 협력의 기대효과와 발전방안', 『통일경제』, 2001. 7-8, 2001.
- 통일부,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1998. 4, 1998.
-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998. 4, 1998.
- 통일부, 『북한의 정보화 동향』, 2000.3, 2000.
- 통일부, 『통일백서 2001』, 2001.
- 한국전산원, 『2000 한국인터넷백서』, 2000.
- 한국전산원, 『2001 국가정보화백서』, 2001.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분석

- 점진적 이행의 CGE모델 -



이 영 훈
(고려대 강사)

목 차

【 요약문 】	47
1. 서론	49
2. 분석방법론	50
3. 체제전환과 북한의 선택	55
4.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에 대한 CGE모델	70
5. 결론	77
※ 부록	78
※ 참고문헌	81

【 요약문 】

후진국, 더구나 기본적인 식량문제조차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은 경제발전 전략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이행을 전망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이행방식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행의 문제에 경제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 글은 향후 북한이 어떤 유형의 경제체제전환을 할 것인가 전망해보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개발의 수단이 될 CGE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학파의 분석방법론을 수용하여, 북한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근거가 될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이행 및 동아시아 경제발전전략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상의 문제에서 ① 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이행을 포함하여 북한의 체제이행은 경제발전전략의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② 체제이행의 원인과 전개, 그리고 성과 분석에서 기존의 유형비교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방법론의 수용 및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분석의 내용에서 ① 두 가지 유형 즉 점진적 이행과 급진적 이행의 원인과 경제적 성과의 차이는 제도학파의 이해(interest)와 효율성의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② 동구의 급진적 이행은 체제이행을 목표로 하며, 아시아국가들의 점진적 이행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도 아시아 이행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③ 아시아 이행국가들의 발전모델은 동아시아발전국가들의 발전모델을 모방·창조하였으며, 체제변화와 체제내의 변화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주도의 비교우위발전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④ 비교우위발전전략의 결과 나타나는 놀라운 경제적 성과는 국가가 시장보다 낮은 비용으로 조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동구와 아시아사회주의국가들, 동아시아발전국가들의 제도와 경제성과를 비교해 볼 때, 북한이 이해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국가들의 발전전략이다. ⑥ 그러나 수행능력의 취약성과 체제이행의 시·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발전전략(체제이행을 포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발전전략보다 더 점진적이면서 국가주도성이 강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국가주도에 의한 외자유치와 선별적 산업에의 집중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경제발전전략(박정희식의 Big Push 발전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⑦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국가주도적 발전전략 및 점진적 이행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정책의 결과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선별할 수 있는 경제모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이행기 북한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Kaleckian CGE모델은 기존의 전형적인 신고전학과 CGE 모델과 달리 국가주도적 발전전략 및 점진적 이행을 수용할 수 있는 CGE모델로서, 향후 북한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현실성이 높은 분석모델이라 할 수 있다.

1. 서론

세계경제에서 시장경제의 확산은 객관적인 역사적 흐름이다. 동시대의 북한 또한 경제주체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흐름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벗어나게 된다면 현대와 다른 시간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후진국, 더구나 기본적인 식량문제조차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이행은 단순히 체제이행만이 아니라 발전전략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이행을 전망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이행방식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행의 문제를 넘어 발전전략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는 향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발전 및 체제전환방식은 어떤 유형인지를 관별하고, 이를 고려하여 정책개발에 유용한 CGE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선택 가능한 성장전략 및 체제전환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구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체제전환의 원인 및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이들 유형중 북한이 선택가능한 모형을 추출하고, 더 나아가 이를 동아시아발전국가들의 발전전략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선택가능한 발전전략과 체제전환모형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상의 연구결과로도 도출된 발전 및 체제전환전략을 수행할 다양한 경제정책들의 시행결과를 가상현실분석(counter-factual analysis)할 수 있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개발해보고자 한다. CGE모형은 복잡한 경제현실을 몇 십 또는 몇 백개의 연립방정식으로 묘사하고 발생가능한 경제현상(정책, 제도, 사건 등의 영향 분석)들을 분석하는 모델로서, 상호작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분석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론으로 이행 및 발전에 대해서는 제도학과의 접근방식을 수용하며, CGE모형은 Post-Kaleckian 접근방식을 수용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수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도학과 경제학이론은 제도의 기능, 제도의 발생 및 변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체제이행이 곧 제도변화임을 감안하면, 체제전환의 원인 및 전개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도의 역할과 성과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로 후진국 자본주의경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Post-Kaleckian 접근방식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하는 신고전학과 접근방식보다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후진국의 경제구조를 근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2. 분석방법론

2.1 신고전학과 접근의 한계

주류경제학(신고전학과)은 시장기구를 최적의 자원배분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자유경쟁 시장질서와 다른 자원배분 수단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낳는 제약으로서 간주한다. 따라서 첫째, 그들은 체제이행이란 과도기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아직도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북한의 경제 등을 분석하기에는 적절치 않다.¹⁾ 둘째, 신고전학파의 시장중심적 분석은 과거 동아시아국가들의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²⁾ 셋째, 모델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신고전학과 CGE모델은 대체로 완전경쟁시장과 경제주체들의 최적화행위를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기(M. Noland, 이영신·신동천) 때문에, 계획과 시장경제가 병존하고, 국유와 사유가 공존하는 경제구조를 반영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그 대안으로 북한의 이행과 발전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방법론으로서 제도학파의 접근방식을, 그리고 CGE모델의 이론틀로는 Post-Kaleckian의 접근방식을 수용하고자 한다.

2.2 제도학파의 접근

2.2.1 제도의 개념과 기능

제도에 대한 규정은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여기서는 체제이행의 유형 및 그것의 경제적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제도, 제도변화, 그리고 경제성과에 초점을 둔 North의 정리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제도(institution)는 사회에 적용되는 게임의 법칙(the rule of game)

-
- 1) 급진적 이행의 J curve 효과를 고려해야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이행기 정책의 성과 면에서 신고전학파의 지방이랄 수 있는 급진적 이행(러시아와 동구)의 경제적 성과가 점진적 이행(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서 입증되고 있다.
 - 2) 물론 정부실패가 IMF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정부주도에서 시장중심주의 경제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급속한 후퇴에 따른 제도적 공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다. 인간이 고안한 제약으로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한다. 따라서 제도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어떤 것이든 인간의 교환에서의 인센티브를 구조화한다. 제도변화는 사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는 양식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역사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장기에 걸친 경제의 성과 차이는 근본적으로 제도가 발전하는 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 또한 논쟁의 여지가 없다(North, 1990).

게임의 법칙으로서의 제도는 사회구성원의 동기와 행위를 제약(constraints)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게(enabling) 한다.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의 가치 혹은 세계관으로 내재화되고 그들을 변하게(constitutive) 만든다(장하준 & P. Evans, 2000).

2.2.2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요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의 접근(efficiency-driven approach)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접근(interest based approach)방식이 그것이다.³⁾

첫째, 효율성의 접근은 제도의 최적화론(Optimality of Institution)과 이보다 발전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제도의 최적화론은 모든 제도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최적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는 새로운 제도의 형성(일례로 기업)이 이득을 증가시키기만 한다면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으로 어떤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 제도 형성에 따른 거래비용이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이론적으로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의해 비판되고 있으며(H. Simon), 현실적으로 구성원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속을 설명할 수 없다.

이보다 발전된 것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관점이다. 이들은 모든 제도변화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장기에 최적일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도의 진화에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일례로 기술체제)가 선택되는 것은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비가역적 사건' 때문이란 것이다. 경로의존성의 관점에 따르면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기존의 관행 때문에 선택되지 않게 되므로(교체비용의 과다로 인해),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이데올로기가 제도변화의 차이를 낳지 못한다는 점에서

3) Ha-Jun Chang & P. Evans(2000)의 구분을 참조하여 재정의 하였음.

행위주체의 영역이 없다(예를 들어 미국의 노예해방).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것이 행위자의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관점(the role of culture recognized)으로, 행위자는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제도는 복잡한 세계를 그들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명료하게 인식하며, 그들의 관심을 일부 가능한 영역에 한정하게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특정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도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세계관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택될 수 있다. 반면 제도는 특성의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내재화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이해에 기반한 접근으로서, J. Buchanan, A. Krueger, G. Tullock 등의 신고전파정치경제의 주장과 구조화된 이해기반 접근(structured-interest-based approach)을 들 수 있다.

신고전파정치경제의 주장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는 집단이해를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론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가 “전체”(global) 이해를 반영하며, 이해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암묵적 믿음이다. 즉 이해집단은 의사를 개선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내적인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변화를 지지하는 정치권력의 토대가 있다면 제도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접근방식이 구조화된 이해기반 접근(structured-interest-based approach)으로서, 제도의 형성과 변화는 전체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이며, 이해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사회적 제도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이해관계의 권력균형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도의 심층적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를 인식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발전시킨 견해가 문화기반의 구조화된 이해접근(culture-based structured-interest approach)이다. 이는 행위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객관적인 이해(interest)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이해에 기반한 접근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제도변화가 세계의 물적이며 동시에 상징적인 전환, 즉 권력과 이해구조의 전환일 뿐만 아니라 권력과 이해의 규정(definition)에서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2.3 Post-Kaleckian CGE모델

칼레츠키의 아이디어는 Post-Kaleckian CGE모델에서 재현되고 있다. 물론 Post-Kaleckian CGE모델은 그의 독점자본주의이론에 토대를 두고

주로 후진국 자본주의경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 모델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의 자본의 독점을 이행기의 국가의 독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국유와 사유, 가격조정과 수량조정의 병존, 그리고 정부의 산업정책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구체적으로 Post-Kaleckian CGE모델의 특징들을 순수 신고전학과 접근과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Post-Kaleckian의 접근은 신고전학과와는 반대로 저축이 투자에 조응하는 investment-driven을 가정한다. 칼레츠키는 투자결정이 저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투자와 저축의 선후관계를 보면, 투자증가→생산 및 소득증가→저축증가라는 논리이다(이영훈, 2000b). 이런 그의 사고가 모델에 반영되어 기업들은 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므로 자금부족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이행기의 사회주의경제, 발전국가의 산업·금융정책은 savings-driven 이 아닌 investment-driven 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Post-Kaleckian의 접근은 신고전학과와 달리,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의 변화가 저축과 투자간 균형을 조정한다. 유희설비가 존재할 때, 초과수요는 실질산출수준의 증가를 통해 제거된다. 반면 유희설비가 존재하지 않으면, 초과수요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강제저축(forced savings)에 의해 추가적 저축이 제공되는 만큼 실질임금을 삭감하게 한다. 이때 계층별 다양한 저축행태는 강제저축의 메카니즘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낳게 되는 주된 역할을 한다. 이처럼 그들의 모델에서는 계급과 계층을 구별하고, 분배, 성장, 인플레이션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셋째, Post-Kaleckian 접근은 케인즈처럼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을 부정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요소가격과 한계생산이 일치하더라도 유희설비 및 실업은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는 자본주의인 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이행기 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을 포함하여 이행기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유희설비와 실업이 존재하지만 그 원인이 전적으로 유효수요의 부족은 아니다.⁵⁾ 그러나 이행기 부분적인 계획경제를 감안할 때, 수요를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명령경제의 특성상 계획이 수립되면 공급은 그에 조응해야 한다. 따라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Post-Kaleckian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넷째, Post-Kaleckian 접근은 시장청산에 대한 가격조정과 수량조정을

4) 이영훈(2000a) 참조.

5) 특히 북한의 경우 정반대로 상당부분 자본부족(공급계약)에서 비롯된다.

허용한다. 대체로 농업과 원료생산 같은 1차산업의 경우는 가격조정에 의해 청산되고, 공산품의 경우는 수량조정으로 청산된다. 즉, 전자의 경우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공급에 적용하고(공급제약산업), 후자의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수요제약산업). 이러한 산업부문간 불균형 현상은 사회주의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⁶⁾, 이행기에도 이러한 현상 - 중공업을 포함한 기간산업은 국유기업 형태로 국가의 계획경제 영역 - 은 일정 기간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후자 즉 수요제약산업의 경우는 독점의 전형을 보여주며, 가격은 markup pricing으로 결정되고, markup의 크기는 독점도가 높을수록 높다.⁷⁾

다섯째, Post-Kaleckian 접근은 명목임금율과 명목환율 등과 같은 가격, 그리고 이전지출 등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화폐중립성을 부정한다. 이 경우 외적 충격은 명목변수의 가격경직성으로 인하여 실물변수에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심화시킨다. 이처럼 신고전학과 달리 가격수준은 실물부문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나 이행기의 사회주의의 인플레이션도 화폐적 현상으로만 볼 수 없으며, 실물부문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Post-Kaleckian 접근은 장기 발전을 단기균형의 연속으로 생각한다. 단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경직성과 시장청산에서의 가격의 제한된 역할을 강조하는 데 있다. 특히 이처럼 단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행기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그런데 이상의 저개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Post-Kaleckian 접근의 특징들, investment-driven, 가격경직성과 수량조정, 공급제약산업과 수요제약산업의 구분, 화폐중립성의 부정, 단기균형의 중시 등은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의 현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어떤 다른 모델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발전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조정에만 의존하는 전형적인 신고전학과 CGE모델보다 활용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6) 고전적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중공업우선주의 발전전략 ==> 사회주의경제체제 ==> 부문간 불균형 ==> 부족경제(shortage economy)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2001) 참조.

7) 북한의 경우 현재 중앙공업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중요 제품의 가격은 오로지 중앙가격제정기관에서만 정하며 지방공업기업소와 중앙공업기업소의 생활필수품, 직장에서 생산되는 공업제품들은 지방가격 제정기관에서 정하고 있다(조명철·홍익표 2000). 향후 북한에서 점진적인 자유화와 사유화가 전개된다고 하면, 중요제품을 생산하는 중앙기업소는 국유상태를 유지하고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생활품을 생산하는 중앙기업소와 지방공업소는 사유화하면서 그들의 경제활동을 자유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자는 수량조정을, 후자는 가격조정을 허용할 것이라 할 수 있다.

3. 체제전환과 북한의 선택

현행 전개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은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경제체제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며, 그 내용은 사유화, 자유화, 거시적 안정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한편 그 유형은 순서와 속도에 따라 급진적 이행과 점진적 이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전자는 러시아와 동구에서, 후자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경제체제이행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답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왜 러시아와 동구에서는 급진적 이행이,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점진적 이행이 나타났는가? 둘째, 그러한 유형차이는 어떤 경제적 성과를 낳았으며, 경제적 성과차이를 발생케 한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아시아국가의 체제이행과 동아시아발전국가 모델의 친화성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그 결과 북한의 향후 선택할 수 있는 경제발전모델은 무엇인가?

3.1 체제전환의 두 가지 길: 급진적 이행과 점진적 이행

러시아와 동구에서는 급진적 이행이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점진적 이행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전환이 경제체제의 전환에 앞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구동구권 국가들의 경제체제전환을 중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체제전환의 유형의 차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을 정치적 측면에서 구하고 있다.⁸⁾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분석은 유형비교에 그칠 뿐, 이들간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급진적 이행 전략을 택할 수는 없었는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제도학파의 분석방법론을 수용하여 이 문제에 답을 구해보기로 하자.

첫째는, 이해에 근거한 접근(interest based approach)이다. 기존의 분석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요인이 집단이해를 반영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

8)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급진적 이행을 보였던 구동구권 국가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경제체제전환 전략을 실행한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체제전환을 주도했던 정부는 그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완전한 결별을 주장하는 개혁정부였으며, 반대로 가장 점진적인 체제전환방식을 채택한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의 정부는 모두 구공산당을 계승한 정치세력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다른 한편 점진적 이행을 보였던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구 공산당 정치세력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다. 또한 단순히 지배집단의 이해에 국한하여 보아서는 부족하다. 제도변화가 물적이며 동시에 세계관의 변화를 수반하며, 규준과 상징들이 때론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미 헝가리, 폴란드 등은 부분적으로 시장기구를 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가치관의 변화가 상당 정도 진척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반계획경제 친시장경제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집권세력들은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를 선도하던 집단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선택한 급진적 이행이란 제도변화는 자신들의 집단이해만이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를 반영하며, 더 나아가 다수 집단의 이해와 세계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 지배집단들에 의해 상징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는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당대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당시 중국의 집단이해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 문제가 아니라 경제발전으로 집약되고 있다.⁹⁾

둘째, 효율성의 관점이다. 개인 또는 조직은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그들의 선택은 최적의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의 결과로서도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일단 발전경로가 특정코스로 결정되면, 네트워크외부성(network externality), 조직의 학습과정과 쟁점에 대한 역사적으로 유래된 주관적인 모델화¹⁰⁾가 그 코스를 강화한다. 경로의존성은 선택집합을 개념적으로 좁히고 의사결정을 역사적으로 연결하는 한 방법이다. 이로 인해 제도변화는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정의 궤도를 벗어날 수 없는 잠금효과(lock-in)의 양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¹¹⁾

9) “당시 우리나라 사회주의초급단계의 경제발전의 전략적 지도사상은 오로지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들을 부유하게 하며 선진국을 따라잡거나 능가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李文哲, 1991, p.214). 또한 천안문사태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0) 합리성모델에 구현된 신고전파적 해답은 만약 행위자가 처음에 잘못된 여러 모델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보의 피드백과정이 처음의 틀린 모델을 수정하고 일탈된 행위를 수정하고 남아있는 플레이어를 올바른 모델로 이끌어간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개인들은 그것되기 쉬운 주관적으로 도출한 모델에 기초해서 행동하게 되고, 정보피드백은 이러한 주관적인 모델들을 바로잡기에 불충분하다.

11) 제도가 갖는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게임참여자들의 행위를 규제하여 제도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는 점이다. 즉 제도는 일단 그것이 정착되면 잘 바뀌지 않는 안정성을 지니는 것이다. 설사 그 제도나 관행이 파레토 최적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것보다 나은 해결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Qwerty 영문 자판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안정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생물학의 진화론적 안정성 개념이 유용된다. 생물학에서 진화론적 안정성은 빈이와 자연도태의 과정에서 어느 한 종(species)이 유전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현상을 설명한다. 인류가 수백만년동안 한 유전적 변화없이 동일한 종으로

경로의존성의 관점에 따르면, 제도의 내용과 전개방식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동구와 아시아국가들의 체제전환을 분석해보기로 하자.

동구의 체제전환에서의 “역사적 사건”은 소련의 간섭포기, 이에 따른 동구 국가들의 연쇄적인 정치개혁이라 하겠다.¹²⁾ 그것은 체제변혁을 자체를 문제시한다. 내용으로 하는 체제이행의 문제가 앞서고 경제발전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즉 이러한 접근에는 발전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에 자연히 달성될 것으로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¹³⁾ 따라서 일차적으로 체제이행의 주 내용인 자유화, 사유화, 거시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가 변혁된다.¹⁴⁾

남아있는 것은 진화론적 안정성의 예이다. “진화론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에서는, 이 전략을 집단의 구성원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을 때, 만일 집단 중의 일부가 이 전략에서 이탈한다면, 이 이탈자들이 집단 내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들보다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된다”(Sugden 1989, 91). 실사 이 전략 보다 더 효율적인 다른 전략이 있음지라도, 이 전략에서 이탈하면 더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집단내의 어느 누구도 보다 효율적인 전략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진화론적으로 안정적 상태인 것이다.

12) 구동구권의 경제체제전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 변혁이었다. 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이 경제적 침체와 크고 작은 경제개혁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그 구간을 유지하고 있었다. 89년 중반 이후 시작된 동구권의 정치적 변화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짧은 기간 동안 중부와 동부유럽의 모든 국가들로 전파되었다. 동구권에서 이런 동시다발적인 정치적 변혁이 발생한 것은 동구권의 중주국이던 구소련의 외교군사노선의 변화가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것이다. 즉 80년대 중반 이후에 개혁과 개방을 앞장서서 추진하던 구소련이 동구권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인 간섭을 스스로 포기하자, 정치·군사·경제적으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던 동구권 각국 사이의 연대가 급격히 소멸되었고 이를 통해 각국에서 연쇄적으로 정치적 변혁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결국 정치 및 경제블럭으로서 동구권은 91년에 들어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상호경제원조회의”의 해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으며, 91년 말에 구소련이 최종적으로 해체됨으로써 구동구권에서는 정치, 군사, 경제 면에서 실질적인 구심점이 사라졌다. 89년 하반기부터 91년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인 변혁을 통해 구동구권 각국에서 사회주의정권이 모두 붕괴하자, 각 국가들에서는 바로소 본격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13) 이러한 입장은 발전국가에 대한 시장주의 접근과 일치한다. 시장주의적 접근은 ‘가격 바로세우기’(getting prices righ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alassa, 1981, Krueger, 1990) 거시적 여건이 안정되고 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하면, 민간의 자유주구는 잠재적 최대생산이 달성되도록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이 풍부한 경제의 경우에는 민간의 이윤극대화에 따라 노동집약적 생산기술이 선택될 것이다. 교역왜곡이 없으면, 노동집약적 상품수출이 확대되고, 총생산물은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또 노동력수요가 공급보다 빨리 증가하게 되면, 잉여노동력이 흡수되고 실질인근의 상승과 요소회소성의 변화에 따라 비교우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특별한 발전이론이 있을 수 없다. 후발도상국의 실패에서 도출된 교훈, 즉 허용가능한 수입장벽, 각각의 생산활동에 대한 비교적 균일한 인센티브, 국내의 관망에 대한 동등한 인센티브 등 대외지향적 교역체제를 구축하면 충분하다. 그밖의 문제는 전통적 비교우위론에 따라 모두 해결된다. 즉 후발도상국은 변화하는 비교우위에 따라 자신의 수출상품을 개선, 다양화하며, 비숙련 노동집약적 상품을 보다 낮은 단계의 나라들에게 넘겨주고 선진자본주의국의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Balassa, 1980, p.25~26)

중국의 체제전환에서의 “역사적 사건”은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의였다. 덩소평은 그 회의를 통해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중국의 당면과제로 제기하였다. 즉 중국사회가 당면한 대중들의 요구와 이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중국경제의 낙후성에서 파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지양하고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사구사에 입각한 사상해방, ▲개혁을 통한 생산력발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실천, ▲대외개방 등이 세부 실천과제로 결의되었다.¹⁵⁾

이러한 중국지도부의 개혁·개방에 대한 관점은 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당대회에서 덩소평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를 공식화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지도부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1개 중심(현대화와 경제발전)과 2개의 기본점(개혁·개방과 4개 원칙의 견지)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현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중심적인 과제를 위해서는 대담한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는 4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의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요약해보면, 중국은 현대화와 경제발전이 최우선과제로 명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개혁과 개방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의 속도와 폭을 4개의 기본원칙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는 익히 알고 있는 덩소평의 흑묘백묘(黑貓白貓)론이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3.2 체제전환의 두 가지 길과 경제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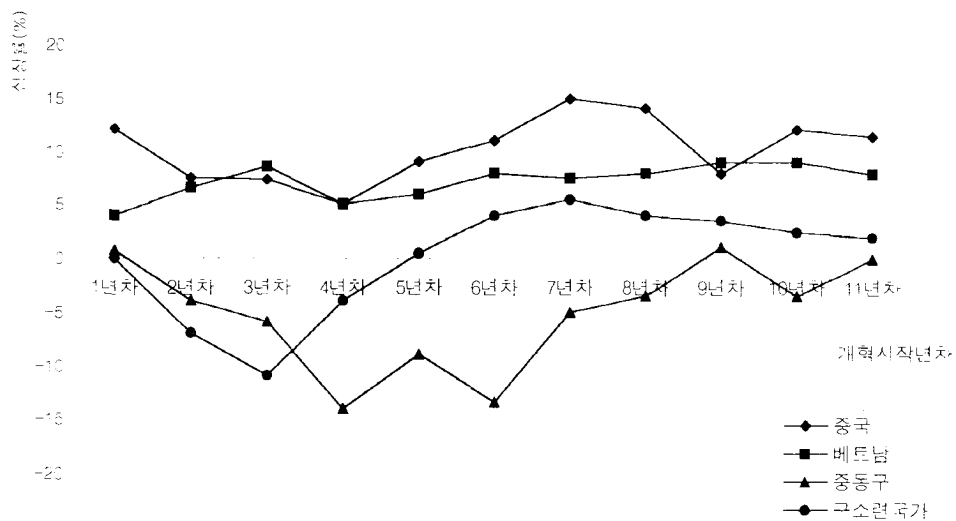
두 가지 체제전환의 경제적 성과와 그러한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발생케 한 원인에 대하여 분석해보기로 하자.

우선, 두 가지 유형의 체제전환의 경제적 성과는 일차적으로 <그림 1>의 경제성장률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14) 구체적으로 89년 아발킨(L. Abalkin)의 4단계 경제개혁안, 90년 2월 400일 프로그램¹⁾, 90년 7월 리슈코프의 경제개혁안과 90년 8월 샤탈린(Shatalin)의 500일 프로그램²⁾, 91년 10월 가이다르의 개혁안, 그리고 쿠소련과 동구에 대한 IMF의 처방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5) 그러나 덩소평은 개혁·개방이 자칫 사회주의노선의 포기로 이해되는 것을 우려하여, 79년 3월에 개최된 당의 ‘이론사업원칙연구회’에서 4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기본원칙으로 ①사회주의노선 ②부산계급의 통제 ③공산당영도 ④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 중국, 베트남, 중동구 및 구소련국가들의 체제개혁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 각 국의 개혁이 시작된 해는 다음과 같이 정했음. 중국 1979년, 베트남 1987년, 중·동구 및 구소련은 1990년.

* 자료: 정여천(2000),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5.

이처럼 러시아와 동구의 경제성장률은 아시아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를 통해 러시아와 동구의 보다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보면, 절대빈곤의 수는 1987-88년 약 700만에서 1993-95년 8,900만으로 증가, 즉 8,200만 명의 절대빈곤자가 추가된 것으로 인구의 3%에서 25%로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은 1990년대 초부터 1994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1994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1998년 8월 9.5%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체제전환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1993~95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지니계수가 50에 육박하여 라틴아메리카수준에 달하고 있다.¹⁶⁾ 요컨대 이행기의 J-curve효과를 감안하여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로 판단할 때, 점진적 이행이 급진적 이행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주로 “정책

16) B. Milanovic(1998),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During the Transition From Planned to Market Economy*, Washington, D. C.: World Bank, Michael Ellman(2000), “The Social Cost and Consequence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conomic Survey of Europe*.

적 요인”과 “초기여건”을 중심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정여천 2000; 조명철·홍익표 2000). 즉 경제적 성과는 경제정책과 초기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동구분석에서는 헝가리나 폴란드의 경제적 성과에서 입증되듯이 정책적 요인보다 초기여건의 차이가 기시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보다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실제 중부유럽, 발칸 3국, 발틱3국의 경우 양자간의 상당한 비례관계가 존재하지만, 구소련지역의 국가들의 경우는 시장경제요소의 도입 정도와 기시경제적 실적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우즈베키스탄, 벨로루시와 같이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이 가장 뒤진 것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이 적어도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절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점진적 이행의 전략과 급진적 이행전략의 선택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가보다 초기여건이 경제적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정여천 2000).¹⁷⁾

이제 경제정책과 경제적 성과간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았으므로, 초기여건과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가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기로 하자.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는 초기여건이 동구의 예에서 입증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개혁 초기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러한 개혁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나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면에서도 결코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초기여건과 경제적 성과간의 비례관계가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성립될 수 없다. 물론 초기조건을 동구와는 역으로 적용하여, 오히려 저개발국이기에 때문에 성장의 초기단계에 농촌의 과잉인구가 공업으로 유입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초기조건 결정론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구 국가들 중 비슷한 초기조건(소득수준과 산업구조)을 가진 국가들이 과연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제적 성과를 보였는가?

결론적으로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적 성과와 이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인간에는 일반화된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단지 두 가지 요인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만 도출될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성과의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분석틀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와 경제적 성과간

17) 한편 초기여건과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를 보자. 초기여건은 크게 경제적 요인(경제발전, 산업 및 무역구조, 시장경제국가와의 지리적 인접성 등)과 정치적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이 유리할수록,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될수록 경제적 성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요인이 유리한 중부유럽의 3국(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경제적 성과가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구소련 국가들(발틱3국)은 소련중심의 왜곡된 경제구조로 인해 급속한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가 미미하다. 또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과는 비례관계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의 관계를 분석한 제도학파의 분석방법론이다. 그들에게서 제도와 경제적 성과를 연결하는 주된 개념은 거래비용이다.

거래비용이란 각 경제주체가 행하는 각종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을 의미한다.¹⁸⁾ 그런데 거래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거래비용은 계약과 관련하여 정의 내려질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알아야 할 상품 및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수집비용, 이어서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계약이 준수되는가를 감독하는데 드는 비용, 또한 초기 계약이 불완전하건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서 재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 등을 총괄하여 거래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Wallis and North 1986, 95-148).

이런 거래비용의 존재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장, 화폐, 은행, 보험 등의 제도적 발전은 경제성장의 성패를 가늠하게 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체제변화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체제로의 변화이며, 그것의 성과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창출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제도의 공백을 채우는 작업은 거대한 역사적 과제가 된다.

제도의 관점에서 체제변화의 구성은 제도, 조직, 그리고 구성원의 행위간의 상호연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도와 조직 외에 구성원의 행위를 부가한 것은 제도의 기능중 구성적(constitutive) 기능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제도와 조직은 모두 인간들의 상호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 제도와 조직은 경기에서 규칙과 경기팀과의 관계와 같다”는 North의 스포츠게임의 비유를 좀더 연장해서 제도와 조직 그리고 행위주체들의 행태를 경기규칙과 경기팀 그리고 선수들의 플레이¹⁹⁾로

18) 신제도학파는 제도 및 조직의 분석을 위해 신고전학파의 합리성가정을 대체하고 거래비용이란 개념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제도, 거래비용 그리고 신고전학파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킨 경제학자는 코즈(R. Coase)이다. 코즈는 신고전학파의 효율적 시장은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즉 거래비용이 없을 때 개별 경제주체는 제도적 배합(institutional arrangement)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실제로 실증연구에 의하면 70년 미국 GNP의 45% 가량(100년 전에는 대략 25%)이 거래부분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물론 저자에 따라 거래비용의 정의는 다소 상이하지만, 거래비용이란 각 경제주체가 행하는 각종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19) “제도는 경제이론의 표준적 제약과 함께 한 사회내의 모든 기회를 결정한다. 그리고 조직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도록 만들어지는데, 이 조직은 생성, 발전하면서 제도를 고친다.”(North 1990, 1장) “제도는 (선택되는 기술과 함께) 거래비용과 전환비용을 결정하는 교환구조를 제공한다. 제도가 조정과 생산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지는 플레이어의 동기(그들의 효용함수), 환경의 복잡성 및 그 환경을 해독하고 순위를 부여하는 플레이어의 능력(측정과 집행)에 의해 결정된다”(North 1990, 4장).

보면, 개념규정에 들이는 많은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제 전환(제도변화)을 크게 제도와 조직 그리고 행위주체들의 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자.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사적 소유권의 제정과 보호, 수평적 교환을 수용할 계약법의 통과, 소유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제정, 예금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은행제도와 금융시장의 형성, 경제주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치저장과 교환수단 제공,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정규적인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공무의 창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조직의 측면에서 실제 새로운 법과 규칙을 집행하고, 그들 내에서 가능한 조직, 즉 은행, 법원, 행정부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보다 중요한 것이 새로운 시장경제 지향의 제도들에 적응을 요하는 개인과 정부의 행태이다. 행위주체들의 행태가 중시되는 이유는 비공식적 제약은 습관적 행동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살아 남기 때문이다.

이들 세 가지 요소들을 비교해보면, 관련 제도와 조직을 개혁하는 일(이것은 종종 지면 위에서 간단한 사인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은 상당한 진척을 보인 반면, 새로운 제도에 적합한 인적자본의 형성을 포함한 행위주체들의 적응은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time-consuming process)이라 하겠다. 게다가 과거 정부관료들이 관장했던 업무를 사적 중개인들이 점차 인수받아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제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하자.

체화된 인적자본의 붕괴: 어떤 제도나 본질적인 부분은 제도를 운영하고 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축적된 제도-특성(accumulated institution-specific)의 인적자본이다. 이런 인적자본은 낡은 제도의 폐지나 붕괴에 의해 거의 가치를 상실한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와 개인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체득할 때까지, 개별경제주체들의 행위간의 조정은 매우 취약해진다.²⁰⁾ 심지어 새로운 법과 행정적 질서가 낡은 것보다 훨씬 좋다 하더라도, 거래비용은 전보다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부가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North가 언급한 것처럼 문화적으로 파생된 비공식적 제약이 공식적 규칙의 변화에 따라 곧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North 1990, 5장).

새로운 제도의 신뢰성: 심지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고, 정부와 개별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제도에 익숙해지더라도, 이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 부족은 불확실성을 낳으며 다음과 같은 계약의 정보수집비용 및 집행의 문제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 첫째, 합리적 경제주체들은 보다 많은 정보수집에 따른 예상된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20) 일례로 정보의 불확실성은 경제행위의 조정을 곤란하게 하며, 이는 시장실패를 낳고 생산자들에게 초과비용을 치르게 한다(Charemza 1992, 21~24).

때까지, 정보수집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불확실성하의 학습은 순조로운 적응보다 값비싼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게 됨을 의미한다. 새로운 규칙의 학습 역시 시간을 요구한다(Poznanski 1992). 둘째, 적절한 계약과 기업법의 결여, 법률로 통과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적응, 이들 제도들이 변하거나 재심의를 거쳐야 될 지도 모른다는 판단 등으로 인해 계약의 법적 집행은 신뢰성이 없을 수 있다²¹⁾. 합리적 경제주체들은 동시적 교환을 선호할 것이며, 또는 향후 교환 가능성이 충분히 자기강제할 수 있는 단 몇 사람들에 국한될 수 있다. 이행경제에서는 파트너의 수가 반복된 경제 교환의 안정된 패턴을 갖는 시장경제에서 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²²⁾

요컨대 제도변화는 일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제도변화(체제변화)는 단순히 제도나 조직의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들의 행태의 변화까지 포함하며, 제도, 조직, 및 행위자의 행태의 변화,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연계 내지는 일관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간의 연계가 불충분할 때, 제도변화의 비용은 수익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점진적 이행이 보다 효율적이며, 그 효율성은 경제적 성과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급진적 이행을 추진했던 동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개혁을 실험해 온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에서, 그리고 점진적인 이행을 전개해 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입증된다.

3.3 점진적 이행과 동아시아발전국가모델

중국과 베트남은 동아시아발전국가들의 발전전략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우선 동아시아국가들의 눈부신 고도성장은 1978년 경제개혁을 시도하게 된 주된 요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후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린이푸 외, 2001).²³⁾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시장(그리고 다른 경제제도)보다 낮은

21) "유효하고 낮은 비용으로 계약집행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여 역사적으로 발전되는 경제와 현재 제3세계의 저개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North 1990, 7장).

22) 이는 일회성게임에서 반복적 게임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North는 계약의 집행에서 일회성게임에서 반복적 게임으로의 전환을 제3차(현대사회에서 국가를 의미) 집행을 만들어냄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경제성장과 국가의 미래마를 덧붙이고 있다.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국가없이 해결할 수 없지만 또한 우리가 국가를 잘 다룰 수가 없다.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제3자와 같이 행동하도록 할 것인가?"(North 1990, 7장).

23) 동아시아발전국가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린이푸 외에도 당시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동아시아발전국가들의 경제발전의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일례로 "중국을 대국으로

비용으로 조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따라서 경제에서 조정비용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점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제도적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발전국가들은 경제체제는 다르지만 중국과 베트남이 추진하는 경제발전모델의 모방과 창조의 실마리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국가들의 흡수능력이 전제된다면, 이행기의 모방은 창조에 비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²⁴⁾

양자간의 친화성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강하고,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에 있다.

첫째, 다른 후발자본주의국가와 구사회주의국가들과 달리, 이들 국가들은 국가가 내부의 여러 사회세력의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율성이 큰 경성국가라 할 수 있다.²⁵⁾ 이는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조건 하에 성립한 것으로서 경제발전 즉 산업화를 자기 형성과 존립의 수단으로 삼았다.

둘째,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는 경제발전이다. 신고전학파에게서는 체제이행에서 경제발전전략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도입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경제발전은 자동적으로

서 일부 첨단, 전통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산업분야에서 낙후하며 특히 기업관리가 낙후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 중국은 한국의 선진기술, 경영관리학을 학습함으로써 자기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李文哲 1991, 233)

24) 과거에는 모방비용이 주로 정보의 전달비용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혁신의 창출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모방비용은 기업이 달성한 기술적 수준(축적된 인구개발 스톡, 훈련과 조직적 관행)에 크게 의존한다. 모방비용은 기업이 관련 분야 흡수능력의 개발을 위해 이미 투자해 왔을 경우에만 낮다(OECD 1995, 2장).

25) 한국과 대만의 자율적 발전국가의 성립조건과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Wade, 1990; 이병천, 1998). 첫째, 한국과 대만에서는 개발년대 이전에 상대적으로 철저한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토지개혁 이후 전시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지주계급이 철저히 몰락했다. 둘째, 식민지배에 의한 민족자본의 성장 억제와 진재(戰災)로 인한 산업시설의 파괴로 자본의 역량이 매우 취약했다. 특히 해방 이후 주요한 자본축적 수단이었던 귀속재산의 처분, 외국원조 및 신용의 배분, 특혜적 수입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국가가 장악하여 자본가계급을 통제할 수 있었다. 셋째, 전쟁과 분단, 국제적 냉전과 그 전진기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등의 요인 때문에 국가는 이태올로지/안보적 차원에서 정치적 경쟁세력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관료중심적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주, 자본, 노동 등의 사회세력보다 우위에 섰다. 넷째, 국가는 권위주의적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지향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사회적 통합의 기본적 원리로 삼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개발과 성장은 국가적 목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수출진흥정책과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 다섯째, 차관, 외자도입 등에 의한 대외지향적 산업화가 추진되었지만 외국의 다국적 기업 등의 진출은 가능한 억제되었고 국내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활동용 수출에 한정하는 등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정책적 개입이 차단될 수 있었다.

달성되는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화 자체가 목표가 된다. 그리고 국가의 기능은 시장실패의 문제해결에 한정되며, 더욱이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기능은 더욱 제한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동아시아발전국가들의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는 경제발전에 두어졌다.

셋째, 이들이 발전전략의 방향을 추월전략과 비교우위전략²⁶⁾으로 구분해 볼 때, 양자는 모두 비교우위전략을 택하고 있다. 추월전략의 대표적인 예는 과거 중공업우선주의를 택했던 사회주의국가들과 수입대체산업전략을 택한 남미국가들이다. 반면 동아시아국가들과 아시아 이행국가들의 주도산업과 발전단계를 보면 비교우위론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린이푸 외 2000, 135)

넷째, 이들의 경제발전, 좁게는 비교우위는 국가가 주도에 의해 창출된다. 이들 발전국가의 계획경제는 '유도계획(indicative plan)'의 특성을 보인다. 즉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실시되는 지시계획(directive plan)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²⁷⁾ 시장가격기구가 정부의 정책의도에 순응하여 작동하도록 정부가 간접적으로 유도한다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⁸⁾

그러나 동아시아국가들과 아시아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는 체제내의 변화, 체제 자체의 변화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시장경제인 상태에서 국가기능의 강화를 통해 발전전략을 추진했다면, 후자는 계획경제 상태에서 시장기능의 강화를 통해 발전전략을 추진했다는 점이다.²⁹⁾

그에 따라서 국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에서는 국가가 금융을 독점하고 수출지향적 지원정책³⁰⁾과 선별

26) 이론적으로 헉셔올린에 따르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경공업, 즉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경제발전을 하던 생산과정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비싼 자본의 사용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방식에 의한 상품생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경쟁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축적률도 높아진다.

27) 존슨(C. Johnson)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모델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시장순응적 개입방식을 강조했다. 웨이드(R. Wade)는 이에 대해 발전국가의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 것이라 비판하고 국가의 시장선도 또는 국가관리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암스덴(A. Amsden) 또한 발전국가적 개입을 시장순응적이라고 본 존슨을 비판하고 국가가 가격을 전략적으로 왜곡시킨다는 의미로 시장증진적(market-augmenting) 개입패러다임을 주장했다.

28)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를 천명하고, 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공적부문에 그 중심을 두고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을 자극하였다.

29) 이러한 국가주도 성격의 차이에 대하여 발전국가론(developmental-state theory) 접근과 시장증진적 접근(market-enhancing view)을 적용해 볼 수 있다.

30) 관세, 무역업허가제, 양적 통제, 검사요구(inspection requirement), 국산화율 및 수출의무 부과, 비공식적 보호 등의 다양한 통제수단이 존재했다.

적 산업정책³¹⁾을 추진했으며, 특히 선별적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가격을 전략적으로 왜곡시켰다.³²⁾ 이를 통해 시장과 민간자본을 지원·육성하였으며,³³⁾ 노동의 참여를 배제하고 억압했다. 반면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소유의 기업과 금융을 사유화·자유화하고, 가격왜곡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근로자들의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노동과 성과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³⁴⁾

3.4 북한의 경제발전모델

향후 북한이 선택 가능한 경제발전모델은 무엇인가?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앞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참조하면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 북한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아니면 경제발전인가? 집단의 목표는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다. 집단이해는 단순히 지배집단의 이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지배집단의 이해와 일반주민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지배집단만의 이해에 국한된다면, 그 지배집단은 지배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지배는 강제와 동의에 기반하므로, 집단이해는 일반주민의 이해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현 상황에서 집단이해는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오로지 경제를

31) 전통적 보호산업과 전략적 육성산업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국가의 특혜적 신용할당 등의 간접적 지원과 중화학공업육성정책 등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 육성정책 등이 있다.

32) 국가의 경제개입은 크게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으로, 산업정책은 기능적 정책과 선별적 정책으로 구분된다.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적정성이 문제가 될 뿐이다. 하지만 산업정책은 민간부분의 생산과 투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특정 산업의 성과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정책을 인력훈련, R&D 등의 기능적·수평적 정책과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을 목표로 하는 선별적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친화적 접근은 거시경제정책과 기능적 산업정책을 인정하고 있어 시장주의적 접근과 국가중심적 접근을 구별하는 핵심적 기준이 된다.

33) 대표적인 것으로 신용할당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의 은행지배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거나(한국, 대만) 민간은행의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일본). 이러한 금융제도는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제약(financial restraint)에 기초한 신용할당을 가능케 하여 수출진흥정책과 선별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을 자신의 계획과 지도에 종속시키는 등 국가의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신용할당의 경우 특히 중요했던 것은 해외자본의 도입이었다. 이는 산업화과정에서 국내저축만으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의 경우 국가는 개발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차관을 도입했고, 그 배분과 용도에 대해 엄격히 통제했다. 이렇게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 국가는 이를 수출진흥과 선별적 산업정책에 활용했다. 즉 전략적 수출산업이나 육성산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차민적 금융을 제공했는데, 이는 수혜자에게 자본축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다(Amsden, 1989).

34) 중국의 개혁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린이푸 외(2000) 참조.

발전시켜 국민들을 부유하게 하며 더 나아가 선진국을 따라잡거나 능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경제현실을 "빈곤의 늪"(poverty trap)으로, 그리고 그 현실을 타개해 가는 북한의 발전전략을 "단번도약"(Big Push)으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³⁵⁾

북한의 과제가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아니면 경제발전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북한전문가들의 견해 - 향후 북한의 개혁은 더디지만 개방은 급진전할 것이다 - 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견해에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이 글의 논리에 따라 분석해보자. 북한의 개혁은 체제이행을 의미하며, 개방은 외자도입과 무역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 급진적으로 추진할 것은 경제발전이며, 체제이행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북한이 개방을 서두르는 것은 무엇보다 자본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자본축적은 경제발전의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은 기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한다. 기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근본적으로 요소부존의 고도화(자연자원, 노동, 자본 등의 요소부존 중 자본의 상대적 부존도 증가의 결과)의 결과이다. 자연자원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고, 노동의 증가속도는 인구증가율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국가간의 차이가 적어서 일반적으로 1~3% 정도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자본이다. 자본의 증가는 자본축적을 통하여 가능하다.

넉시(R. Nurkse)에 의하면, 후진국이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는 자발적 저축, 외자도입, 잠재실업인구의 생산력화 등이다.³⁶⁾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자발적 저축 비중은 매우 낮으며, 농업 비중이 매우 낮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잠재실업인구의 생산력화의 여지도 크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자본축적의 방법은 외자도입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보다 개방을 서두른다는 것은 경제정책의 방향이 체제

35) Big Push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박정희의 발전전략이다. 진후 빈곤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이는 산업에 집중 배분함으로써 비약적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으로서 "단번도약"(Big Push)의 논리와 그 한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2001)을 참조할 것.

36) 잠재실업에 의해 자본이 축적되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농촌에서 잠재실업을 빼냄으로써 농가의 1인당평균소득이 상승하여 농업부문 자체의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동하는 농촌의 잠재실업이 공업부문에 고용됨으로써 공업부문의 자본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넉시(R. Nurkse)와 루이스(W. A. Lewis)는 똑같이 농업실업에 의한 자본축적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넉시가 주로 전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루이스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승, 『경제발전론』, 서울, 박영사, 1977, p.123~131.

한편 체제이행의 시간은 공간에 반비례한다. 즉 체제이행의 확산속도는 국토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늦어지며, 좁으면 좁을수록 빠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에 비해 국토의 면적과 인구, 경제규모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출발은 느렸지만 그 과정은 급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수행능력의 취약성과 체제이행의 시·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발전전략(체제이행을 포함)의 추구를 위해서는 중국의 발전전략보다 더 점진적이면서 국가주도성이 강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국가주도에 의한 외자유치와 선별적 산업에의 집중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경제발전전략(박정희의 발전전략)을 선택할 것이라 전망된다.

4.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에 대한 CGE모델

4.1 모델의 구조 및 방정식체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Kaleckian CGE모델은 사회주의 점진적 이행기 경제의 특징인 국유산업과 사유산업의 병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 수량조정과 가격조정의 병존, 자본가·노동자·농민계층 간 소득격차 발생 및 저축량의 변화 등이 반영되고 있으며, 국가주도의 경제발전모델에서 볼 수 있는 국가개입의 정책변수(환율, 이윤율, 감가상각율, 임금, 정부보조, 투자율 등)들을 외생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체제이행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변수들을 다양하게 조정했을 때, 각 부분의 산출, 각 부분의 수입과 수출, 각 계층의 소득분배, 투자의 원천, 물가 등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 정량분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1) 모델의 기본구조

가격결정

이행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중가격의 존재이다. 즉 정부가 결정하는 계획가격과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시장가격의 병존이다. 중국의 경우 이중가격제(雙軌制)에 대한 개혁은 소비재가격, 생산재가격, 요소가격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모델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대체로 정부의 계획가격은 생산재 생산부분에

부과되며, markup pricing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경직적이다. 반면 시장가격은 소비재산업에 부과되며,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 신축적으로 변동한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 소비재 생산부문(경공업, 농업, 서비스)의 가격은 신축적으로서, 이들 산업의 수급의 균형은 가격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생산수단 생산부문(중공업, 건설)의 가격은 가변비용+마크업으로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경직적인데, 소비재 생산부문의 가격변동이 중간재의 가격변동을 통해 이들 가격에 전달된다. 따라서 이들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수급균형은 수량조정과 함께 가격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text{정부의 계획가격 결정 } p_i = v_i + (1 + \tau_x) \pi_i$$

이때 생산수단 생산부문의 마크업은 산출수준 변화를 반영한다고 보았고, 소비재생산부문의 마크업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행기 경제에서는 기업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내유보자금 비율을 증가시키거나 감가상각비를 사내에 유보하는 개혁이 나타난다.

$$\text{소비재부문의 마크업 } \pi_i = \frac{p_i - v_i}{1 + \tau_x}$$

$$\text{생산재부문의 마크업 } \pi_i = \pi_{i_0} (xS_i/xS_{i_0})^{\epsilon}$$

명목임금률은 물가상승의 변화를 감안하여 책정된다고 가정하였다.

$$w_i = w_{i_0} \left(\frac{p_i}{p_{i_0}} \right)^{\epsilon}$$

간접세율은 산출수준 변화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이행기 간접세는 정부수입의 가장 큰 재원이며, 축적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따라서 산출을 증가시키려면, 정부는 이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간접세율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tau_x = \tau_{x_0} (xS_i/xS_{i_0})^{\epsilon}$$

환율은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수출은 대외가격과 국내가격차로 표현되는 가격경쟁력과 대외수요로 표현되는 비가격경쟁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정부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율조정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 초기에 대폭적인 환율인상을 통해 수출을 촉진했다.

총공급과 총수요

칼레츠키는 성장률의 정점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조직적 요인에 근거하여 수요제약산업과 공급제약산업으로 구분하였고, 수급균형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있는 테일러(L. Taylor) 등의 Structuralist들의 CGE모델³⁹⁾에서는 농업부문 생산은 공급제약, 공업부문 생산은 수요제약부문의 구분하고 있다.

점진적 이행기경제에서는 공급제약이 심한 산업부문부터 사유화 자유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공급제약이 심한 농업부문부터 시작하여 경공업, 중공업의 순으로 개혁이 진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유화·자유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공급제약을 극복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기간산업, 생산재 생산산업이라 할 수 있는 중공업분야의 경우는 가장 늦게까지 국가소유로 남아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국가소유 생산단위에서는 이윤극대화의 추구보다 상부로부터 하달되는 계획의 달성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즉 이들 산업의 생산은 이윤극대화의 가정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계획(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점진적 이행기경제에서 농업과 경공업, 서비스를 공급제약산업으로, 중공업과 건설을 수요제약산업으로 포함시키기로 가정한다. 공급제약산업의 경우는 사유화·자유화된 산업으로서 시장경제의 가격조정에 의해 수급균형을 달성하게 되며, 수요제약산업의 수급균형은 정부의 계획(수요)에 의해 결정되나, 이들 산업의 수급균형은 중간재가격변동을 매개로 시장가격조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된다. 즉 가격조정과 수량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xs_i = xd_i$ 수요제약부문의 균형

$xd_i = \overline{xs}_i$ 공급제약부문의 균형

소득

이행기 경제에서는 계층분화가 나타나며, 이들간 소득격차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크게 이윤소득에 의존하는 자본가, 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농가수입에 의존하는 농민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 이들 계층간의 보조금 지급은 차이를 둘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39) L. Taylor ed(1990).

수요

각 부문 산출물에 대한 소비함수는 신고전파의 기본적인 Cobb-Douglas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1)형이나 CES(소득탄력성=1)형 효용함수와 달리 LES(Linear Expenditure System)형 효용함수를 이용하였다(식 3-9). LES함수는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가격체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 효용함수보다 일반적인 함수라 할 수 있다.⁴⁰⁾ 그러나 각 상품의 최소한의 필요소비량을 가정해야 하는데, 이를 가정하거나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별 원천투자(investment by sector of origin)는 자본계수행렬(capital coefficient matrix)을 이용하여 산업별 운용투자(investment by sector of destination)를 전환시킴으로써 구해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료제약으로 원천산업별 투자(investment by sector of origin)는 단순히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하였다.

수출수요는 가격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수출의 해외가격*환율(고정환율)은 국내가격과 같으며, 모든 수입은 경쟁적 수입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e_i = \bar{e}_i (\bar{\theta} \bar{p}_{ei}^* / p_{ei}) \varepsilon^{ei}$$

$$E = \sum p_e e_i$$

$$M = \bar{\theta} \sum (\bar{p}_m^* \mu p_{si}) + \bar{\theta} \bar{I}_m^*$$

정부재정

40) LES(Linear Expenditure System)함수는 Structuralist의 CGE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함수이다. 그것은 다음의 과정에서 도출된다. Lance Taylor(1990: 52-55).

$$\text{Max } U = \sum_{i=0}^N \gamma_i \log(cc_i - \bar{c}_i)$$

$$\text{s. t. } \sum_{i=0}^N p_i cc_i = C$$

$$cc_i = \bar{c}_i + \frac{\gamma_i}{p_i} (C - \sum_{i=0}^N p_i \bar{c}_i) \quad (\gamma_i: \text{marginal budget share})$$

$$\gamma_i = \eta_i \left(\frac{p_i cc_i}{C} \right) = \eta_i \phi_i \quad (\eta_i: \text{재화 } i \text{에 대한 소득탄력성}, \phi_i: \text{재화 } i \text{에 대한 지출비중})$$

정부수입은 주민세(소득세), 국가기업소이익금(법인세), 거래수입금(간접세), 관세 등의 조세수입과 해외원조로 구성된다.

$$T = T_h + T_f + T_x + T_m$$

$$Y_g = T + \overline{\theta R_g^*} \quad (\overline{R_g^*}: \text{해외원조})$$

한편 정부지출은 정부소비와 정부보조로 구성된다.

$$G = \sum_i p_i \overline{g_i} + B_h$$

저축과 투자

저축은 가계저축, 자본가의 저축, 정부저축, 해외저축, 감가상각으로 구성된다.

$$S = S_h + S_c + S_g + S_{for} + \sum_i d_i x s_i \quad \text{총저축}$$

가계저축은 사회주의에서 투자공급의 원천으로서 그 비중이 지극히 작았으나, 이행기경제에서는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투재재원 또한 조세에서 저축으로 점차 전환된다. 즉 투자재원이 국가의 재정에서 금융부문으로 전환된다. 이행기경제에서 사적 경제의 확대와 정부부문의 축소과정에서 점차 금융부문의 확대, 국가재정의 축소가 나타난다. 이는 생산의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반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자본회소성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저축이 증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모델에서는 주민들의 소득증가, 저축변화, 국가의 세율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형완결규칙(macro closure)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성격을 반영하여, 저축은 외생적으로 설정된 투자규모를 충족하도록 내생적으로 결정된다(investment-driven)고 보았다.

$$S = I$$

4.2 방정식체계

가격 결정

$$p_m = \bar{\theta} (1 + \tau_m) \bar{p}_m^* \quad (i=1,2, \dots, 5)$$

$$p_e = \bar{\theta} \bar{p}_e^*$$

$$pl = \sum_i \omega_i p_i$$

$$w_i = w_i \left(\frac{pl}{pl_0} \right)^{\varepsilon_w}$$

$$v_i = \sum_j \alpha_{ij} p_j + \lambda_i w_i + \mu_i p_m \quad (i, j=1,2, \dots, 5)$$

$$\tau_x = \tau_x (xs_i/xs_{i_0})^{\varepsilon_\tau}$$

$$\pi_i = \frac{p_i - v_i}{1 + \tau_x} \quad (i = 3, 4, 5)$$

$$\pi_i = \pi_i (xs_i/xs_{i_0})^{\varepsilon_\pi} \quad (i = 1, 2)$$

$$p_i = v_i + (1 + \tau_x) \pi_i \quad (i = 1, 2)$$

소득분배 및 수요

$$Y_a = v_a (\pi_1 v_1 - d_1) x_{s1}$$

$$Y_f = \sum_i (\pi_i - d_i) \cdot xs_i - Y_a$$

$$Y_c = (1 - \sigma_c)(1 - \tau_j) Y_f$$

$$Y^l = \sum_i \lambda_i w_i xs_i$$

$$Y^h = Y^l + B_h$$

$$Y_j^d = (1 - \tau_j) Y_j^h$$

$$a_i = \sum_j \alpha_{ij} xs_j \quad i, j = 1, 2, \dots, 5$$

$$C_j = (1 - \sigma_j) Y_j^d$$

$$c_{ij} = \bar{c}_{ij} + \gamma_{ij} (C_j - \sum_i p_i \bar{c}_{ij}) / p_i \quad i, j = 1, 2, \dots, 5$$

$$c_i = \sum_j c_{ij}$$

$$e_i = \bar{e}_i \left(\bar{\theta} \bar{p}_{ei}^* / p_{ei} \right) \varepsilon^{ei}$$

$$xd_i = a_i + c_i + \bar{g}_i + id_i + e_i$$

균형

$$xs_i = xd_i \quad \text{수요제약부분의 균형} \quad (i = 1, 2)$$

$$xd_i = \bar{xs}_i \quad \text{공급제약부분의 균형} \quad (i = 3, 4, 5)$$

정부부문

$$T_h = \sum_k \tau_k Y_k^h$$

$$T_f = \tau_f Y_f$$

$$T_x = \sum_i (\tau_x \pi_i xs_i)$$

$$T = T_h + T_f + T_x + T_m$$

$$Y_g = T + \bar{\theta} \bar{R}_g^* \quad (\bar{R}_g^*: \text{해외원조})$$

$$G = \sum_i p_i \bar{g}_i + B_h$$

대외무역

$$M = \bar{\theta} \sum_i (\bar{p}_m \mu_i xs_i) + \bar{\theta} \bar{I}_m^*$$

$$E = \sum_i p_e e_i$$

저축과 투자

$$S_h = \sum_k \sigma_k Y_k^d$$

$$S_c = \sigma_c Y_f$$

$$S_g = Y_g - G$$

$$S_{\text{for}} = M - E - \bar{\theta} \bar{R}_g^*$$

$$S = S_h + S_c + S_g + S_{\text{for}} + \sum_i d_i xs_i$$

$$I = \sum_i p_i id_i + \bar{\theta} \bar{I}_m^*$$

$$S = I$$

5. 결 론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상의 문제에서 ① 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이행을 포함하여 북한의 체제이행은 발전전략의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② 체제이행의 원인과 전개, 그리고 성과 분석에서 기존의 유형비교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방법론의 수용 및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분석의 내용에서 ① 점진적 이행과 급진적 이행의 원인은 제도학과의 이해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해볼 수 있으며, 그 경제성과의 차이 또한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② 동구의 급진적 이행은 체제이행을 목표로 하며, 아시아국가들의 점진적 이행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도 아시아이행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우선시 하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③ 아시아 이행국가들의 발전모델은 동아시아발전국가들의 발전모델을 모방·창조하였으며, 체제변화와 체제내의 변화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주도의 비교우위발전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④ 비교우위발전전략의 결과 나타나는 놀라운 경제적 성과는 국가가 시장보다 낮은 비용으로 조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동구와 아시아사회주의국가들, 동아시아발전국가들의 제도와 경제성과를 비교해 볼 때, 북한이 이해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국가들의 발전전략이다. ⑥ 그러나 수행능력의 취약성과 체제이행의 시·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발전전략(체제이행을 포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발전전략보다 더 점진적이면서 국가주도성이 강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국가주도에 의한 외자유치와 선별적 산업에의 집중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경제발전전략(박정희식의 Big Push발전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⑦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국가주도적 발전전략 및 점진적 이행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정책의 결과들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상대적으로 나은 결과를 선별할 수 있는 경제모델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이행기 북한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Kaleckian CGE모델은 기존의 전형적인 신고전학파CGE 모델과 달리 국가주도적 발전전략 및 점진적 이행을 수용할 수 있는 CGE모델로서, 향후 북한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현실성이 높은 분석모델이라 할 수 있다.

【 부 록 】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

- a_i : i 부문에서 생산된 중간재에 대한 수요
- B_h : 가계에 대한 정부보조
- c_i : i 부문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대한 수요
- c_{ik} : 가계 k 의 i 부문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대한 수요
- C_k : 가계 k 의 국내 소비재에 대한 총지출
- E : 총수출
- e_i : i 부문 수출
- G : 정부지출
- id_i : i 부문에서 생산된 자본에 대한 수요
- I : 총투자
- M : 총수입
- pl : 소비자물가지수
- p_i : i 부문 생산물 가격
- p_{e_i} : i 부문 생산물의 수출가격(국내통화)
- p_{m_i} : i 부문 생산에 투입된 수입투입물의 가격(국내통화)
- τ_{x_i} : i 부문의 간접세
- π_i : i 부문의 마크업
- S : 총저축
- S_f : 기업저축
- S_{for} : 해외저축
- S_g : 정부저축
- S_h : 가계저축
- T : 총조세
- T_f : 국가기업소이익금(법인세)
- T_h : 가계의 소득세
- T_x : 거래수입금(간접세)
- ti : 총투자

- tc : 총저축
 tys : 국민소득
 ys_i : i부문 부가가치
 v_i : i부문 산출물 한 단위당 가변비용
 w_i : i부문 명목임금
 xd_i : i부문에 대한 총수요
 xs_i : i부문에 대한 총공급
 Y_c : 기업의 가처분소득(사내유보이윤 + 보조금)
 Y_f : 총마크업소득(감가상각을 공제)
 Y_g : 정부수입
 Y_k^l : 가계 k의 노동소득
 Y_k^h : 가계 k의 총소득
 Y_k^d : 가계 k의 가처분소득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

- B_{hk} :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정부보조
 c_{ij} : 가계 j의 i부문 소비재의 고정소비
 d : Kalecki 성장식에서의 감가상각율
 D_i : i부문 감가상각(d_i : i부문 감가상각율)
 e_i : 기초년도 i부문 수출
 g_i : i부문 정부의 소비
 I_m : 수입자본재(외환)
 pl_0 : 기초년도 소비자물가지수
 p_e : i부문 생산물의 수출가격(외환)
 p_m : i부문 생산에 투입된 수입투입물의 수입가격(외환)
 τ_{x_i} : 기초년도 i부문의 거래세
 π_i : 기초년도 i부문의 마크업
 r : 성장률
 R_x : 정부의 이전수입(외환)
 u : Kalecki의 성장식에서의 기술적·조직적 제약의 해결

- xs_{i_0} : 기초년도 i 부문의 총산출
 ys_{0i} : 기초년도 i 부문의 부가가치
 tys_0 : 기초년도 부가가치의 합(국민소득)
 θ : 명목환율

파라미터(parameters)

- α_{ij} : 투입산출계수
 β : 명목임금결정에서의 가격탄력성의 가중치
 γ_{ik} : 가게 k 의 i 부문 소비재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δ_i : i 부문에서 생산된 자본에 대한 수요 비중
 ε_{pw_i} : i 부문 명목임금의 가격탄력성
 ε_{cw_i} : i 부문 명목임금의 소비탄력성
 ε_{I_i} : i 부문 간접세율의 가동(capacity use)률 탄력성
 ε_{π_i} : i 부문 마크업의 가동률 탄력성
 λ_i : i 부문 산출물 한 단위당 노동수요
 μ_i : i 부문 산출물 한 단위당 수입투입재 비율
 ξ_{ik} : 가게 k 의 i 부문 노동소득 비율
 σ_k : 가게 k 의 저축비율
 τ_k : 가게 k 의 소득세비율
 τ_f : 기업의 국가기업소이익금 비율
 χ_i : 국민소득중 i 부문의 구성비 $\chi_i = ys_i / tys$
 ϕ_i : i 부문 부가가치 비중 ($\phi_i = ys_i / xs_i$)
 ω_i : i 부문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m : 자본산출계수

【 참고문헌 】

- 김유향, 「북한의 정보화와 북한체제의 선택」, 『신진연구자논문집-북한실태 (II)』, 통일부, (2000)
- 린이푸 외, 한동훈·이준엽 역,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서울: 백산서당, (2001)
- 박 승, 『경제발전론』, 서울: 박영사, (1997)
- 박정동,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사례연구-중국-」,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8)
- 박제훈,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신동천, 『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서울: 세경사, (1999)
- 신동천·윤덕룡, 「통일비용과 적정투자배분」, 『경제학연구』, 제47집, 제3호, (1999)
- 신동천·이영선, 「대북투자과 북한경제: CGE모형을 이용한 분석」, 『경제학연구』, 제45집, 제2호, (1997)
- 이병천, 「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딜레마」, 『위기, 그리고 대전환』, 서울: 당대, (1998)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과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Kaleckian CGE모델분석」,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2000a)
- _____, 「사회주의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이론정립을 위한 시론: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메카니즘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9권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0b)
- _____, 「북한 경제체제 변화 및 전망: Big Push와 경제체제전환」 (통일정책연구소 주최 제3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2001)
- 정여천,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조명철·권율·이철원·김은지,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조명철·홍익표,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Amsden, A.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9)

- Aoki, Masahiko, Hyung-Ki Kim, Masahiro Okuno-Fujiwara. *The Role of Government in Asia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97)
- B. Milanovic,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During the Transition From Planned to Market Economy*, Washington, D. C.: World Bank, (1998)
- Buchanan, J. , R. Tollison, and G. Tullock ed. *Towards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Colledge Station, TX: Texas A&M Univ. Press, (1980)
- Chang, Ha-Jun and Peter Evans. "The Role of Institutions in Economic Change", (1999)
- Chang, Ha-Jun.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Macmillan, (1994)
- Chenery, Hollis & Sherman Robinson & Moshe Syrquin.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De Haan, Harry H.. "Supply versus Demand Constraints: a Post-Kaleckian CGE Model of the Polish Economy". S. I. Cohen. *Patterns of Economic Restructuring for Eastern Europe*, (1993)
- "Kaleckia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n evolutionary perspective". Robert Delorme and Kurt Dopfer ed.. *The Political Economy of Diversity: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Economic Order and Disorder*. Vermont: Edward Elga, (1994)
- Dianqing Xu. "Price Distortion in the Transition Process: A CGE Analysis of China's Case". *Economics of Planning* 26, (1993)
- Frieland, R. and R. Alford. "Bringing Society Back In: Symbols, Practices, and Institutional Contradictions", W. Powell & P. DiMaggio ed.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91)
- Hodgson, C. *Economics and Institutions*, Cambridge: Polity Press, (1993)
- Kalecki, M. "On the Method of Constructing a Perspective Plan".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I*(1992). Oxford: Clarendon Press, (1957)

- _____. "Central Price Determination as an Essential Feature of a Socialist Economy".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I: Socialism: Functioning and Long-Run Planning*(1992). Oxford: Clarendon Press, (1958)
- _____. "Problems in the Theory of Growth of a Socialist Economy".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II: Socialism: Functioning and Long-Run Planning*(1992). Oxford: Clarendon Press, (1959)
- _____.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rowth in a Socialist Economy". *Collected Works of Michal Kalecki IV: Socialism: Economic Growth and Efficiency of Investment*(1993). Oxford: Clarendon Press, (1963)
- Krueger, Anne O.. "Government Failures in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4. no. 3, (1990)
- _____. "Evaluation of Korean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199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Economy: Performance and vision for 21th century*. KDI. (1945-95)
- Michael Ellman, "The Social Cost and Consequence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conomic Survey of Europe*. (2000)
- Noland, Marcus and Sherman Robinson and Monica Scatasta. "Modeling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1996)
- Noland, Marcus. "External Economic Relation of the DPRK and Prospect for Reform", Paper produced for the conference on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Eea" sponsored by 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East Asian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31 May-1 June, (1996)
- North, D. C.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이병기 역,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6.
- OECD, *Technology and Economy*, (1992). 기술과 진화의 경제학연구회 역(1995), 『과학과 기술의 경제학』, 서울: 경문사.
- Park, Innwon. *Regional Integration Among the ASEAN Nations:*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Study*. Westport: Praeger Publishers, (1995)
- Sawyer, Malcolm C. *The Economics of Michal Kalecki*.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1985)
- Schmieding Holger. "From Plan to Market: On the Nature of the Transformation Crisis", (1993)
- Taylor, Lance. "Structuralist CGE Models". *Socially Relevant Policy Analysis: Structuralist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for the Developing World*. Cambridge: The MIT Press, (1990)
- Wade, R.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 Press, (1990)
- William, A. B. "Plan and Market in the Chinese Economy: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3, (1989)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유 승 훈
(호서대 전임강사)

목 차

【요약문】	87
1. 서론	89
2.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배경	91
3.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109
4. 남북 정보통신 협력의 향후 과제	122
5. 결론	131
※ 참고문헌	133

【 요약문 】

남북 정보통신 협력은 그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던 남북 경제협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남북경제공동체 수립으로 이어져야 하는 바,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방안의 마련은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남북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화해무드와 남북 경제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전략마련의 일환으로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북한의 정보통신정책, 북한의 신사고론,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필요성을 유도한다.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은 남북한 모두에게 윈-윈(win-win) 전략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에 관한 주요 법적 근거,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에 관한 주요 제도,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일반 현황, 남북 IT민간협력협의회의 구성, 남북합작 소프트웨어 단지 조성, 하나프로그램센터의 출범, 남북방송교류, 전자상거래 솔루션의 공급, 남북 IT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북한의 인터넷 공급 등의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미진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로써 남북 정보통신 협력의 향후 과제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남북 정보통신 협력의 난점들을 진단하는 속에서 향후 과제의 단초들을 마련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승인제도 및 절차의 간소화, 승인조건의 객관화 및 구체화, 대북한 전략기술반출 허가제도의 개선, 무단입북자의 처리 등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대북 정보통신 협력체제의 강화, 민간부문 주도의 민간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체제 구축,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 증진을 위한 재원확보, 국제외교를 통한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강화와 같은 국가정책적 측면에서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세부사업별 과제로서는 통신교류의 협력, 정보통신 인력양상 남북한 협력 방안, 남북한 소프트웨어 협력, 남북한 정보통신합작회사의 추진, 남북한 음성인식기술 공동 개발, 남북한 정보통신 용어의 통일, 남북한 통일 도메인 구성,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 만남의 추진 등을 제안한다.

북한의 열악한 통신 인프라 환경, 바세나르 협정, 북한의 체제로 인한 인력관리의 한계성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장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1.1 연구의 목적

최근의 남북한 화해무드와 남북 경제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전략마련의 일환으로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1.2 연구의 범위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배경 및 필요성,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북한의 혁명적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중시정책, 북한의 정보통신정책,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1.2 연구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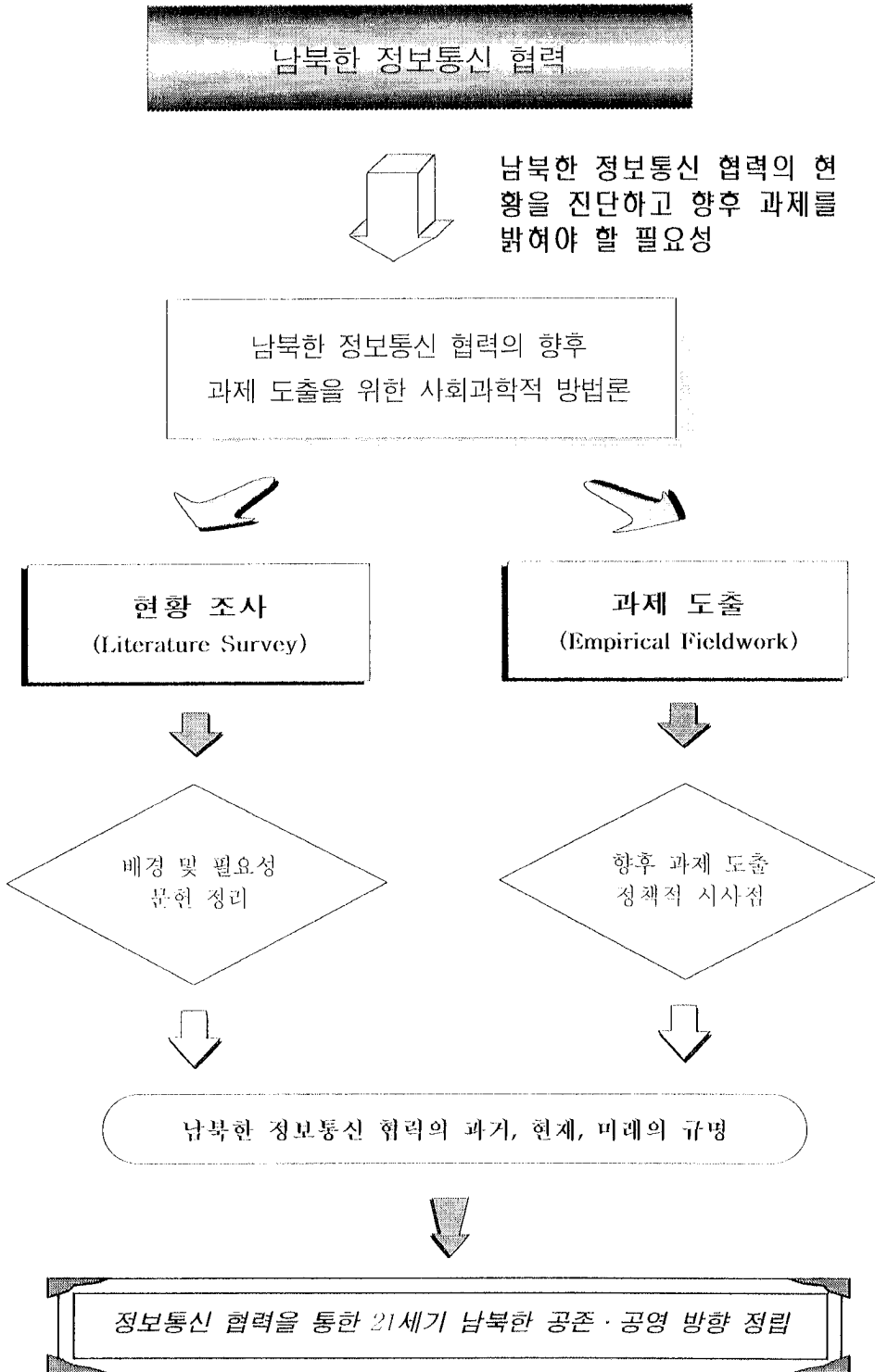
1.2.1 연구의 체계

정보통신 남북협력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북한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정책의 현황, 남북협력의 현황 등에 대한 광범위한 국내외 논의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아울러 정책적 시사점 마련을 위해 정부 및 민간의 자료를 수집, 정리 및 확인하고 연구결과를 정리한다.

1.2.2 연구의 개요

연구의 개요는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을 진단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을 소개하면서 현황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정보통신 협력을 통해 21세기 남북한 공존·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림 1> 연구의 개요



2.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배경

2.1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2.1.1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까지¹⁾

이 시기는 과학기술을 정비하는 기간으로서,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함으로써 전문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모든 기술자들을 국적에 상관없이 각 기관에 등록시키고 국영직장에 배치시켰다. 1947년에는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 강화를 위해 중앙연구소를 설치하면서, 1차 1개년 계획을 실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48년에는 일제 하에서 일본인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가동되던 각종 산업시설을 재 가동하는 데 필요한 국내 기술자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2차 1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1949년에서 1950년까지는 농업육성을 위한 2개년 계획을 세웠으며, 1952년에는 과학원이 개원되었다.

2.1.2 1950년대

공업기술의 집중 도입기로 전후복구와 자립경제 토대마련, 그리고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부흥 3개년 계획(1954~1956)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업화 기초마련과 인민의 식의주 해결을 목표로 1차 5개년 계획(1957~61)을 시행하였다. 이리하여 식민지 경제체계에서 민족 경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전쟁전의 80% 수준으로 복구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는 남한의 경제를 뛰어넘는 발전상을 보였다.

2.1.3 1960년대

중공업 중심의 기술혁신기로 사회주의 농업국에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였다. 1차 7개년 계획을 세워 생산공정의 기계화, 전기화, 자동화, 과학화를 추진, 원자력 등 최신 과학 연구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중소대립의 격화, 쿠바사태, 베트남전쟁,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 등의 악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군사우위의 경제건설과 자연재해 등으로 위 계획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3

1) 자료 : http://www.ajou.ac.kr/~sks88/stm/sympo98/sympo98_3.htm.

년간 연장시키게 된다.

2.1.4 1970년대

사회주의 체제 완성을 위해 6개년 계획을 수행하였으며 부문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이론과 응용연구를 병행하였다.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 나라들의 대북 경제지원 감소와 기술협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서방제국으로부터 설비와 기술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과도한 서방차관 도입으로 1975년부터 외채지불 연기사태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3대 기술혁명(1.중노동과 경노동의 격차해소, 2.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격차해소, 3.여성의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시도하였다.

2.1.5 1980년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초점을 두고 정치적 목표보다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었다. 2차 7개년 계획(1978~1984)과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시행하여 장비의 현대화, 자원의 자립화,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를 이루었으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그리고 협소한 시장규모로 목표량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2.1.6 1990년대

후계체제 강화를 위한 자주성을 강조하면서도 세계화 방향에 맞춰 대응하려는 전략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방식의 정치노선을 고수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1991년에는 '2000년 과학기술 발전 전망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기초과학 발전 토대구축, 첨단 과학기술 발전도모, 2000년까지 연간 국민소득의 5%를 과학기술 분야에의 투자 등이다.

2.1.7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마감하고 이른바 사회주의 강행군을 주창하는 한편, 희망의 메시지로서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내놓았다. 이는 김정일 체제의 공식 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 정책이 제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혁명적 경제정책과 과학기술 중시 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혁명적 경제정책은 1993년에 제시된 혁명적 경제전략의 내용을 축소하고 투자의 우선 순위를 다시 조정한 것으로서, 주로 농업과 동력에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먹는 문제의 해결과 생산 정상화를 위해 투자의 우선 순위를 농업 및 선행 부문 특히 동력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초체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이후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서 이른바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핵심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 강조는 급기야 2000년 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3대 기둥 수준으로까지 격상되기에 이른다. 강성대국의 3대 기둥으로서 과학기술이 사상 및 총대와 나란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향후 경제노선의 핵심 방향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북한 평양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의 선진수준에 올려 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라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발언을 방송했다. 또한 이 발언에 담긴 뜻을 설명하면서 그를 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정통한 정치가인 것으로 묘사했다. 방송은 이어 김 총비서가 최단기간 내에 북한을 선진 과학기술 강국으로 변화시킬 확고한 결심을 지니고 있다면서 “장군님은 과학기술 발전에 전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방송의 이러한 보도는 북한이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 첨단 정보기술 산업 중심의 지식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2 북한의 정보통신정책²⁾

2.2.1 통신과 체신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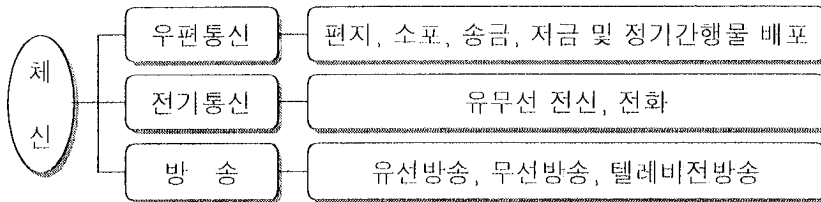
북한에서 ‘통신’이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보도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하는 통신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체신’이라고 하며, ‘체신’을 “전기, 전화, 우편 등

2) 정보통신부(2000)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을 접수, 전달하는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생산과정과 주민생활에 복무하는 경제부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체신이 통신망에 의거하여 당과 국가 경제기관들이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와 지휘를 원만히 보장해 주고, 경제부문들 간이나 공장 및 기업소 상호간,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체신은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주체사상을 널리 해설·선전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제때에 전달·침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방송도 체신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림 2〉 북한의 체신사업 분류방식



(자료 : 정보통신부(2000), p.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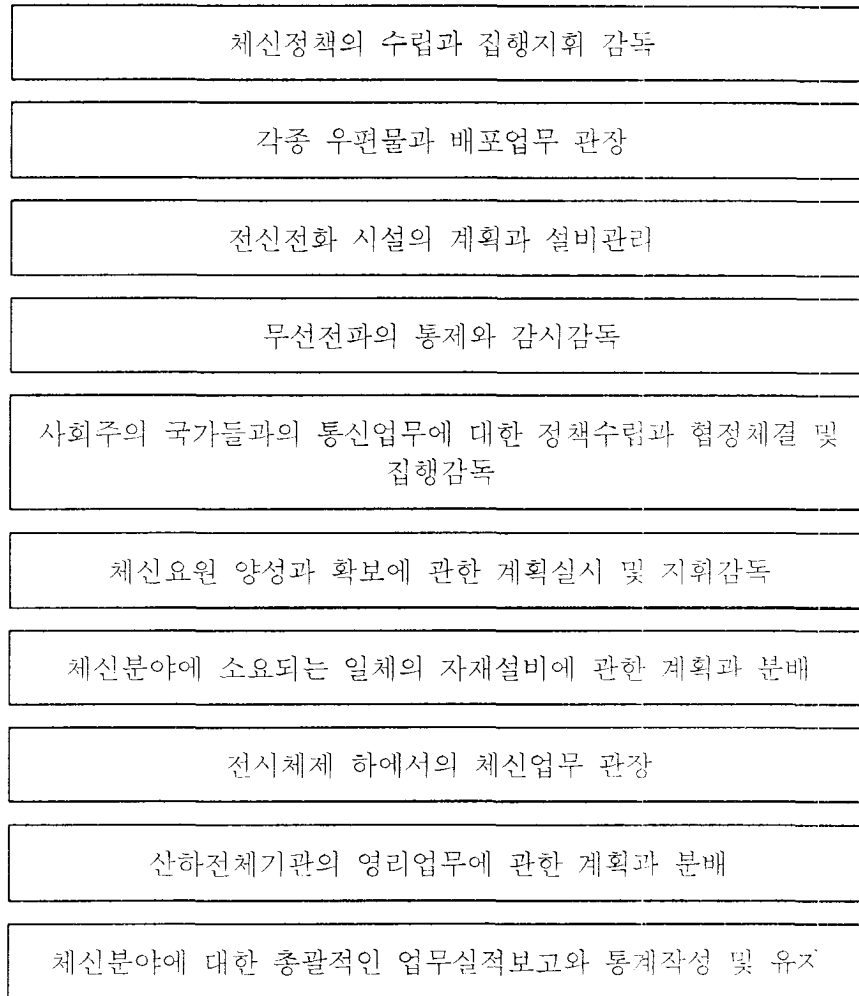
북한의 체신은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하에 체신국이 발족되면서 체계화되었다. 1948년 9월 9일 정권수립과 동시에 체신국이 체신부로 승격되어 발족되었고 1963년에는 체신업무에 대한 지휘제도와 집중화를 위하여 모든 체신기구를 통합시켜 단일운영체계를 갖게 되면서 각종 우편물 및 출판·배포업무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1967년에 체신부의 기구는 1명의 상(장관급), 3명의 부상(차관급)을 두었으며, 9개국 5개처 1개부 1개실로 조직되었고, 체신성 산하에 9개 도와 2개 직할시에 각각 체신처를 두는 한편, 3개의 체신청 직속공장과 5개의 방송국, 중앙우편국과 중앙전신전화국, 송금감시국 등 4개의 국을 두었으며, 약전 공학연구소와 자재상을 설치하였다. 체신청 산하 각도에 체신처를 두었으며, 각 도 단위의 체신처에는 각각 1개씩의 전신전화국과 우체국이 있고, 각 시·구·군에는 체신소 그리고 각 리(里)와 노동자 구간에는 체신분소가 편성되었다.

1972년 신헌법이 채택됨에 따라 내각이 정부원으로 개편되면서 행정통제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철도성과 해운 및 육운성을 통합하여 교통체신위원회로 단일화시키면서 체신성도 체신부로 개편하였으며, 1976년 12월 다시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정부원산하의 체신부로 분리되었다. 1995년 12월

현재 체신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정무원의 소속으로 있으면서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10가지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림 3〉 북한 체신부의 업무



이밖에 산하조직으로는 각 도마다 체신처를 두고 있으며, 각 도 단위의 체신처에 각각 1개씩의 전신전화국과 우체국을 두고 있다. 또한 각 시·군에는 체신소, 각 리(里)와 노동자구에는 체신분소가 편성되어 있다. 군단위의 체신소는 군내의 전신·전화, 우편, 유선방송의 증폭, 중계 등의 업무와 각 리(里) 단위의 체신분소를 지휘·감독한다.

한편, 1998년에는 신헌법의 개정으로 체신부는 '체신성'으로 다시 환원되었으며, 체신사업은 체신성을 비롯한 체신관리국과 체신소, 전신전화국, 방송국 등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2.2.2 통신정책

북한의 경우 체신청이 우편통신(편지, 소포, 송금), 전기통신(유·무선 전신, 전화), 방송(라디오, TV) 등을 관장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사용하는 '통신'이라는 용어는 유·무선 전신 및 전화를 포함하는 '전기통신'을 의미한다.

북한은 1946년 2월, 체신국을 창설하고 산하에 각 도단위별로 체신국을 설치해 총 405개소의 우편국과 8개소의 통신공무국 등을 개설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통신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1946년 평양~원산, 평양~함흥 사이에 전화가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전신·전화통신망 확충이 본격화되었으며, 1940년대 후반부터 소규모 전자통신공장을 신설하여 전자공업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47년에는 통신기계제작소를 설립하여 1948년에 자식식 교환기, 전화기 등을 제작하였다.

1954년에는 6·25전쟁으로 파괴된 시설기반 복구작업을 통해 평양과 각 도간, 시·도간의 전시전화망을 거의 복구하였으며, 1957년에는 평양에 현대식 자동전화국과 신의주에 자동전화교환기를 설치하였다.

1960년대에는 주민의 생활필수품 생산 촉구 및 지방산업 육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주민의 통신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통신의 질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평양과 각 도간에 자동전화가 도입되었으며, 시외전화기에서 교환기의 표시기 등의 기술개선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 북한은 전신·전화 부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통신수요의 해소와 방송출력의 강화 등에 주력하는 한편, 평양과 각 도 사이에 초단파통신에 대한 다중화를 추진하였다. 1973년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증계기 등 몇몇 통신기기를 자체 생산하여 각 도간 총국과 경영국, 총국과 주요기업체간의 산업전화망을 확충하였으며, 1982년에는 체신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통신과 방송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공업화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통신산업도 정체 또는 퇴보상태에 직면하였다. 특히, 통신정책의 경우 1차적으로 공적인 행정수요 충족에 목적을 두어왔기 때문에 사적인 통신부문은 더욱 낙후되게 되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내·국제통신 시설확장 및 현대화를 다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3월, 북한 노동당은 중앙위원 제6기 13차 본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1986~1993)의 일환으로 낙후된 통신시설의 현대화 방침을 세우고, 1993년까지 전화 회선수를 200만 회선으로 증대시키며 평양을 중심으로 대도시간의 현대적인 통신망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북한은 1989년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 및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등을 계기로 대내외 통신시설 확장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통신분야에서 이루어야 할 중점과제로 통신수단의 현대화를 통해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지휘통신을 최상의 수준에서 정확히 보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통신선로의 광케이블화, 통신망중계소의 증설,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작업에 착수하는 등 평양과 지방도시간 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이 추진중인 통신망 현대화사업은 아직 교환설비 등 연계설비들이 도입되지 않아, 통신회선 확장, 고속데이터전송, 화상전송 등의 광통신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네트워크 상에 문제점이 있다. 즉, 시외교환국간의 연결이 직접 이루어져 망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모여 분산되는 중앙집중구조로 되어 있어, 부족한 전송능력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는 폐단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보를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 의하여 고안된 것으로 향후 북한의 통신망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2.2.3 컴퓨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정책

북한은 1980년대부터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하드웨어산업 보다는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컴퓨터 하드웨어 수준은 32비트 컴퓨터를 조립·생산하는 정도로 자체개발 능력이 낮아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에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남한과 미미한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컴퓨터 생산기술의 자체개발을 시도해 왔으나 전문기술인력 부족과 반도체 등 관련 전자공업의 수준 미달로 시제품 수준의 저급컴퓨터를 제작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과학원 등 연구기관에서 CPU 및 IC 등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8비트급 컴퓨터를 조립 생산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분야의 낙후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 제3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1987~1993) 중 과학기술 주요목표를 전 산업의 자동화, 로봇화, 전자계산기화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더불어 UNDP 및 UNIDO와 동구권의 컴퓨터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일본, 구소련 및 동구권에 북한기술자들을 파견하

는 형태로 컴퓨터분야의 기술도입 및 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에 따라 연간 3만여 대 정도의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1980년대부터 소프트웨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결과 상당한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조선컴퓨터센터(1990)와 평양프로그램센터(1986)를 중심으로 과학원(1983), 김일성종합대학, 평성이과대학, 김책공업대학 전자계산연구소(1983), 평양전자계산기단과대학, 은별컴퓨터기술무역센터(1995)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1987~1993) 및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1988~1991) 중 산업의 전산화 추진정책에 따라 1990년부터 매년 12월에 전국 프로그램경연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1998년의 제8차 대회부터 전시회 부문이 추가되었는데, 이 대회에서는 경연에 32건, 전시회에 305건 등 총 337건의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다.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는 프로그램경연부문과 전시회부문, 성·중앙기관 컴퓨터와 전시회부문의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경연부문은 문자인식프로그램분과, 기계번역프로그램분과, 상기프로그램분과, 음성인식프로그램분과의 4개 분과, 전시부문은 체계 및 정보처리 프로그램분과, 자료기지 및 경영업무 프로그램분과, 설계프로그램분과, 의학프로그램분과, 교육 및 다매체 프로그램분과, 계산 및 조종 프로그램분과의 6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2월 8일 김정일은 제8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프로그램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프로그램기술의 대중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마다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며, 프로그램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체제를 철저히 함으로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물질적 수단들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컴퓨터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북한은 2000년 2월 21일 중앙TV를 통해 제11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를 2000년 9월 중순부터 2주일 가량 평양 3대 혁명전시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2.4 최근의 북한 정보통신정책

북한방송들은 최근 김 총비서가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컴퓨터의 시대”라고 언급한 사실을 수시로 상기시키면서 그가 모든 경제분야에 ‘컴퓨터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당 간부에게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 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과시한 사례들을 여

러 차례 소개했다. 이러한 보도는 김 총비서가 첨단 정보기술산업 중심의 지식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김 총비서의 '컴퓨터화' 구상에 따라 북한에서는 올 들어 김일성종합대학에 '기초과학센터'가 신설된 것을 비롯해 각급 고등중학교에는 '컴퓨터 수재양성반'이 설치되었다. 또한 북한 전역을 망라하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최근 한창 재건사업을 벌이고 있는 각급 공장·기업소들에서도 산업 전산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평양에 정보과학기술대학을 남북한 공동으로 설립 및 운영키로 합의한 것은 정보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빛장을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는 김 총비서의 지난 1월 중국방문 이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신사고'의 틀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북한의 신사고론

올해 초부터 북한 최대의 화두로 등장한 이른바 '신사고'론은 경제 우선정책과 과학기술 육성 및 정보기술산업에로의 '단변도약' 등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서재진(2001)에 따르면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자"는 '신사고'의 핵심은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체제개혁의 방식이 아니라 현 체제를 그대로 보존시킨 채 과학기술 육성과 정보통신산업으로 단변도약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신사고론은 첫째, 중전의 사상우선 중시에서 경제회생 우선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변경, 둘째, 추격발전 전략차원의 '단변도약', 셋째, 정보통신산업 주도의 경제회생 전략, 넷째, 대외개방의 가속화 등의 4가지로 특징지어진다. 북한당국이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 체제 유지에 사활을 걸고 사상통제와 군부 장악에 주력해 왔으나, 사상만으로 체제유지가 보장되지 않고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사상성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경제발전을 최우선에 놓고 정책을 선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 북한이 새로운 사고의 의미로 북한의 과거와 다를 뿐 아니라 어느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과도 다른, '우리식'을 자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이란 '단변도약'을 의미한다. 북한당국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국가처럼 농업 등의 전통적 산업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단변도약'도 이룩하려 하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비약적 경제개발전략

에 기초해 남북 정보통신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바, 남북 정보통신 협력이 윈-윈(win-win)모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신사고론에는 자본과 기술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정책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와 외국기업의 협력 없이 첨단산업을 통한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북한지도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정보화가 병행돼야 가능한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특성상 체제유지를 위해 정보화를 막아야 하고 반대로 경제발전을 위해 정보화를 촉진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체제유지에 우선을 둘 것이며 이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화를 대중적 수준으로 확산하지 않고 전문 인력에 한정하며, 국제인터넷망과 국내인터넷망을 분리 운영하고, 하드웨어 등의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외자유치와 경제특구 설치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

2.4.1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³⁾

작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은 제4항에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재확인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이와 같은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이다. 북한을 배제한 남한만의 정보화는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세기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정보화는 남북이 함께 하는 정보화, 민족의 정보화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남북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남한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은 남한의 70년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통신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기준으로 북한의 통신 회선은 약 120만 회선이며 전화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5회선 수준이다. 북한의 전화 통신망은 군사용과 공공 행정망부터 먼저 구축되어 왔으며, 일반 개인

3) 정보통신부(2000)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을 위한 통신망은 아직 미약하며, 일반 주민은 대개 공중전화를 이용한다.

공중전화는 평양, 함흥 등 대도시의 주요 지점과, 시·군 지역의 체신소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1996년 당시 2,720여 대 수준이었다. 통신 시설의 디지털화는 남한이 65.1%인 데 비해 북한은 4.6%밖에 되지 않는다. 통신 시스템의 경우 농어촌에는 수동식 교환기, 주요 도시에는 기계식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양에는 프랑스 알카텔이 제공한 전자식 교환기 2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시외 전화망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북한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광섬유 케이블을 통한 전국 시외 전화망의 현대화 작업이다.

현재 북한은 낙후된 통신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전화의 자동화·디지털화·전자계산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평양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간의 통신 선로를 광섬유 케이블로 교체하였다. 북한의 광케이블 공사는 유엔 개발계획(UNDP)의 협력 아래 평양시와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까지 평양-함흥, 평양-신의주, 신의주-평안북도 내 16개 시·군에 광섬유 케이블화 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평양과 주요 도시간에 설치된 광케이블의 총 연장은 1,400 km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까지 북한의 장거리 통신 회선은 대부분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북한은 1997년 말까지 평양과 70여 개 시·군간의 교환기를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외 지역과 평양간의 스위치는 아직도 수동식 교환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2.4.2 북한의 통신 수준

통신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북한의 체신성이 한국통신의 '116 시보(時報)'와 같은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통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조선 최근호(1.26)는 "체신성 약전(弱電)공학연구소에서 수자식(디지털방식) 시간알림봉사장치를 개발하여 '전국'의 수자식 전화통신망에서 시간알림봉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또 일기예보나 열차운행시간표 같은 정보서비스는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수자식 시간알림봉사장치'는 한국통신이 '116 시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교환기와는 별도로 갖추고 있는 시보 장비와 유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시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생활정보 서비스가 수동식 전화교환기에서는 불가능하고 기계식이나 전자식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취

불 때 이러한 북한의 보도는 북한 각 지역에 있던 수동식 전화교환기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남한에서는 남북한 정보통신의 호환성 확보와 인프라 통합 측면에서 북한의 전자교환기 교체 지원사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점에서 불 때 북한의 움직임은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수동식 전화 교환기는 음성만을 단순히 전달할 수 있지만 기계식·전자식 교환기는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도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북한방송에 따르면 평안남도 안주시 등 대도시에서도 수동식 전화교환기가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체신성의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이 '전국'을 대상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에서 불 때 기계식·전자식 교환기 보급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말 조선중앙텔레비전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의 수동식 교환대와 (구리)전화선을 가지고 컴퓨터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실상을 밝혔다. 민주조선이 "발광소자가 있는 현시(顯示)장치를 연결하면 눈으로 시간을 볼 수 있다"고 '수자식 시간알림봉사장치'를 소개한 대목은 전자식 교환기도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액정화면을 전화에 설치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음성이라는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 전달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식 교환기가 보편화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내 통신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계식·전자식 교환기 보급이 늘 경우 컴퓨터 통신을 비롯해 인터넷 활용도 순위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화의 자동화, 수자화, 빛섬유카벨(광섬유케이블)화, 전자계산기(컴퓨터)화의 실현'이라는 개념 아래 통신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4.3 북한의 게임개발 능력

북한에서 게임개발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한해 동안 3천여명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의 자동화 학부(전자계산학과) 등에서 연간 게임관련 인력이 3천여명이 양성돼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우 자동화 학부 이외에도 연간 700~900여명이 수학적학과(수학학과) 등에서 컴퓨터 응용기술 분야를 교육받고 있으며, 조선어문학부에서는 게임 시나리오 및 구성을 담당할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책공업대학 자동화 학부, 반도체 공작부 등에서도 연간 1천100여명이 게임개발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1] 북한의 주요 정보화기관 현황

기관명	개요
조선컴퓨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건평 2만 3천여 평방미터의 규모 목표: 경제 각 부문의 전자계산기화, 프로그램 개발기술의 발전, 컴퓨터 분야의 기술교류사업 추진
평양 프로그램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설립 - 100명 정도의 인원 - 조총련계 재일 동포가 설립·운영하는 오사카 인포메이션센터(OIC)를 모델로 삼고, 조총련계 상공인 최영빈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1986년 7월에 설립 -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제작 연구소
김일성대학 컴퓨팅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설립 - 40명의 학술진, 30명의 보조인원 - UN의 평가로는 김일성대학의 기술적 현실은 덴마크의 15년전 수준이나 MIT의 20년전 수준과 비슷함
과학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회로, 로보틱스, 전자장치 등 전체를 제어하는 실험공장 - 자동화와 전자공학의 Sub 아카데미는 5개의 연구소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전자재료(EEMRI), • 전자공학(ERI) • 기계제어(CMRI), • 컴퓨터과학(CSRI) • 자동화(A&E)
국제통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설립 - 14층(12,000m²)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층 : 공공 서비스실(텔레кс, 팩스, 전화) • 3~9층 : 장비실 • 10~14층 : 관리자 사무실
중앙 과학기술 정보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한 정보검색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으나, 15년 이상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매우 단순한 시스템 - 정보교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영어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도록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하나의 모델을 갖고 있으며 1200 보드의 다이얼업 라인으로 외부 장소 한 군데(김일성대학 중앙도서관, 가끔 사용)와만 통신

자료) http://www.ajou.ac.kr/~sks88/stm/sympo98/sympo98_6.htm을 이용하여 재구성

이들 인력은 졸업 후 최근 해주시에 설립된 해주컴퓨터센터와 평양의 평양프로그램학원, 평양정보센터, 조선컴퓨터센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남한의 자본 및 마케팅 능력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인력을 이용해 북한 내에 남북한 게임산업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조건, 보안성 등을 고려할 때 개성이 최적지로 보인다.

2.4.4 북한의 정보화기관

북한의 주요 정보화기관으로는 평양 프로그램센터, 조선컴퓨터센터, 김일성 종합대학, 북한 과학아카데미, 북한 국제통신센터, 중앙 과학기술 정보연구소, 평성 이과대학, 김책 공업종합대학, 평양 전자계산기 단과대학 등이 있다. 이 중 6개의 기관을 소개한다. 이 자료는 UN 사절단의 보고서와 각종 기사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2.4.5 평양정보대학의 설립

북한은 지난 3월 북한의 정보기술 발전을 위해 [표 2]와 같이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북한이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설립하자는 남측 제안을 수용한 것은 낙후된 정보기술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고심 어린 결정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 1월 중국방문 이후 다듬어온 '북한식 개혁·개방'의 틀이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학 명칭도 남측 파트너인 동북아 교육문화재단 측이 알아서 지으라고 할 만큼 북한은 남측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허가서에는 공동 운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백지위임'이란 의미이다. 특히 대학교수, 연구원이 평양에 머물면서 북한의 학생들을 양성함으로써 남북한이 균형적인 기술발전과 교류를 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국내 건설업체와 인력의 진출도 예상된다.

대학 설립안에 따르면 최첨단 설비가 갖춰질 이 대학은 정보통신공학, 생물공학, 상경학 등 3개 학부로 구성된다.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정보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은 물론 국제무역과 실용영어 교육을 북한 당국이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 전문가와 컴퓨터 기술인력 양성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표 2〉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의 개요

설립 목적	정보·바이오 기술, 국제무역, 영어 교육을 통한 21세기형 전문 인력 양성
위 치	평양시 통일거리 외곽
규 모	대지 100만평m, 건평 3만5천평방m, 연구동·기숙사·행정동 등 5개 동
설립 예산	총 공사비 1,000억원 (초기투자 200억원)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4월 조사·설계(상반기 중 착공) • 2002년 9월 박사원(대학원) 개교(500명) • 2003년 4월 학부 개교(2,000명)
운 영	북한·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공동운영
기 타	총장 김진경 교수, 연구원 1백명 수준

재단측은 당초 5백만달러를 투입해 북한의 경제특구인 함북 나진 선봉시에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키로 하고 1998년 1월 통일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렇지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대학 건립은 지지부진해졌고, 그 해 10월 대학설립을 주도했던 연변과기대 총장을 '간첩혐의'로 35일간 억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북측은 최근 총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뒤 '기왕에 할 바에는 평양이 좋겠다'면서 총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

2.5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⁴⁾

아직까지 남북간 교역은 상당 부분이 비거래성이며,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대북 투자사업도 정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1988년 7.7 선언 이후 공식 집계된 남북교역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꾸준히 확대·발전되어 왔으며, 지난 해 남북교역은 4억 2,5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남한은 1995년 이후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북한의 대남 무역의존도도 약 18%에 달하고

4)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에 대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인 홍순직(2001)을 주로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있다. 이를 남한의 국별 무역의존도와 비교해 보면 일본의 11.0%를 넘어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의 20.5%와 맞먹는 수준으로, 남한은 북한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 실적의 절반 이상이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비거래성(비상업적)이며, 금년초 1·2월중에는 인천~남포간 운항 선사의 갈등과 두 선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차별정책에 따른 정기선 운항 중단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교역이 약 30%나 감소하였다. 더욱이 1/4분기중 전체 교역 증가 속에서도 거래성 교역은 오히려 전년 대비 22.0%나 감소하여 아직까지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실제 상업적 교역수지는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역기간도 대부분의 업체가 1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전기·전자 및 화학공업 제품과 기계제품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화학공업 제품의 대부분은 대북 지원용 비료의 반출이며, 농림수산물과 위탁가공용 섬유물품은 여전히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북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18개의 경제협력사업 승인업체 가운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KEDO의 경수로 관련사업과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태창의 금강산 샘물사업, 평화자동차의 남포 자동차 수리·조립공장 등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수입을 내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 금강산 관광지구의 특구 및 육로 관광 허용 합의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관광사업은 여전히 채산성 악화와 현대그룹의 유동성 불안으로 유람선 운항 회수가 줄어들었으며 육로 개통 이전까지는 당분간 정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 경제협력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과 경제협력에 대한 입장 차이, 간접교역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 부담과 채산성 악화, 북한내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자유로운 통행·통신의 제약과 국제 상관행에 대한 북측의 이해 부족,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북한의 구매력과 상품의 다양성 부족, 북한 상품의 판로 확보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이유를 [표 3]과 같이 종합해 보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상당부분은 북측 당국의 경직적인 태도와 경제력 격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분단 현실과 남한 내부는 물론 주변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군사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과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 유지,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 지속적인 당국자간 회담 등을 통해 북측의 협조를 유도하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대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장애 요소는 그 대로 남았으며,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과제이다.

〈표 3〉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의 장애요인

애로 요인	부문별 세부 애로사항
높은 물류비용	비싼 운송 비용, 긴 체선 시간, 선적 및 하역항구 이용비용
경제 외적 환경	남북한 공식채널 부족, 대북 포용정책의 불확실성, 북한내 경제불안
정보 부족	정보제공센터 부재, 정부 정보공개 부족, 정부와 기업간 모임 부족
북한내 SOC 부족	통신망 구축 미비, 도로·철도·항구 등 교통시설 낙후, 전력 부족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분쟁 해결방안 부재, 기술자 상주 어려움, 투자손실 보전 미비, 인허가 승인절차 복잡, 자금 지원 제도 미비

자료 : 홍순직(2001) p.10.

2.6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필요성

2.6.1 북한의 여건

이른바 '혁명적 경제정책'은 자력更生 원칙과 절대적 노동력의 동원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유용한 방도일 수 있으나, 정상화 이후에 북한이 추구해야 할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결국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이 같은 단기적 경제 발전 전략의 한계를 전제로 향후 북한의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토대로서 제시된 목표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전 세계적 흐름을 인정하고 북한 역시 결국은 국제 사회와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 김

정일 시대의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은 당연히 디지털 시대의 정보통신산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제협력 사업도 초기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인력을 결합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테셔 빗어나 평양 또는 중국 단둥(丹東)에 정보통신단지를 조성해 국내업체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북측도 일회성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에서 장기적인 대형사업 쪽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대신해 1996년 출범한 바세나르(WASSENAAR)협정체제로 첨단기술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북측의 입장에서 남측과의 정보통신산업 교류는 기술이전과 외화획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북한 교육성은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박선희)과 평양 시내에 100만㎡ 규모의 정보과학기술대학을 공동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조속한 설립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6.2 남한의 여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속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상황이 도래하여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분야는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남북간에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사업은 좀처럼 쉽게 풀지 않고 있을뿐더러 북한의 열악한 산업 인프라, 시장의 폐쇄성, 정치적 리스크 등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북한에 진출해 있는 많은 남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서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남북경협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으며 남북한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이 있으며 이것은 바로 정보통신협력사업이다.

2.6.3 종합적 여건

정보통신분야에서 남북협력의 증대는 남북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북측은 바세나르 협정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과의 정보통신산업 교류로 기술이전과 외화획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남측은 기술력을 겸비한 북측의 저렴한 정보통신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술이 발달된 인식분야(생체, 음성, 문자 등), 다국어 번역 분야의 프로그램을 반입하

거나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아직 남북간 정보통신산업 협력이 초기 단계로 반입되는 소프트웨어도 게임 및 교육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협력이 강화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양질의 프로그램 반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 정보통신 협력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남북한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3.1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에 관한 주요 법적 근거

3.1.1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준입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도 함께 있다. 1990년 8월에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2조 4항에서는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밝힘으로써 정보통신 협력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보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우선함을 지적하고 있다.

3.1.2 남북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통상 줄여서 남북합의서라 부른다. 1991년 12월 이 합의서가 체결되었는데 남북한 관계를 국가간의 대외관계라기보다는 통일의 과정에서 준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제16조에서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조항이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3.1.3 부속합의서

합의서에 이어 1992년 9월에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도 체결하였다. 제2조에서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라고 제시하면서, 제1항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세운다"를 제2항에서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3.1.4 기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헌법', '국가보안법'에도 관련 근거가 있다.

3.2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에 관한 주요 제도

3.2.1 북한 주민접촉 승인제도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북한 주민접촉을 위해서는 접촉 15일 전에 접촉 승인신청을 한 후, 접촉안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접촉 후에는 접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접촉승인의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이나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리고 접촉목적 또는 접촉신청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북한방문 승인제도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직접 왕래는 물론 제3국을 경유한 북한방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방문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20일 전에 방문 승인신청을 한 후, 방문자 안내교육, 출입심사, 방문 결과보고 및 방문증명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최장 1년 반 내에서 적정하게 방문 유효기간이 결정되며, 요청시 1회 연장
과 수시 방북이 허용된다.

3.2.3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자는 남북교류·협력
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에 협력사업을 하
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요
구된다. 협력사업자의 승인은 사업자승인신청, 내부검토, 관계기관장과의 협
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승인신청을 위해서는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최근 3년 내 사업실적 증명서류, 최근 대차대조
표, 의향서 사본, 협력사업 개요설명서 등이 요구된다.

3.2.4 협력사업 승인제도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자는 사
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북한측 당사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시행령 제35
조에서는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
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
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가 부합될 것, 국가안정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
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보고의무사항이 있
다.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약정 및 계약의 체결, 사업착수, 분기별로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진행상황, 사업완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
지·해제, 사업추진시 분쟁 또는 사고발생,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
면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2.5 대북한 전략물자반출 승인제도

대외무역법 제21조 제1항에 "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를 받게 하

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수입증명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시행령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신고·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으로 전략물자를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북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대북한 전략기술 반출을 금지하는 것은 1996년에 발효된 미제나르협정을 그대로 원용하는 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3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일반 현황

3.3.1 개요

북한은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론’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산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방에 부정적인 군부도 남측과의 정보통신산업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 1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북간 정보통신 협력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사업의 삼성전자와 이산가족 유언전달사업의 시스젠 등 두 곳이 남북교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협력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북한 주민접촉 및 방북 승인은 리드텍코리아, 문화정보시스템, 비트컴퓨터, 하나비즈 등이며 이중 하나비즈를 비롯한 7개 업체의 관계자들은 이미 방북을 마치고 문자인식, 의료 등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을 목표로 북측과 접촉을 벌이고 있다. 또 임가공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은 IMRI(컴퓨터 부품)와 하나로 통신(신호배분기) 등으로, 하나로 통신은 현재 생산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사업의 확대로 북한산 소프트웨어 반입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작년에는 중원기업, 오피플닷컴, 삼성전자, 하나로통신 등에서 마둑, 장기 등의 게임 프로그램을 들여왔고 체질진단 프로그램인 ‘금빛 말’도 반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남북간 정보통신산업 협력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 평양 프로그램센터에서 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반입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 적극 협의되고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5]는 통신서비스 분야, [표 6]은 S/W 개발 분야, [표 7]은 정보통신기기 임가공 생산분야, [표 8]은 S/W 반입 판매분야별로 개요를 정리하고 있다.

〈표 4〉 남북한 IT협력사업 현황

업체명	사업내용	사업상대자(북한)
삼성전자	남북S/W 공동개발	조선컴퓨터센터
하나로통신	ADSL 신호분배기 임가공 공장, 애니메이션 제작	삼천리 총회사
IMRI	컴퓨터 모니터 위탁 가공사업	삼천리 총회사
온세통신	금강산 지역 통신망 구축 사업 등	금강산관광총회사
하나비즈닷컴	남북한 프로그램개발 합작회사 설립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엔트랙	3D동영상, SW전문인력 양성 등	광명성총회사
시스젠	조선인프뱅크 미러사이트 운영, 이산가족 유언 전달 사업 등	범태평양조선민족개발촉진협회
SK텔레콤	이동전화 사업 추진	
현대정보기술	개성공단 물류부문 정보시스템 통합사업	

자료 :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하였음.

〈표 5〉 통신서비스 분야의 남북한 협력

업체	사업내용	비고
한국통신	○ 경수로건설 통신 구축·운영	1997년 8월
온세통신	○ 금강산 관광통신 구축·운영	1998년 11월

자료 : 정보통신부(2001) p.1.

〈표 6〉 S/W 개발 분야의 남북한 협력

업 체	사 업 내 용	비 고
하나비즈닷컴	○ 평양정보센터와 합작으로 난동지역에 S/W공동 개발센터를 설치하여 S/W위탁개발사업기로 계약체결	2001년 2월
기가링크	○ 초고속망 시범사이트를 평양정보센터에 구축키로 하고 3월중 세부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	2001년 2월
허브메디닷컴	○ 북한이 개발한 의료관련 S/W를 남측이 요구하는 사양으로 개작하여 수입 예정	2001년 2월
규빅테크	○ CAM S/W의 공동개발 및 동구권 판매희력 추진	2001년 2월
우암닷컴	○ 영상관련 S/W공동개발 및 사이버영상면회시스템 구축 추진	2001년 2월
비트컴퓨터	○ 중장기적으로 북한내에 사이버 IT교육센터 설립	2001년 2월
현대아산	○ 금강산 IT밸리조성 추진	2001년 1월
엔트랙	○ 3D 애니메이션의 임가공 사업을 위하여 평양에 단지 건립을 위한 MOU 및 설립계약 체결	2001년 1월
IMRI	○ 일본의 조총련계 S/W개발업체인 CGS(조선은행시스템)와 합작하여 일본에 유니코텍을 설립	2000년 7월

자료 : 정보통신부(2001) p.1.

〈표 7〉 정보통신기기 임가공 생산분야의 남북한 협력

업 체	사 업 내 용	비 고
IMRI	○ 평양에서 인쇄회로기판(PCB)위탁가공 ○ 최근 컴퓨터 모니터 완제품 생산	1998년 4월
삼성전자	○ 평양에서 유선전화기 임가공 생산	2000년 5월
하나로통신	○ ADSL 신호분배기 임가공 생산 ○ 발신자표시 전화기 임가공 계약을 위한 합의서 체결	2000년 7월

자료 : 정보통신부(2001) p.2.

〈표 8〉 S/W 반입·판매분야의 남북한 협력

업 체	사 업 내 용	비 고
오피플닷컴	○ CD 「과학기술자의 벗」 반입·판매	2000년 10월
삼성전자	○ 바둑, 장기 등 CD 6종 반입·판매	2000년 11월
하나로통신	○ 묘향산 바둑 반입·판매	2000년 11월

자료 : 정보통신부(2001) p.2.

3.3.2 남북 정보통신 분야 첫 합작

정부는 지난 7월 18일 북측과 정보통신산업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는 하나비즈닷컴에 대해 남북협력사업을 승인했다. 하나비즈는 북한 평양정보센터와 함께 올해 안에 중국 단둥에 '프로그램 센터'를 설치, 국내 업체를 입주시키거나 소프트웨어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다산인터넷과 포항공대 가상현실(3D) 개발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센터'는 남북간 정보통신 협력사업 관련 첫 합영회사로 사업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20년이며 투자규모는 200만달러 정도로 하나비즈측이 전액 부담한다.

북측은 프로젝트별로 개발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운영은 박경운 금강산국제그룹 회장이 회장을 맡고 남북 양측에서 각각 1명의 부회장과 남측 종사장 1명을 둔다. 정부는 또 북한과 합작으로 유리제품 생산시설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한신·한신그라스·한신유리유한공사 등 3개사를 협력사업자로 승인했다. 이러한 승인조치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사업을 꾸준히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 차원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 9〉 남북간 전화연결 현황(2000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용도	구간	회선수	연결시기	
직접 연결	남북직접시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71. 9. 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72. 8. 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84. 12. 21	
	관문집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접사회달연락사무소간	2	71. 9. 22	
	남북직통전화	남북연락사무소간	2	92. 5. 18	
	남북한 관세통신망	대구~평양관세소(관문집 경유)		2	97. 11. 19
		대구~평양관세소(위성통신)		1	98. 2. 17
	합 계			29	

구분	용도	구간	회선수	연결시기
간접 연결	KEI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인텔셋~ 평양~신포	8	97. 8. 4
			2	2000. 7. 26
	금강산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인텔셋~ 평양~원산~온정~장전	6	98. 11. 17
			2	99. 5. 18
	평양실내종합체육관용	한국~일본IDC~인텔셋~ 평양~평양체육관	3	2000. 11. 21
합 계		21		

자료 : 통일부(2001).

3.3.3 남북통신망 연결 현황⁵⁾

남북한간의 통신망 연결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에서 쌍방 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1945년 남북 쌍방간의 전화운용이 중단된 이래 26년만에 전화연결이 이루어졌다. 이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남북조절위원장간 전화가 1회선 개통되었으며 각종 회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해 8월에는 서울과 평양간 회담지원용 전화 18회선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1975년 북측이 일방적인 직통전화 운용을 중단한 이래 일부 전화회선의 재개통과 폐쇄가 반복되다가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 인수와 관련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직통전화 전화선이 재개통되었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남북한간에는 직접 연결된 전화가 29회선이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21회선이 설치되어 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 및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3.4 남북 IT민간협력협회의 구성

민간 정보통신분야의 남북 IT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협회가 구성되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남북협력추진협의회 주도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IT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5) 공영일(2001)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T분야 민간업체들을 주축으로 한 '남북IT 민간협력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정보통신분야 관련기업과 단체의 북한 진출 방안을 협의하고 정부에 지원사항을 건의하는 등 민간차원의 정보통신분야 남북 경제협력의 창구역할을 맡는다. 협의회 설립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준비위원회를 구성, 추진되며 사무국 기능은 진흥협회에서 지원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에 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표준화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정보통신부는 민간 정보통신업체·단체가 협의회를 통해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할 경우 재정·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그 동안 정보통신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정보통신기기 임가공 생산 분야에서 북한과 개별로 접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개별 접근방식으로는 협력사업과 경험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민간협의회는 앞으로 민간차원의 경험을 추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5 세부사업별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3.5.1 남북합작 소프트웨어 단지 조성

국내 소프트웨어전문 벤처기업인 엔트랙(<http://www.ntrak.co.kr>)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광명성총회사와 평양시 통일거리에 1만평 규모의 소프트웨어산업단지를 건설중이다. 엔트랙에 따르면 '고려기술개발제작소(가칭)'로 불릴 이 단지는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1만평 부지에는 5백평 규모의 건물 8개동과 자체 발전시설이 들어서며 2천 5백명 정도의 인력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양측의 계약에는 엔트랙이 자재와 기술인력을, 광명성총회사가 부지와 건설인력 및 부대장비를 대도록 되어 있다.

주한신코퍼레이션(대표이사 최신묵), 주토미스정보통신(대표이사 진영돈), 한국능률협회인증원(대표이사 박종화), 주글로벌웹(대표이사 송훈재), 주버추얼산업개발원(대표이사 김정호), 주알에프티앤씨(대표이사 박문수) 등 6개 입주업체 대표는 평양을 방문,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광명성총회사와 실무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인 한신코퍼레이션과 온라인 게임콘텐츠 업체인 글로벌웹은 북한의 정보통신 인력을 활용, 각각 애니메이션과 게임, 인터넷 소프트웨어 제작 및 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무선 네트워크 장비 업체 알에프티앤씨는 북한내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을, 토미스정보통신은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게임 개발 및 운영, 그래픽 디자인, 콘텐츠제작 교육 사업을 각각 담당할 계획이다. 컴퓨터 관련기기 제작 업체인 비추얼산업개발원은 북측과 소프트 및 하드웨어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은 IT단지 입주 업체와 이미 북한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엔트랙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프로그램 개발업체뿐 아니라 전기·전자 부품생산업체들도 입주시킬 예정이다. 한편 엔트랙은 북한에서 구두를 입가공 생산 중인 엘칸도와 손잡고 지난해 10월부터 소프트웨어 인력양성기관인 '평양 소프트웨어 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3.5.2 하나프로그램센터의 출범

지난 5월 10일 첫 남북 정보기술업체인 '하나프로그램센터'의 출범은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 땅에서 첫 합작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남북의 우수한 정보기술이 하나로 합치져 세계를 겨냥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요람을 만들었다는 데에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프로그램센터는 북측의 기술인원 10명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북한의 기술요원들은 압록강이 내려다보이는 단둥시 개발구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남측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게 되며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는 합작의 남측 주체사인 하나비즈가 총괄한다.

하나프로그램센터는 주요사업으로 남측 정보기술업체의 주문을 받아 북측 인력이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제작하며, 이를 상품화해 국내는 물론 대만·중국 등 아시아와 유럽·러시아·미국 등 국제시장을 겨냥해 판매에 나선다는 북안이다. 이 과정에서 남측은 자본과 기술, 북측은 우수한 기술과 저렴한 노동력(한달 약 100달러)을 각각 제공하게 된다.

현재 참가를 신청한 업체 중 엘엔아이소프트가 북측의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 등 동시통역기와 번역기 개발에 나서기로 북측과 단둥 현지에서 합의했다. 또 교육 솔루션업체인 에드피아는 영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북측의 프로그래머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윈스코퍼레이션은 북측의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시디 제작 등으로 상품화에 나서기로 기본합의가 된 상태이며, 에스케이텔레콤이 대기업으로서도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나비즈는 국내의 신규 정보기술업체가 북쪽을 방문해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나프로그램센터는 현재 임대한 150평 건물을 중심으로 입주업체가 많아질 경우 주변으로 임대를 확대해 이후 '정보기술밸리'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단둥은 동북3성, 내몽고, 러시아, 유럽으로 통하는 교통상 천혜의 입지를 갖고 있으며, 경의선이 통과할 경우 육상과 해상에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3.5.3 남북방송교류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 6월 4일 남북방송교류정책을 수립,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남북방송교류추진위는 남북 방송정책당국간 창구 개설 및 교류협력 추진, 남북방송교류협력을 위한 제반 정책 협의, 남북방송 상호간 개방을 목표로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공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담당국장 3명, 국회전문위원 2명, 언론계 4명, 학계,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 인사 4명 등 14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참여자를 정리하면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명단

소속 및 직위	성명
방송위 정책국장	황부근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조건식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유진통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노준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문위원	임홍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
KBS 정책기획센터장 겸 남북교류협력기획단장	홍성규
MBC 정책기획실장	김강정
MBC 보도본부장	이남기
한국신문방송편집 위원장(조선일보 논설위원)	고학용
세종연구소 소장	백종천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정춘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이사장	성유보
21세기 언론연구소 연구원	임수경

3.5.4 전자상거래 솔루션의 공급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인 티지코프(대표 정정태 · www.tgcorp.com)가 북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을 공급한다. 티지코프는 최근 중국 단둥에서 북한측과 회동을 갖고 평양정보센터가 전자상거래 서비스망 구축시 지불결제 솔루션 제공, 북한 내 로열티 마케팅 서비스 및 솔루션 구축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로열티 마케팅이란 고객관계 관리(e-CRM) 기반의 고객분석 컨설팅과 공동프로모션을 이용해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주는 기법이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2개월 내에 평양이나 중국 단둥에서 실무자급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양과 단둥을 방문했을 때 북측이 남북 정보통신 협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번 합의로 북한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3.5.5 남북 정보통신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포항공대가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평양정보센터'(PIC)와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하는 등 공동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공대는 중국 단둥에서 평양정보센터 최주식 총사장(소장)과 남북 정보통신 기술 교류를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창덕'워드프로세서를 개발한 평양정보센터는 컴퓨터 보조설계, 일본어 자동 기계번역 등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등 '조선컴퓨터센터'와 쌍벽을 이루는 북한 최고의 정보통신 연구기관이다. 양측은 이를 위해 우선 가장 공통의 관심사인 가상현실 분야를 선정해 공동 연구하기로 했으며 점차 다른 분야로 공동 연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3.5.6 북한의 인터넷 공급

비트컴퓨터가 5년간 위성인터넷장비를 북한에 독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북한에 인터넷이 도입된다. 비트컴퓨터는 북한과 조선컴퓨터센터 내에 위성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비트컴퓨터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북한측에 위성 인터넷 장비를 독점 공급하기로 했으며, 남한의 장비 업체들을 선정해 시스템 구축작업을 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북한은 그동안 전화를 이용, 중국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해왔으며 본격적인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성 인터넷을 이용해 비트컴퓨터는 북한의 정보통신 관계자들에게 사이버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www.bitcampus.com)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비트컴퓨터는 조선컴퓨터센터 내에 남북한 민간교류를 위한 전용선인 '비트핫라인(BitHotLine :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Hot Line)'을 구축하기로 북한측과 합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컴퓨터센터 내에 PC방을 설치,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e-메일을 점검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트컴퓨터는 정보통신 서적을 북한측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정보통신 강대국이 되려면 인터넷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북한이 인터넷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5.7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올해 안에 국산상표가 부착된 무선랜 장비가 북한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북한 현지공장에서 국산 무선랜 장비가 생산돼 북한과 중국 시장에 수출될 계획이다. 무선랜전문 벤처업체인 알에프티엔씨(www.rftnc.com)는 국산 무선랜 브리지인 'RF-LINK11MP+' 시리즈 수출을 위해 북한 민속경제협력연합회 광명성총회사에 장비 풀세트를 테스트용으로 제공했다. 북한내 장비생산을 위해 광명성총회사와 합의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현지에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초고속망 구축 장비로 공급하기 위해 국산 무선랜 장비가 테스트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북한이 도입하려는 무선랜 장비는 초고속 인터넷 접속용이 아니라 건물 사이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다. 무선랜 인프라 구축에 관해 북한과 포괄적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광명성총회사측이 무선랜 도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3.5.8 애니메이션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남북 협력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인 '딩가가' 지난 4월에 완성되었다. 하나로통신의 멀티미디어 종합포털사이트인 하나넷(www.hananet.net)은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남북 합작 3D 애니메이션인 '게으른 고양이 딩가'를 완성했다. 세계적 수준의 남한 애니메이션 기술과 북한의 높은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것을 완성하였으며 향후 애니메이션 캐릭터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3.5.9 정보통신 학문의 교류

남북간에 정보통신 학문의 교류도 시작되고 있다. 북한 정보통신학자들이 국내 통신학술지에 실명으로 논문을 기고해 남북간 학술교류의 첫 장을 열었다. 북한 교육성 산하의 프로그램센터에 근무하는 김명규씨의 '조선글자부호의 표준안에 대하여'란 논문을 비롯한 4편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리뷰(Telecommunications Review)'의 올해 첫 번째 호에 실렸다. 텔레커뮤니케이션 리뷰지는 2개월에 한번 발행하는 학술지로 국내 통신산업 및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들이 쓰는 논문으로 구성된다. 이 학술지는 이들 북한학자들의 4편의 논문을 포함시켜 '북한 정보통신기술의 현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특집을 꾸민 것이다.

김명규씨는 자신의 논문에서 우리 글의 부호화 작업에서 나타나는 원론적 문제를 거론하고 남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방안을 제시했다. 또 조선컴퓨터센터의 유동학씨와 서이식씨는 각각 '조선글 문자인식 체계'와 '조선글 폰트의 조립식 생성방식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북한 국가과학원 전자계산기 연구소의 조석제, 강석량, 권오일씨는 '조선 글 자소배정과 타진 속도모의 평가체계에 대하여'라는 공동논문을 실었다.

4. 남북 정보통신 협력의 향후 과제

4.1 남북 정보통신 협력의 난점

남북간 정보통신 협력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지난 4월 3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남북 정보통신 협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테러국으로 지정되면 전자·통신기술 등을 포함한 군수물자 기술은 물론 군용이나 민간용으로 이중 사용이 가능한 물자에 대해서도 반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민감한 전자·통신기술의 교류가 불가피한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이 자칫 소강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분쟁국가나 테러국가에 대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협정'의 경우 486급 이상 컴퓨터의 반출도 제한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사업이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삼성전자, 하나로통신, 미트컴퓨터, 하나미즈 등 국내 기업들은 이미 북한과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등 정보통신 협력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적극 뛰어들

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히 비트컴퓨터는 북한에 정보통신 특구 조성을 추진중이고 삼성전자는 CDMA진출을 구상하고 있어 정보통신분야 협력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테러지원국으로 또다시 지정되면서 남북한 통신물자 교류나 통신장비 개발에 제한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북한이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치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경제회생의 기회를 잃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 미국의 '북 테러국 지정'은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대북 강경화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테러국 해제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북한이 테러국으로 지정되면서 군수물자 기술의 반입, 군용 및 민간용으로 이중 사용가능한 품목 및 기술의 반입, 국제금융 기관의 대북 차관공여, 북한 내 법인 및 개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사실상 금지돼 왔다. 따라서 남북 정보통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첨단 기술제품의 대북 수출 제한이 완화되는 등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2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 정보통신 협력의 장려보다는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화해협력에 기초한 햇볕정책, 작년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남북 정보통신 교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4.2.1 승인제도 및 절차의 간소화

현행법은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주민접촉 승인, 북한방문 승인,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4개 항목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주민 접촉시 5개, 북한방문시 5개, 협력사업자 신청시 7개, 협력사업 신청시 5개 등 총 22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목적에 합당한 서류만을 제출하면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청서류 제출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승인취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접촉 승인에는 15일이나 안내교육기간까지 소요된다. 북한방문 승인에는 20일이나 안내교육기간이, 협력사업자 승인에는 30일에서 50일이, 협력사업 승인에는

30일에서 50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전까지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승인기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북한주민 접촉승인 유효기간은 최장 3년, 북한방문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로 현행법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사업의 성격에 맞게 승인 유효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투자가 성과로 나타나는 데 일종의 시차가 존재하는 정보통신 협력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가 요구된다.

4.2.2 승인조건의 객관화 및 구체화

현재의 승인제도에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승인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법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협력교류에 있어서 몇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국가보안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당성'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북교류협력법과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금지한 국가보안법이 충돌할 여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남북 정보통신 협력사업을 지해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승인조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4.2.3 대북한 전략기술만출 허가제도의 개선

최근 마세나르 체제에서는 정보통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무형기술의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지원에 대한 통제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북한 전략기술만출 통제관련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범부처적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대북한 전략물자통제에 마세나르체제의 통제지침 및 리스트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통제물자의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4.2.4 기타

최근 정부는 승인 없이 북한을 다녀온 대북 정보통신업체인 (주)시스젠의 권오홍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하고, 이 업체의 남북 협력사 업자 및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정부에서는 시스젠의 권대표가 지난 4월 정부에 북한방문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

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업체의 행위는 남북간 교류협력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시스젠은 북한과 전자상거래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이산가족들이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 등 가족에게 인터넷 상에서 유언이나 보비명을 남길 수 있는 사이트 개설, 범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조선인포뱅크'의 국내 미러사이트 개설 등을 추진,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4.3 국가정책적 측면에서의 과제

4.3.1 대북 정보통신 협력체제의 강화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와 신뢰구축에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남북협력추진협의회는 현재와 같이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 민간업체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남북IT민간협력협의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각별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대북 경제사절단에 계속해서 정보통신분야 인사를 포함해야 하며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방북하여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것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부가 올해 추진중인 이산가족 영상전화 만남을 비롯하여,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연계한 남북간 광케이블 설치, 개성공단 첨단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등 정보통신분야 남북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방침은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대북 사업시 생산설비의 반출 제한을 없앤 것도 고무적인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유희설비를 북한에 무상으로 반출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회 반출 규모를 100만 달러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도 사라졌다. 투자규모도 과거 500만~1000만 달러였지만 현재는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4.3.2 민간부문 주도의 민관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체제 구축

남북한의 다른 협력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분야 또한 협력주체는 민간부문이 되고 정부는 환경조성과 같은 지원역할에 치중해야 한다. 정보

통신관련 민간기업은 남북한 상호 호혜적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공동체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 및 주변국 등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통해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환경을 개선하면서 정보통신관련 민간기업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동일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해 다수의 남한 기업과 합의해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기업들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부문과 정부가 협력하여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에 대한 종합계획, 프로그램 및 협력시기, 협력분야, 협력형태별로 세부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유력한 조치이다. 일종의 '남북정보통신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합의된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을 위해 '남북정보통신장관회의'를 정례화하여 남북한 정보통신 실태조사의 공동수행, 남북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남북한 정보통신 기술자들의 상호방문, 북한 정보통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추진, 북한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4.3.3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 증진을 위한 재원확보

현재 북한에 대규모 정보통신 단지나 학교 건립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자체 재원이 부족해 투자자 유치에 위한 세밀한 사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이동통신회사들이 정보통신부에 납부할 IMT-2000 출연금을 일부 활용하는 등 남북정보통신 협력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한 가지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기금과 [표 11]에 제시된 기존의 해외투자관련 금융지원제도 등을 통해 대북 정보통신 진출기업들에게 투자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11〉 대북 정보통신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제도

지원기관	자금종류	지 원 내 용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 사업자금 대출	- 소요자금의 60% 이내(중소기업은 70% 이내) - 금리 : 연 6% - 기간 : 8년 이내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금 운용관리

지원기관	자금종류	지 원 내 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	- 소요자금의 90%이내 - 금리 : 고정금리 또는 LIBOR 금리 - 기간 : 10년 이내
외환은행	외화대출	- 소요자금의 70% 이내 - 금리 : LIBOR 금리 연동 - 기간 : 10년 이내
외교통상부	대외경제 협력기금	- 금리 : 연 5~6% 이내 - 기간 : 15년 이내 - 재정경제부에서 기금운용관리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금지원 업무의 실무담당

자료 : 공영일(2001) p.464.

아울러,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 증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도록 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남북한 국방비의 일부를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화해협력을 굳건히 하면서 평화정착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4.3.4 국제외교를 통한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강화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전방위외교를 통한 서방 선진국들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국제기구에서의 가입 노력은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에 있어서 바람직한 환경조성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테러지원국 리스트 제외, 바세나르 통제 완화 등 미국의 대북 제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4 세부사업별 과제

4.4.1 통신교류의 협력

남북한 주민간의 의사소통과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신망을 연결하고 통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통신 협력은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며, 그 자체로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산업 부문의 교역과 합작투자 대상 사업으로도 된다.

통신 교류·협력이 상호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통일 이전 동서독간의 통신 교류는 1972년 기본조약의 체결 이후 급속도로 진전되어 통일 직전인 1987년 현재에는 연간 서신 교환 6,000만 통, 전화 통화 3,200만 통화의 실적을 올렸고, 이와는 별도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이러한 통신 교류·협력이 분단이 유발한 정치체제 및 사회구조의 상이점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

4.4.2 정보통신 인력양성 남북한 협력 방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동향을 고려할 때 지금이 남한의 북한 진출 적기입과 동시에 북한은 정보통신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두 가지 요소인 대규모 전문인력 확보와 유동성 제한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적의 투자지라 볼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정보통신산업 진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만약 중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의 어느 한 국가가 우리 기업보다 앞서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에 진출할 경우 북한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잃게 될 것이다.

최고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 응용기술력을 갖고 있는 남측의 기술과 전문인력의 유동성이 없는 북측의 탄탄한 인력운영이 결합할 경우 남북한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개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4.4.3 남북한 소프트웨어 협력

북한에서는 아직 해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제한돼 있으며 지적재산권 개념이 부족한 것도 남북 경제협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북한의 전문인력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프트웨어 남북한 공동개발 진행 과정에서 북측 전문인력이 높은 책임의식을 보여줬

고, 당초 우려와 달리 고품질의 기술을 확인하였다. 특히 시스템 통합, 게임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국이나 제3국에서는 연구인력이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데 비해 북한은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이 안정돼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남북 소프트웨어 협력은 일종의 '윈-윈 모형'이 된다.

4.4.4 남북한 정보통신합작회사의 지속적 추진

남북한 정보통신합작회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기가링크, 큐빅테크, 허브메디닷컴 등 업체는 평양정보센터내 초고속망 시범구축, 컴퓨터 응용 제조(CAM) 체계의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북한 소프트웨어의 남한지역 판매 등의 부대사업을 각각 맡아서 추진중이다. 이 합작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진행 외에도 합작사 설립 이후 북한 내에서 추가 사업 추진시 단동지역 입주기업 우대, 윈도, 맥운영체계 등 운영체계의 한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등 8개 항목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4.5 남북한 음성인식기술 공동 개발

남북한 음성인식기술의 공동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러시아 시장 공동진출도 모색되고 있다. 남북한이 차세대 정보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음성인식기술(SIT)을 공동으로 개발해 중국과 러시아시장에 진출한다. 또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남북한 음성인식 관련 기술진과 양국 언어표준관련 학자들이 중국에서 회의를 열어 음성인식기술공동연구와 양측 언어표준화 문제, 외국시장 공동진출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북한 최고의 컴퓨터연구센터인 조선컴퓨터센터와 김일성대, 김책공대의 관련 전문가 15명이, 남측에서는 원광대 음성과학공동연구소 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사전 협의를 통해 음성인식기술의 핵심인 음성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우선 북한측이 보유하고 있는 음성인식데이터베이스를 남측이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현재 남한의 SIT업체는 평균 1백~2백명의 음성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북한은 1천~1만명의 음성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이미 중국과 러시아어 음성번역시스템 기술이 상당부분 개발돼 있는 점을 고려, 남북한 업체가 협력해 중국과 러시아 시장 공동진출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4.4.6 남북간 정보통신 용어의 통일

남북간에 정보통신 분야의 용어통일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컴퓨터 키보드와 용어통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컴퓨터 교재가 대부분 일본에서 오다보니 일본식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남측의 컴퓨터 관련서적을 많이 사용하게 한다면 각종 용어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북측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교재를 사용한다면 각종 용어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북한에 컴퓨터 관련서적 보내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4.4.7 남북한 통일 도메인 구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북한간 통일도메인 관련 논의가 정보통신분야 남북합작회사 설립 합의를 계기로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월 방북했다가 귀국한 남북IT교류 민간대표단에 포함돼 북한에 다녀 온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사무총장에 따르면 남북합작사 설립 계약서의 향후 협력과제 중 하나로 통일도메인 설정 문제가 명기됐다.

지금까지 남한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로부터 .kr 국가도메인을 부여받아 사용해 왔지만 원칙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지 않아 온 북한은 .kp라는 별도의 국가도메인을 부여받았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분야에 뒤지지 않으려고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인터넷 관련 기술을 축적해 온 상태이다.

남북합작사의 계약 당사자로 나선 평양정보센터 등 중요 연구시설에는 자체 기술로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 언제라도 인터넷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준비돼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나서기 위해서는 도메인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하지만 북한이 전과는 다르게 정보통신 분야의 각종 협력사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사이버교류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다. 현재 통일도메인 후보로는 .ko가 올라 있으나 북한측과의 도메인관련 협의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4.4.8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 만남의 추진

이산가족의 문제는 남북한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남북간에 구축된 인터넷망을 통해 이산가족의 이메일 교환 또는 영상전화를 통한 만남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북한은 인터넷을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 자

유사조 침투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일반주민들의 접근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의 교류를 위해 인터넷망을 제한적으로 구축할 경우, 북한 내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한 정부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⁶⁾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에서는 1998년 9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이산가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통해 나머지 반쪽인 북한의 자료를 구축한 후, 이를 남한의 자료와 연동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비용과 인력을 남한에서 부담한다면 보다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남북 정보통신 협력은 그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있었던 남북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제협력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positive-sum) 게임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남북경제공동체 수립으로 이어져야 하는 바,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방안의 마련은 남북한의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남북한은 관계 개선을 위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은 쌍방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바, 정보통신 협력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상호주의이며, '남북공동경제생활권'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 지역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디지털시대의 능동적 대처가 필수적인 바,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방안 마련은 북한 지역을 남한 지역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21세기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의 중요 거점으로서 재건시키자는 '통일한국 그랜드 플랜'의 중요한 부분 전략이 될 것이다.

이산가족 영상전화 만남의 추진, 경수로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 및 확충 지원, 통신서비스 및 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남북표준화를 위한 민간중심의 기술협약기구 발족 추진, 정보통신 전문인력 교류 및 상품 공동생산 등 협력 증진 방안 마련 등, 정부에서도 올해의 정보통신정책 방향의 하나로 정보통신분야 남북협력사업 발굴을 중요하게 꼽고 있는 바, 본 연구결과는 이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북한이 동반자로서 21세기 지식기반 정보사회로의 진

6) 김상택·공영일(2000), pp.178~199.

입을 도모하면서 남한의 진입을 보다 가속화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 후 남북한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 방안의 강구는 남북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한반도 전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열악한 통신 인프라 현황, 바세나르 협정, 북한의 체제로 인한 인력관리의 한계성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공영일, 김상택,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 통신통합』, 인터넷과 북한, 경남대학교 극동경제연구소, 2000년.
- 공영일, 『통신사업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1권, 제3호, pp.455~466, 2001년.
- 김규륜, 『논평 :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통신 통합』, 인터넷과 북한, 경남대학교 극동경제연구소, 2000년.
- 김근식, 『김정일시대의 북한경제정책변화: 혁명적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중시 정책』, 통일경제, 2000년 1-2월호, pp.36~45.
- 김상택, 공영일, 『북한의 정보화와 남북통신통합』, 인터넷과 북한, 경남대학교 극동경제연구소, pp.147~203, 2000년.
- 김연철, 『북한 정보화의 국제적 변수 : 바세나르 체제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북한, 경남대학교 극동경제연구소, 2000년.
- 김용희, 『토론논문 : 북한 정보화의 국제적 변수 - 바세나르 체제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북한, 경남대학교 극동경제연구소, 2000년.
- 김유향, 『북한의 정보통신부문 발전과 정보화』, 2000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부, 2000년.
- 박찬모, 『북한의 정보화 동향과 우리의 과제』, 정보화저널, 제4권, 제14호, 한국전산원, 1997년.
- 방영철, 『북한의 IT산업현황과 남북협력방안』, 제53회 한국정보화사회 지도자포럼, 도산아카데미연구원, 2001년 3월.
- 산업연구원,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21세기 준비 연구보고서 시리즈 2000-12)』, 연구보고서, 2000년 3월.
- 산업연구원, 『북한의 산업기술 : 정보통신산업』, 연구보고서, 1999년 1월.
- 서재진, 『북한 신사고의 의도 및 내용 분석』, 통일연구원, 2001년.
- 양문수, 『북한의 '비약적' 경제개발전략과 남북 IT협력 전망』, LG주간경제, pp.10~15, LG경제연구원, 2001년 3월.
- 이봉호, 『디지털시대와 북한 지역 경제 재건 전략』, 통일경제, 통권 제57호, pp.94~101, 현대경제연구원, 1999년 9월.
- 이태섭, 『북한의 정보기술 산업 현황과 남북 협력 과제』, 통일경제, 통권

- 제68호, pp.12~20, 현대경제연구원, 2000년 8월.
- 정보통신부, 『2000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년.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남북협력 현황』, 보도자료, 2001년 2월.
- 최기철, 『남북한 IT산업 협력의 기대효과와 발전 방안』, 통일경제, 2001년 7-9호, pp.32~41.
- 최영식,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정책자료 2001-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년 7월.
- 통일부, 『2001 통일백서』, 2001년.
- 현대경제연구원, 『김정일시대의 북한경제 정책변화 : 혁명적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중시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73호, pp.36~45, 2001년 1월.
- 홍순식, 『남북 경협 성과 회고 : 평가와 과제』, 통일경제, 통권 2001년 7-8월호, pp.8~15, 현대경제연구원.

시범적 통일로서의 통일특구에 관한 연구



조 진 철
(미국 포틀랜드대학 방문교수)

목 차

【요약문】	137
1. 서론	139
2. 전환기의 북한도시 및 지역계획	142
3. 기존 통일논의와 그 한계	157
4. 다른 나라들의 예	161
5. 통일특구의 입지와 공간구조	167
6. 결론	179
※ 참고문헌	183

【 요약문 】

6·15회담은 분명 남북의 화해 협력에 역사적 전환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남북관계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수사어에 비교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호간에 신뢰가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소강상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본 연구는 서로간의 신뢰회복으로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증대 방안이 현재의 소강상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남북교류와 궁극적 통일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구체적 틀은 통일특구로 이 논문에서 제안되어 진다. 통일특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남북한 학생과 연구진이 장기적으로 교류하는 장소이다. 이것은 현재의 일회적이고 국내외 정치 상황에 민감한 통일문화교류를 제한적이지만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서로 다른 남북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시초가 되리라 보며, 통일문화의 시범적 예로써 기능 하리라 가정한다.

통일특구의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북한의 발전 방향을 도시 및 지역계획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북한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분석되며, 북한이 현재 특구위주의 정책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남한의 남북교류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특구위주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경제특구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이 현재 체제유지와 경제증진과의 갈등에 있다고 보고 갈등의 폭을 줄여 나가기 위한 사회·문화적 통일특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후에 경제협력을 더 한층 증가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둘째로, 남북한 통일논의의 허와 실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상층부 위주 내지 정부 주도적 통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문제점으로 일회성, 추상성, 일괄타결식 한계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아래로부터의 통일논의가 중요하다고 보며, 구체적 대안으로서 통일특구가 아래로부터의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로, 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례 분석을 통해 두 나라의 통일이 외적통일에 지나지 않았고, 내적통일이 진정으로 분단국가의 통일에 있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두 나라의 외적통일 역시 사회·문화적 교류 없이는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며 남북한이 지금부터라도 사회·문화적 교류에 더 한층 힘을 쏟아 다가오는 제도적 통일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갈등의 근간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넷째로, 통일특구의 입지적 조건들이 토론된다. 남북접경지역은 그 가장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며 서부, 중부, 동부 접경지역의 입지들이 분석된다. 또 한편 통일특구의 가능한 원칙과 그에 따른 개념적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장래의 실제적 건설을 위한 기초로 삼는다.

본 연구는 그 간의 학자들이나 일반 대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아이디어를 보다 더 현실화 할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고, 다소 비진할지라도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가 됨으로써 구체적인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폭을 확대하리라 본다.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바는 통일논의에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사회·문화교류가 일회적인 행사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독일과 예멘의 외적 통일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보다는 다소 성급한 미완의 통일로 해석되어 진다. 내적 통일의 달성은 교류협력 초기부터 합목적적인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간-통일특구-을 창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주장이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지난 6. 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화해협력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전환점은 학계의 각 분야에 있어 북한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북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가져오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 및 지역계획에 있어 연구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고, 몇몇 통일 도시계획 관련 학회지들은 북한 관련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이 대부분 현재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가장 필요한 통일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다. 특히 통일과정 중에 필요한 민간교류협력에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다.

그런 와중에서도 몇몇 도시 및 지역계획 또는 국토계획에 관한 연구들은 교류협력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곽영훈 박사의 평화시 개념과 국토연구원의 남북한 교류협력 거점 조성에 관한 연구들이 그것이다.¹⁾ 평화시 개념은 이미 1989년에 곽영훈 박사에게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며, 당시의 정황보다는 6·15회담이 성사된 현재의 시점에서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새롭게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1999년에 국토연구원에 의해 제시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거점 조성 역시 지금에 와서 재구성되어 질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국토계획적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은 접경지역에서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해 「평화의 섬 구상」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진다. 이들 연구들에 있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분석의 미비이며 단순히 아이디어의 제시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겠다.

하지만, 이 연구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연구가 가지는 주장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연구가 주장에 지나지 않거나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때 연구의 신빙성은 저하되게 마련이다. 평화시 개념이나 평화의 섬 구상은 우리민족만이 가진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미래의 돌파구로 제시되어지

1) 김원배외 4인, 「동북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전략-열린 국토의 조성을 위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동북아, 남북교류부문), 국토개발연구원, 1999. 12 곽영훈, 「사랑방 도시」, 현대건축사, 1998, pp.23~30.

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책의 대안부재 상황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인구에 회자되어 국민적 통일논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연구의 필요성은 과소평가 되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보다 더 학술적인 연구 분석을 토대로 이 시점에 논의의 근거로 제시되어질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평화시 개념이나 '평화의 섬' 구상이 아이디어 그 자체로서만 제시되어지기 때문에 그 후속 연구로서 본 연구는 아이디어가 왜 현재 우리의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춘다.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을 갖는가라는 이론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부연하자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진철(2000)은 북한의 정치·경제가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적인 입장보다는 개발도상국적인 입장이 북한의 경제개발 우선 정책에 따라 심화된다는 것을 이론의 기초로 삼는다. 이 연구는 특히 북한이 현재 국토개발의 측면에서 제3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초기 국토개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장거점이론을 그 모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몇몇 성장 잠재성이 풍부한 도시들의 집중적인 육성이 성장거점이론의 핵심인데, 그 이론의 구체화는 경제특구와 같은 특구 위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북한의 특구정책은-본문에서도 다루어지지만-경제적이득과 동시에 특구를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입지함으로서 자본주의의 과도한 침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현재 북한의 이러한 특구 정책에 따라 남한의 통일논의도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평화시나 '평화의 섬' 등은 이에 부합하는 경제, 관광, 문화특구의 종합적 결정체로서 이 연구에서는 통일특구로 명명한다. 이 연구는 통일특구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남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문화적 이질성을 감소시켜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조사한다. 통일특구의 필요성은 현재 남북한 통일논의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설명되어지며, 국내외적 정치 질서 속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시되어 진다.

본문에 앞서 통일특구의 정의는 일정한 수의 남북한 국민들이 모여 사는 장소로서 남북한 국민들이 육로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이며, 일차적으로

교육·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시범적인 통일문화의 장이다. 그 장소로서 어느 특정한 비무장지대의 공간이나 현재 개성공단 2천만평 중 일부의 사용 또는 금강산 일대의 공간조성이 제안되어진다.

1.3 연구의 범위

본론은 크게 세 가지의 가정 속에서 출발한다. 먼저, 급작스런 통일은 우리의 통일 노선이 되기 어렵다. 독일과 예멘의 빠른 통일은 독일에 있어 이전 동독의 경제·사회적 침체와 서독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고, 예멘에 있어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1990년 통일 이후에 1994년 내전으로 결과했다. 점진적 통일 방안으로서의 통일특구는 제도와 개인의 구조화되고 준비된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로, 북한의 시장개방은 동구 유럽에서처럼 정권의 붕괴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중국의 시장 전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권의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다. 시장 개방이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게 한다는 논리는 동아시아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유교적 전통이 사회주의적 군주제로 정착된 북한에 있어 시장개방은 사회주의적 껍질을 가진 자본주의를 잉태하며 북한 지배 집단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특구는 자칫 영구화 할 수 있는 분단과 그에 따른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해 구실하며 지속적인 통일 창구로서 기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현재의 정부 주도에 의한 통일 노력들은 국내외적 정치적 불안정성과 원하지 않는 급작스런 통일을 유발 할 수 있다. 독일과 예멘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에 의한 통일논의는 조약과 약속의 남용을 가져오고 사회·경제적인 준비 없이 통일을 가져오게 한다. 또한 국민 참여 없이 진행된 통일 협상은 중국에는 민중혁명에 가까운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부딪히고 급기야는 선부른 통일조약을 형성하게 한다. 통일특구는 실험적 공간에서의 대중적 참여를 통해 항상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점진적인 통일의 길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통일 노선의 재정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제 1 장의 연구목적, 범위, 방법에 이어 제 2 장에서 현재 북한의 발전과정을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의 도시 및 지역계획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북한이 현재 체제 위협과 개방과의 갈등에 있음을 북한의 입장에서 재확인한다. 또한 그것의 갈등 해소방안 역시 사회·문화적 교류 공간(통일특구)의 확보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제 3 장에서는 제 2 장에서의 현 전환기 북한의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통일논의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극복 방안으로서

아래로부터의 통일논의의 필요성과 그것의 구체화 과정으로 통일특구가 주장되어 진다. 제 4 장에서는 이들 남한의 통일논의와 북한의 현재 실태에 기초하여 독일과 예멘의 실증적 예를 분석하며, 독일이나 예멘이나 제도적 통일의 과정이 결코 내적인 문화 통일을 가져오지 못했음을 설명한다. 남북한에 대한 교훈으로 통일 이전에 얼마나 문화적 통일이 주요한가를 설명하며 궁극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통일특구의 건설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제 5 장에서는 통일특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입지와 도시 디자인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은 결론으로서 이 논문의 총 정리와 함께 통일특구의 장·단기 효과를 분석했다.

1.4 연구의 방법

통일특구가 장·단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고 현재 꼭 필요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기존 분단국가의 통일 경험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독일, 예멘,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가 그것인데, 베트남의 경우는 무력에 의한 통일로 통일특구가 지향하는 점진적 평화통일에는 거리가 있고, 주로 독일과 예멘의 통일 경험을 이 논문에서 다룬다.

독일과 예멘의 문화 융합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비교 분석은 문화적 융합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장·단기 정치적 안정성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궁극적인 문화 통합은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 논문은 지적할 것이며 문화통합의 결정체로서 내적 통합이 정치담당자간의 외적 통합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분석한다. 독일과 예멘의 역사 비교 연구는 주로 이미 국내외에서 출판된 양 국가의 통일에 대한 책과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 전환기의 북한도시 및 지역계획

사회주의계획 이론은 크게 두 종류의 흐름을 갖고 발전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계획 이론으로서 구 소련과 동구 유럽에서 실현되었던 이론들이고, 다른 하나는 1940년대 50년대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중남미의 사회주의화한 국가들의 계획이론으로서 제3세계 사회주의계획 이론이다. 이러한 분할은 우리가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계획을 연구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중국·쿠바·베트남·북한과 같은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계획 이론의 관점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이들 제3세계 사회주의계획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이다.²⁾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사회주의 이론에 의한 연구보다는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이론에 따른 북한의 도시 및 지역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북한의 도시 및 지역계획의 역사적 paradigm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북한 도시 및 지역계획의 역사적 paradigm 분석을 통해 현재 남한의 통일정책에 있어 대응방안으로서 통일특구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어 진다.

2.1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이론

자본주의 개발도상국에 관한 발전이론들은 많이 소개되어져있고 그 분석과 연구도 잘 이루어져있다. 예를들어 John Friedmann(1973)은 자본주의 개발도상국의 발전이론을 4 단계로 묘사하고 있으며, 성장거점이론(Dewar et al 1986; Darwent 1975)은 자본주의 개발도상국에 있어 자주 사용되어진 실제 발전이론으로 검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들은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의 발전이론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Forbes와 Thrift(1987)는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은 자본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론과는 다른 발전이론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은 소련과 전통적인 동구 유럽의 사회주의 발전이론과도 다른 발전이론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에 관한 이론은 주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사회주의 국가와 일부 동구유럽 국가의 국토발전 상황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며 북한의 국토발전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적절하다.

Forbes와 Thrift는 그들의 책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ning"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건,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어떤 중요한 나라들의 그룹이다. 그러나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나 이들 나라들을 한쪽에 그냥 밀어 둔 채로 그 나라들을 독특하다거나(중국), 동구 유럽 정치학의 아류로서(쿠바), 아니면 그들 나라들이 유일하게 국제 정치에서 역할하는데 관심을 가질 뿐이다(베트남). 이 책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2) Forbes, Dean and Nigel Thrift,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ning*. Basil Blackwell Ltd. 1987. p.6

들이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흥미 있는 나라들의 그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는 그들 나라들이 상당히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이들 공통적인 특성들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의 도시화의 과정과 국토 발전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일조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이 Forbes와 Thrift는 사회주의 개발도상국들이 자본주의 개발도상국과는 다르지만 어떤 공통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그들에 따르면 자본주의 개발도상국들이 아주 빠른 도시화와 중주도시화를 겪는데 반해서, 사회주의 개발도상국들은 좀 느린 도시 성장과 덜한 도시 중주화를 보여 준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 중에서 역성극화 현상(Polarization Reversal)은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있으며 이러한 역성극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회주의를 경험하고있는 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 역성극화 현상이 이들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에서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Forbes와 Thrift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데 그 하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보다는 의도되지 않은 국가의 본질적인 관심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자로부터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에서의 대도시는 소비도시로서 간주되어지므로 강제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생산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의 규모를 억제하며, 도시경제의 자급자족성을 증진하고 새로운 중소도시의 탄생을 통해 인구를 분산·통제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서 캄보디아의 경우 프놈펜의 2백 5십만 인구는 이 역성극화 현상을 위해 그 도시로부터 축출되어졌으며, 단지 5만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다. 이 역성극화 현상은 그 이전에 중국의 예에서도 잘 보여지는데 문화혁명 당시 젊은 사람들의 농촌이동 현상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대도시 성장 억제 정책은 주로 국영기업에서의 국가투자,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의 투자보조, 강제적인 주거 및 정주패턴의 창출 등을 통해 산업시설과 공장 노동자들을 분산함으로써 가능했었다. 이들 정책들은 개인의 이주를 주거등록제도를 이용해 국가가 통제한다거나, 교육과 직장에 대한 차등적인 접근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했었다. 도시경제의 자급자족성은 도시행정구역 안에 농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 공업적 기능과 농업적 기능을 동시에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농촌같은 도시, 도시같은 농촌의 지역계획은 쿠바에서 잘 나타나는데 쿠바는 도시주변부를 농촌지역으로 만들고 이 지역 안에 노동자를 배치함으로써 자급자족성을 증진하려 했다. 스탈린의 전형적인 도시개발 정책이었던 중소도시의 창출 역시 이들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데올로기적인 요소에 의해 역성극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비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에 의해 이 현상이 유발되어졌더라는 논리는 이들 사회주의 개발도상국들이 역성극화 현상을 추구하려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Forbes와 Thrift는 이 비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누는데, 그 하나는 주로 정치적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경제적이라고 설명한다. 정치적 과정에 의한 역성극화 과정을 묘사한 사람들은 Murray와 Szelenyi(1984)이고, 경제적 과정에 의한 논리는 Kirkby(1985)에 의해 주장되어 진다.

정치적 과정에 의한 역성극화 현상 주장은 국가의 정책적 배열에 의해 이 역성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규정한다. 이 국가의 정책적 배열 내지 분배는 계급 투쟁을 억지하고 도시의 主 거주민으로서 소수 자본가계급을 중산층과 小 부르주아지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역성극화 현상은 대도시의 반대 급부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계급적 갈등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비이데올로기적인 정책적 배려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Thrift와 Forbes(1986)는 Murray와 Szelenyi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강조에 대해 비판하는데 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정치적 요소와 시민 사회 그리고 여타 요소들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주장한다. Forbes와 Thrift는 베트남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베트남에 있어 도시화와 지역개발은 전쟁과 외부 침략 위협 그리고 종족간의 갈등을 고려하는 것 없이 설명되어 질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에 의한 외부 침공의 위협은 베트남에 있어 인구의 재분산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었고, 토착 베트남인과 중국계 베트남인 사이의 종족 갈등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경제적 과정에 의한 역성극화 현상의 주장은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의 공간구조는 중앙집권적 경제구조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공업 발전은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에 있어 주요한 경제 발전 전략인데, 역성극화 현상은 의도적인 산업화 과정에 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비용 효율 극대화의 산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에 있어 도시들은 도로·가옥·상하수도·전기시설물 등과 같은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있어 최소 비용 원칙을 실행하며, 이를 위해 도시 성장의 억제, 지방 중소도시의 창출을 포함하는 역성극화 현상은 최소 자본에 의한 최대 효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자리 매김 한다. 또한, 이러한 적절한 산업 성장을 통한 도시 억제 정책은 농촌 노동력을 도시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시에 가난한 대중을 양산하지 않음과 동시에 정치·사회적 위협을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2 북한의 도시 및 지역계획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이론은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틀이긴 하나 이론이 정립된 시기가 1980년대라는 점에서 전환기의 북한과 개방을 준비중이던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의 과도기적 상황을 설명하는데는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이 이론은 역성극화 현상을 공통적 특징으로 기술하고 있고 마치 역성극화 현상이 이들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에 있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 1978년 개방이후 이 역성극화 현상은 파괴되어 지고 있었고 작금에 와서는 자본주의 개발도상국처럼 몇몇 대도시의 종주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의 개발 역시 기존의 사회주의적 틀이었던 소규모도시 직주근접의 원칙을 상당 정도로 파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많은 도시 및 지역계획을 다룬 논문은 거의 자본주의화한 도시 및 지역계획을 묘사하고 있고 과도기적 중국을 묘사하는데는 미미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경우는 적극적 개방으로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 도시 및 지역계획의 묘사는 이 과도기적 상황에 있어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이론을 보다 더 진일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2.2.1 북한의 도시계획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개괄적으로 북한의 소규모 도시계획과 주거지 계획에 대해 분석한다.

1) 소규모 도시계획

북한의 소규모 도시계획의 추구를 증명하기 위한 척도로서 인구밀도의 증가를 이 논문에서 다룬다. 물론, 인구밀도가 소규모 도시계획에 대한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들 중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석은 가능하리라 본다. 북한의 인구 밀도에 대한 정보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바 없기 때문에 어떤 체계화된 북한의 인구밀도에 대한 데이터는 얻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 한경형의 LANDSAT 영상을 통한 남북한 도시들에 대한 인구 비교는 1942년과 1975년의 도시 인구와 면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942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많은 인구 변화나 도시의 성장이 없었던 걸로 보았을때 1942년 도시 면적과 인구는 1945년 이후부터 전쟁전의 북한의 도시 면적과 인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며 1975년 도시 면적과 인구는 북한 도시계획의 중반기까지의 역사를 보여 줄 것이다.

〈표 2-1〉 인구밀도 변화(1942년과 1975년) 단위: 면적 = km

구분	1942		1975		인구 밀도		
	도시인구	도시면적	도시인구	도시면적	1942 명/km ²	1975 명/km ²	변화(%)
개성	1.18	80.017	5.95	90.000	67,811	15,126	-77.69
해주	2.04	81.017	3.33	170.000	39,714	51,051	28.55
평양	13.91	389.105	44.63	2,080.000	27,973	46,605	66.61
진남포	2.02	81.187	3	180.000	40,191	60,000	49.28
신의주	8.64	127.706	9.74	260.000	14,780	26,694	80.60
원산	3.83	122.185	7.21	200.000	31,902	27,739	-13.05
함흥	3.83	119.279	13.15	570.000	31,143	43,346	39.18
청진	14.97	234.388	15.61	510.000	15,657	32,671	108.67
나진	1.81	38.597	1.81	57.000	21,324	31,491	47.68

자료출처: Han Kyung Hyung, "Estimation of Major City Population in Korea Using LANDSAT Imagery",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Utah, 1985, pp.73~86.

〈표 2-1〉에 따르면 대부분 도시들은 도시 면적과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인구밀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개성과 원산은 인구밀도의 감소(-77.69 %와 -13.05 %)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전쟁 이전에 비교적 인구가 많았던 이들 도시들에서 전쟁 이후에 남부접경지역에 가까운 위치가 군사적으로 이들 도시들의 재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두 도시에서 인구밀도의 감소는 북한이 이들 두 도시에서 소규모 도시계획에 실패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에 있어 소규모 도시계획은 1975년 중반기까지 꽤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2〉 인구밀도 대조(1987년과 1996) 단위: 면적 = km

	1987		1996		인구 밀도		
	면적	인구	면적	인구	1987	1996	변화(%)
평양	2,000	2,355,000	2,630	3,566,100	1,177	1,355	15.15
개성	1,255	331,000	1,309	411,500	263	314	19.19
남포	753	715,000	829	857,300	949	1,034	8.91

자료출처: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2, p.15.

이상준, "통일 이후 북한지역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및 도시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8, p.37.

〈표 2-2〉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인구밀도 정보로서 북한의 주요 3개 도시에서의 정보이다. 3개 도시 모두 인구밀도에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규모 도시계획이 이들 도시들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개성이 갑자기 가장 인구밀도가 높아진(19.19%) 곳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1996년에 있어 인구가 실제 인구가 아닌 대의원 선거구에 의한 예측과 1987년 면적이 실측이 아닌 내략적 수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인구밀도에 의한 소규모 도시계획에 관한 분석은 북한이 초기부터 최근까지 소규모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주거지 소구역 계획

주거지 소구역 계획은 사회주의적 도시계획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지의 계획이며 소규모 도시계획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소구역 계획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직주근접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소구역 계획이 사회주의적 논리에 따라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하나의 척도이며, 이 논문에서는 소구역 계획의 두 가지 사례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초반기 소구역계획과 최근의 소구역계획이 역사적으로 직주근접의 원칙에 근접하는가를 알아본다.

● 평양 대타령 87호 (1959-1960)

〈표 2-3〉 평양 대타령 87호의 토지이용

토지 이용		면적(ha)	면적(%)
주거용지	건물 (8층 이상)	0.13	52.88
	건물 (4-5 층)	12.14	
인민학교		1.1	4.74
유치원과 탁아소		1.9	8.18
봉사 사무소들		1.4	6.03
경영밭		1.23	5.30
도로와 포장		2.3	9.91
광장 공원 체육관		3.0	12.96
합계		23.2	100.00

자료출처: 리화선, "조선 건축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 1989, p.355.

평양 대타령 87호는 가장 첫 번째의 소구역계획으로서 23.01ha의 면적에 4층부터 8층까지의 빌딩군들에 의해 형성되어졌다. <표 2-3>은 평양 대타령 87호의 토지이용을 보여준다. 이 토지이용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상대적으로 낮은 도로와 포장(9.91%), 높은 봉사 기능과 경영뜰에의 토지 비율(24.25%), 그리고 광장 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높은 비율일 것이다. 낮은 비율의 도로와 포장은 소구역계획이 자동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과 도보에 의한 통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높은 비율의 봉사기관들과 경영뜰은 완전한 자급자족성을 성취하지는 못할지라도 필수품을 위해 소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억제토록 함으로서 필요 이상의 이동을 막고 전체 이동 비용을 줄이려 했다. 또한 높은 비율의 공원과 체육시설은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생활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평양 대타령 87호는 필수품과 소비의 관계를 구역 안에 완비하려 함으로서 초과적인 이동을 억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직주근접의 원칙에 충실하며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주거지 계획을 보여준다.

● 남 신의주 8호 계획

남 신의주 8호 계획은 1980년대 말에 실행되어진 소구역 계획으로서 소구역 계획의 성공적 예들 중에 하나이다. 소구역은 두개 동으로 구성되어지며, 초기 소구역 계획의 봉사 중심이 각 주거 빌딩들의 중앙에 놓였던 것에 반해 일개 동에 하나씩 봉사 중심을 정함으로서 주거 빌딩과 소구역의 중간 봉사중심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것은 인구의 증가를 소구역 안에서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소구역 반경이 전형적인 400-500미터에서 600미터로 조금 더 넓어지고 그전에 소구역 보다 큰 봉사단위인 구역단위에서의 봉사기능중 일부를 이 소구역 안에 유입함으로써 직주근접의 실현을 보장하려 했다. 예를 들어 그전 구역단위의 봉사기능이었던 인민 중학교, 빵공장, 식료품 공장 등이 이 소구역의 봉사기능으로 자리잡게 되고, 그전 소구역의 봉사기능이었던 탁아소, 유치원, 식료품 가게들이 각 동 단위에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반경 400미터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빌딩군들에 있어 봉사 기능들은 생활필수품, 세탁소, 소규모 식료품 가게, 가전제품 수리소와 같은 작은 기능들을 반경 100-200 미터 안에서 배치함으로써 그전의 2단계에서 3단계의 소구역 체제를 만들었다. 또한 인구밀도의 증가를 소구역 안에 수렴하기 위해 빌딩층 수를 7-8층으로 높임으로서 고밀도의 토지이용을 보장했고, 배 건물의 1층에 봉사기능들을 배치함으로써 직주근접을 증진하는 토지이용중 하나인 주상 복합 건물을 보여 준다.

이상의 소구역 계획에 대한 두 사례연구들은 대중교통과 도보의 이용을

위한 토지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단계의 봉사기능확대, 고밀도를 위한 높은 빌딩 등을 건설했다는 점에서 초과적인 이동을 최대한 방지하려 했고 직주근접의 원칙에 충실하다. 즉, 북한에 있어 직주근접을 통한 주거지 계획은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져 왔고 파괴되지 않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2.2.2 북한의 지역계획

도시규모분포에 관한 분석은 하경준의 석사학위 논문과 이제하의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이제하의 논문은 도시 종주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 논문들은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이론에 대한 고찰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더 보강되어 진다. 다음에 제시되어지는 <표 2-4>는 도시규모분포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그림 2-1>은 시각적으로 도시의 지역적 발달과정을 보여준다.

일제 강점 시기인 194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과 중국과 만주로의 진출을 위해 곡물, 석탄, 군수물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위해 주로 동서 해안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전하게 되었고, 한국전쟁 이전까지 이러한 도시 발전 형태를 유지한다. 전쟁 이후에는 도시발전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북부내륙지역의 도시 건설이 그 대표적 예이며, 이들 도시들의 순위도 급격히 상승하며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간의 북한 도시 및 지역계획에 대한 이 시기의 북부내륙 건설에 대한 지적이 극히 사회주의 이론에 집착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단지 지역 균등 개발의 차원에서 이 북부내륙의 도시발전을 평가하는 것인데 Forbes와 Thrift에게 있어 이러한 해석은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의한 일면적 해석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이러한 해석은 남부 접경지역의 전쟁 이후 지개발을 설명할 수 없다. 아마도, 북부내륙의 발전이 전적으로 당시의 지역균등개발에 의한 것이었다면 남부접경지역 역시 발전을 시도했음에 마땅하다. 반면에 비의도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인 군사적 요소에 의한 해석은 북부내륙의 발전과 남부 접경지역의 지개발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요컨대, 원산과 같은 해안지역에서의 전쟁 피해와 남부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재 충돌 위험성 내지 군부내작전을 위한 주민소개의 필요성 등은 군수공업의 안전지대로의 이전에 의한 북부내륙의 발전과 군사적 목적을 위한 남부내륙의 지발전이라는 상이한 면으로 나타난다. 여하튼 여기서 강조하고있는 역성극화 현상은 북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을 보여줌으로서 뚜렷이 나타난다.

〈표 2-4〉 북한의 도시규모분포 변화 (단위: 1,000명)

도 시	인구 (순위)					
	1940	1967	1972	1987	1993	1996
평양	286(1)	1,555(1)	1,847(1)	2,355(1)	2,741(1)	3,566(1)
남포	69(6)	141(8)	163(7)	715(2)	731(2)	857(2)
함흥	75(4)	424(2)	489(2)	701(3)	709(3)	857(3)
청진	198(2)	226(3)	407(3)	520(4)	582(4)	720(4)
순천	-	-	-	356(5)	-(5)*	514(5)
개성	72(5)	141(7)	326(4)	331(6)	334(6)	411(6)
단천	-	-	-	284(7)	-(7)*	377(7)
개천	-	-	-	-	-(8)*	342(8)
신의주	61(9)	170(5)	217(6)	239(9)	326(9)	342(9)
원산	79(3)	226(4)	272(5)	274(8)	300(10)	308(10)
사리원	35(11)	85(12)	136(10)	221(11)	254(12)	308(11)
평성	9(16)	28(17)	109(13)	239(10)	272(11)	274(12)
해주	63(7)	113(9)	163(9)	195(14)	229(13)	240(13)
안주	-	-	-	186(15)	-(14)*	240(14)
혜산	16(14)	85(13)	136(12)	164(18)	178(16)	240(15)
강계	26(13)	170(6)	163(8)	211(13)	223(15)	234(16)
정주	-	-	-	-	-(17)*	206(17)
김책	62(8)	113(10)	136(12)	179(16)	-(18)*	205(18)
회천	13(15)	28(15)	27(19)	163(19)	-(19)*	205(19)
구성	9(17)	28(16)	109(13)	177(17)	-(20)*	205(20)
신포	35(12)	28(18)	81(16)	158(20)	-(21)*	171(21)
나진	38(10)	57(14)	54(17)	89(23)	-(22)*	171(22)
덕천	-	-	-	217(12)	-(23)*	137(23)
회령	-	-	-	-	-(24)*	137(24)
송림	6(18)	85(11)	81(15)	108(21)	-(25)*	102(25)
만포	-	-	54(18)	93(22)	-(26)*	102(26)
문천	-	-	-	-	-(27)*	102(27)

* 도시 인구가 기록 안되어 가까운 연도인 1996년 인구에 기초하여 작성

자료출처:

1940: 하경준, "북한의 도시규모 분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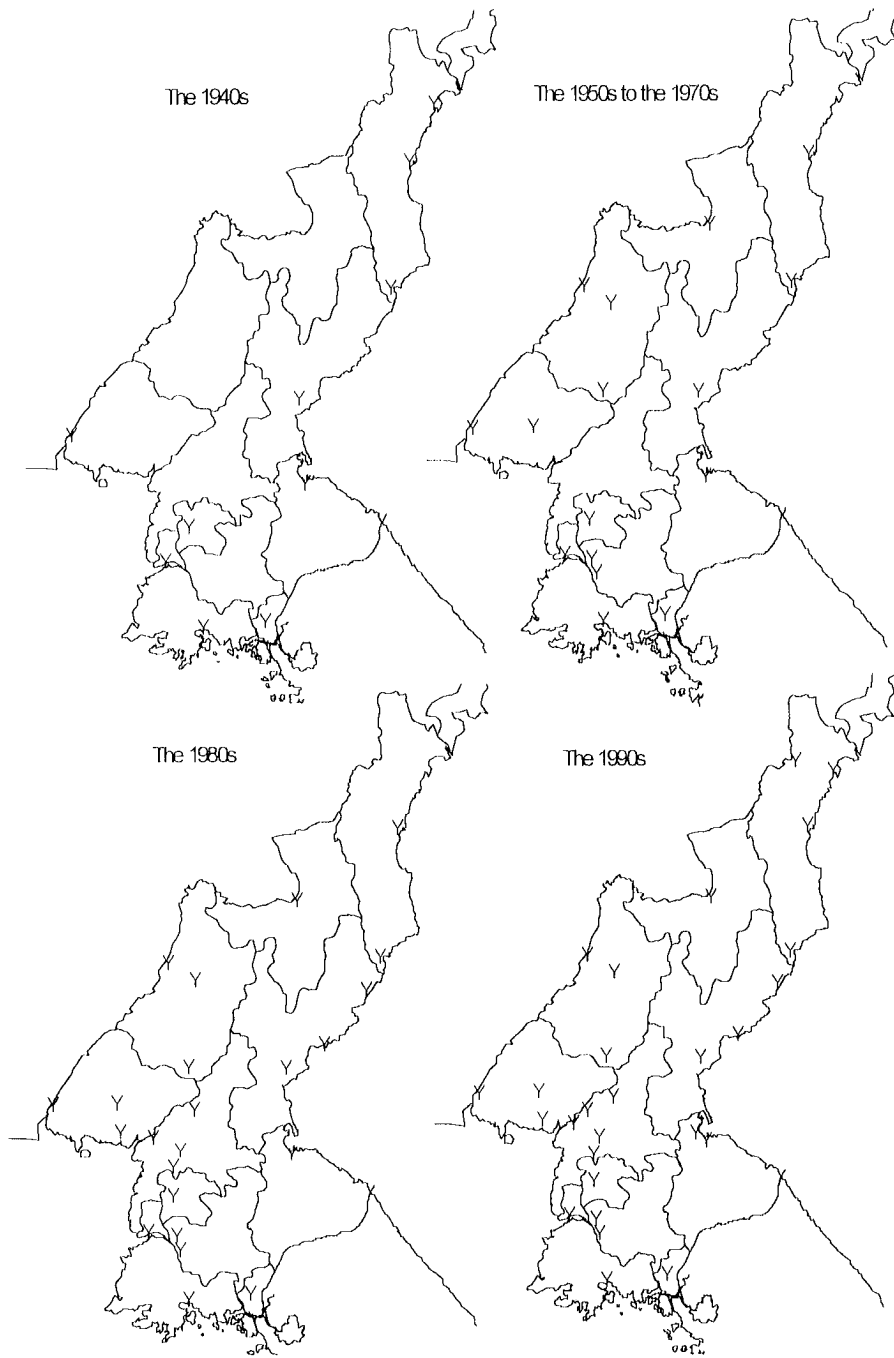
1967과 1972: 이재하,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지역균형개발 방안 모색", 한반도 평화정착의 제도화와 협력 증진, 제19회 통일문제세미나, 1996

1987: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2

1993: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n DPRK,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ember 31, 1993, 1995

1996: 이상준, "통일 이후 북한지역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및 도시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8, p.39.

〈그림 2-1〉 북한의 도시 발전, 1940-1998



그러나, 이 순위규모분포는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평양 주변에 도시들의 등장과 그들 순위들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남포가 2번째 큰 도시로, 순천이 5번째 큰 도시로, 평성이 10위로, 1990년대에는 개천이 8위로 성장하였고, 괄목할만한 인구 성장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역성극화를 이끌어 왔던 강계·회천·반포·혜산 등은 그 순위가 5-8위까지 낮아지며 인구 성장도 정체 내지 소폭 상승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역성극화 현상이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요 원인은 평양주변의 도시들의 성장에 의해 1970년대 중반까지 역성극화 주도적인 도시들의 순위가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된 요인은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에서 찾아질 수 있는데, 1970년대 중반은 북한의 중공업 우선 정책에 의한 자급자족적 경제전략이 쇠퇴기로 접어드는 시기로서 경제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돌파구로서 경제집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기존 인구밀집 지역인 평양 주변에 인구를 집중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재 어떻게 무슨 제도를 이용하여 인구를 이 지역에 이주케 했는지는 이 논문에서는 파악되지 않으나, 중앙집권적인 북한의 정치체제로 보았을 때 얼마든지 비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으리라 본다.

2.3 북한의 도시 및 지역계획의 Paradigm 변화

이상의 북한 도시 및 지역계획에 대한 증거들은 북한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경제집적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평양주변에 인구 규모가 큰 도시들의 집중을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1970년대는 그 분기점으로서 역성극화 현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북부내륙지방의 발전이 이 시기를 정점으로 정체 내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역성극화 현상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인구밀도의 증가와 소구역계획의 계속적 적용을 통해 소규모 도시계획과 직주근접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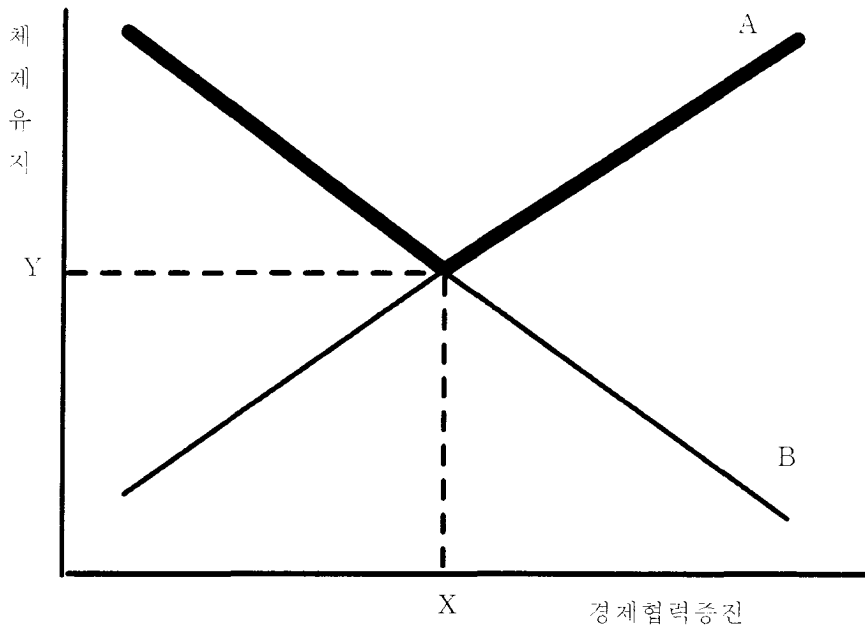
이것은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이론이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paradigm 변화의 정립을 통해 그 구체적 단계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3단계의 paradigm 변화를 지적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사회주의 단계로서 도시계획에 있어 소규모 도시계획과 직주근접의 원칙 그리고 지역계획에 있어 역성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로서 북한에 있어서는 1970년대 초·중반까지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북한에

있어 1970년대 초·중반이후로서 도시계획에 있어 소규모 도시계획과 직주근접의 원칙이 고수되나 지역계획에서는 역성극화 현상이 급격히 헤체되는 시기로서 경제집적의 논리에 따른 특정 도시 중심적인 종주화 현상을 보여 주는 시기이다. 다시 말해서, 1단계의 사회주의 도시 및 지역계획이 이 단계에 와서는 사회주의 도시계획과 개발도상국적 지역계획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개방의 극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로서 과도기적 사회주의 도시계획과 개발도상국적 지역계획은 도시의 사회주의적 속성마저도 파괴함으로서 완전한 개발도상국적 도시 및 지역계획을 보여 준다. 이 3단계는 아직 북한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개방을 일찍이 시작했던 중국의 경우 1989년 이후 가옥의 개인소유를 허락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규정지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소유개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개념이 도입되면 급격히 이 3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2.4 전환기의 통일 도시계획

기존의 북한연구에 대한 한계중의 하나는 현재의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이후의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언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통일에 연구의 결과를 맡겨버리는 듯하다. 물론, 그 연구들의 중요성은 분명 인지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문제는 정책적 대안들이 가져야 할 합목적성과 장·단기적 처방이 학계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현재의 남북한 통일 논의의 돌파구를 여는데 필요한 장·단기적인 정책기획들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의 도시 및 지역계획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고찰로부터 현재 북한에 있어 전환기를 사회주의적 도시계획과 자본주의적 지역계획으로 묘사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한의 대응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전략적 기틀을 제공한다. 사회주의적 도시계획과 자본주의적 지역계획이라는 의미는 생활의 기본적 맥락은 사회주의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의 대응을 위한 계획적 변경을 의미하며, 그간의 북한연구들이 제시했듯이 북한은 당분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준다. 그것을 더 명료하게 북한의 체제유지와 경제·문화교류 증진 추구의 관계가 어떻게 남한의 대응방안과 연결되는 가는 <그림 2-2>로 요약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 체제유지와 경제증진의 관계



A: 체제유지형 곡선 (사회주의 곡선)

B: 경제증진형 곡선 (자본주의 곡선)

A는 체제유지형 무차별곡선으로서 경제·문화교류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체제유지,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적 요소는 퇴색해져 나간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연구논문에서 지적되어지는 것처럼 경제증진정책이 사회주의적 지역 균등개발을 파괴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을 증명해준다. B는 경제·문화증진형 무차별곡선으로서 경제적발전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서 체제유지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이며,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사실 이 두 곡선은 서로 모순되는 곡선으로서 현재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의 적절한 수용을 통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국가에 어울리는 모순 곡선이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흥이 체제유지를 가능하게 하지만 좀더 강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고 그것은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A형 곡선에 그 비중을 둘 것이다. 하지만 일단의 체제불안요소가 사라지거나 경제적 부흥이 중국의 경우처럼 정치적 안정을 배가한다면 그 무게중심은 B형 곡선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림에 보여지는 굵은 곡선의 V자 형태가 북한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치·경제적 그래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자의 우하향 곡선은 사회주의틀 속에서의 자본주의 요소 도입과정이고 현재의 상황을

대변하며, 우상향 곡선은 보다 적극적인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과정으로서 미래를 대변한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X와 Y의 집합점으로 표시되는 균형점 또는 전환기는 이 논문에서는 3단계 paradigm의 시초로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3단계는 이 논문의 중심연구는 아니며, V자의 우하향 곡선에 초점을 둔다. 우하향 곡선은 앞에서도 시술하다시피 사회주의적 요소의 일정 정도에서의 양보로서 경제적 부흥을 위한 경제집적 효과의 실현과 지역적 편중 내지 한정적 지역에서의 경제특구로 나타난다.

여기서 한가지 큰 문제는 이들 지역 편중 발전과 특구 발전들이 6·15 회담이후 크게 발전되어 남한의 참여가 확산되리라는 기대였다. 물론 상당 정도의 남북한교류가 있었음에는 틀림없지만 지난 1년여 동안 특히 부시 행정부 이후의 과정은 이들 경제 특수 지역에서의 남한의 참여는 극히 미미하다. 개성공단은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노정은 경제협력만으로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북한의 자발적인 우하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대외적인 변수, 특히 미국의 입장변화는 우하향을 추축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사실 북한 스스로 남북한의 문제는 남북한 스스로의 주체적인 노력으로서 하자는 6·15 회담의 정신은 현재의 다소 사대주의적인 조미 관계의 개선에 따라 남북관계를 바라보도록 함으로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의 경제 특수 지대에서의 경험은 답보상태를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경험이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국내외 정치에 민감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결코 독립적이지 못함을 지적한다. 결국 경험은 그것의 최대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남북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기능하며 보다 더 중요하고 현실화해야 될 문제는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만남의 장들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북한의 체제우위론을 벗어나는 길은 보다 많은 남북한 사람들의 만남이며 대중적인 접촉공간의 확보만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제한적인 공간에서의 남북한 교류를 증진할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적 정책대안으로서 남북한 동수의 학생과 연구진들이 공동생활하는 통일특구가 제안되어 지며 그것의 전환기에 있어 통일도시계획에 대해 개념적 디자인이 이 논문의 제 5 장에서 제공한다.

3. 기존 통일논의와 그 한계

3.1 기존의 통일논의

통일논의는 지난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역사에 있어 끊임없이 정부 담당 자들에 의해 제기 되어 왔으며 남북한은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자기주장만을 되풀이 하여왔다. 그러한 가운데 6·15 회담은 우리 한국 국민 모두에게 있어 서로의 합의점으로서 속칭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분모가 있음에 동의하고 통일이 단순히 공허한 탁상공론이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획기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통일논의가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미진한 편이며, 남북한 국민들은 두 정부의 정책 향방에 따라 중심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통일논의에 대한 허와 실을 분석함으로써 그 단점들을 버리고 국민대중 스스로의 힘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구축하려한다.

3.1.1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남한은 그 동안 밝혀왔던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구상들을 체계화하여 종합적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경우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으며, 1991년 1월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수정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통일방안의 명칭에 있어서 남한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라고 한다. 남한의 경우 제5공화국에 와서 처음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6공화국에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제시했고, 문민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따로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우 1960년 8월 남북연방제안이 제시된 이후 1973년 6월에는 고려연방공화국 방안으로 그리고 1980년 10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확정되었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점진적인 3단계 통일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1단계인 화해협력의 단계는 남북간의 적대성과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협력의 장을 열어 가는 단계이며 분야별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한 공히 현존하는 두 체제

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제도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완전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2국가 2정부 하에서 남북정상회의를 최고결정기구로 하고,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를 산하기구로서 통일정부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적인 틀을 형성하고 운용하는 단계이다. 특히 남북평의회는 통일 헌법안을 마련한다. 이 단계는 남북간의 냉전구조와 대결의식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가정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정치적 통합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제3단계인 1민족 1국가의 통일 조국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1민족 1국가의 통일조국을 완성하는 단계이다.³⁾

북한의 경우 통일과정에 대해 남한처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의하면 3단계 과정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1단계로서 북한은 연방제가 실시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단계로 선결조건 후에 남북연방제의 실시, 그리고 3단계로 10대 시정 방침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을 이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3단계 통일 발전을 보면 남북한 공히 남북교류단계 또는 화해협력단계를 1단계로 규정하고 있고, 2단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제도적 통일을 우선시 하는데 반해 남한은 화해협력단계에서 보다 진보된 남북연합단계를 구상하고 있다. 단계설정에 있어 북한의 그것은 남한보다 급진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연방제 실시와 통일의 완성인 제도통일을 구분, 실질적 통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데,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는 제도통일이라는 완전한 통일을 사실상 따로 상정하고 있어, 연방제 통일은 다시 과도적 단계로 후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

3)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1995, pp.66~68.

4)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에게 맡겨도 되지만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북한개요」, 1995, pp.529~530.

3.2 통일논의에 있어 위에서 아래로의 한계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에 의한 점진적 통일로 진척시켜나가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방식과 시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설령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주체가 단지 정부 담당자에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다.

현재까지의 정부주체만의 통일논의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항상성의 부족, 추상성의 문제, 일괄 타결식의 한계 등으로 요약되어 질 수 있다. 첫째로, 정부주체만의 통일논의는 쉽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간의 믿음이 부족한 상태 속에서 정치적 업적만을 유지하려다 보니 어떤 소기의 일회적 업적을 남기고 난 후에 국내·국제적 상황이 변화하면 그것을 지속하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민중들이 참여하여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외부의 입김에 동요하지 않고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로, 추상성의 문제는 위에 통일논의 자체에 지적되어지는 것으로서, 구체적 대응방안 없이 무계획적 경제협력에 남북한 화해협력의 단계를 맡겨 버리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현재의 화해협력이라도 이끌어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상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실례로 현재의 남한 경제 위기로 인한 자본적 토대 미약과 국제 정치 질서의 변화는 북한과의 교역에 있어 불안한 경제협력 상태를 유발하고 있다(금강산 특구 유지와 개성공단 건설의 불투명성). 셋째로, 정부주체의 일괄 타결식 협정이나 조약은 지금의 단계에 있어 특구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며, 남북한의 보수와 진보간의 대결을 심화시키고 있다. 예로서, 평화협정이나 선언은 남북한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무엇보다도 남한 내의 정치적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위에서 아래로의 통일논의에 의한 문제들인 항상성의 부족, 추상성, 일괄 타결식 한계는 정부 담당자들에 의한 통일논의를 극대화시키기보다는 국내의 정치질서에 민감하게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정부 담당자들이 국내 정치적으로 위험부담을 안는 요소로 작용함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클링턴 행정부 시절의 포괄적 대북외교방안은 남북간에도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북 정상간의 회담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 되었지만, 부시행정부 이후에는 남북간에 관계경색을 불러 일으켜 북한에 있어 군부와 남한에 있어 보수세력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통일외교가 다소 주춤하는 상황으로 결과하였다. 특히, 작금에 와서 남한의 경제적 난국의 정황 속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잘못 극단의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부조리한 것으로 인

식되기 쉽고, 실제 현재의 통일 정황을 성급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일논의에 있어 위에서 아래로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은 국내외 정치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통일 전략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논문은 지적하며, 그것을 찾는 과정은 통일논의의 항상성, 구체성, 제한적이지만 성공 가능한 길들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3 아래로부터의 통일 전략과 통일특구

3.3.1 영토 해결방식

남북의 문제는 영토의 완전한 양분에 의해 사람들 간의 이동이 단절된 것이다. 영토의 분단에 의해 생겨난 문제가 민족의 고난역사라면, 풀어나가는 과정 역시 영토의 점진적 통일과정 속에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동물들이 고속도로, 강, 산 등에 의해 다른 생태환경과 심지어는 돌연변이에 의한 변종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영토의 단절은 서로 다른 생태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 언어에서의 변화, 음식문화에서의 변화, 사고방식에서의 변화 등등. 이러한 근본적인 이질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랑이와 곰의 모범적인 동굴생활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그것은 한정된 공간 속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전면적인 문화적 융화는 오히려 혼돈을 부르고 대중적인 불협화음을 생산할 것이다. 현재 이루어 질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은 준비되어진 인력과 조직에 의해 문화적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간박이 없는 어떤 도시이다. 그것은 베를린의 장벽이 없는 1950년대의 베를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생활이 우리에게 문화적 어항으로서 실제 전면적인 문화교류 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한정된 생활공간 속에서의 항상적인 만남은 추상적인 통일논의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 스스로에 의한 통일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3.2 문화통일

현재의 통일 단계는 통일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중 제 1단계인 화해와 협력의 단계이며 제 2단계인 남북연합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화해 협력 단계에서 남북연합단계로 가는 구체적 시점이나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얼마만큼 화해하고 협

력해야지 남북연합단계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 따라서 이 두 단계에 통일특구에 의해 가능해 질 수 있는 추가적인 과도기적 단계로서 문화적 교류의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찰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단계 역시 일회적인 예술 공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인 접촉 공간 속에서 언어, 예술, 인문학, 과학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이질적인 요소들을 서로 교통함으로써 새로운 통일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시적인 만남은 우리 남북한 모든 대중에게 있어 통일이 일회적인 정치적 건수가 된단든지 그저 잠시의 감정적 여운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 속에 항상적인 건수로서 그리고 제한되지 않은 대중적인 참여 속에 통일이 진정 가능하고 남북한 민족이 하나임을 인지하도록 할 것이다.

4. 다른 나라들의 예

지구상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냉전구조 속에 그들의 영토들을 양분한 나라들은 우리나라 이외에 예멘, 독일, 베트남 등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 있어 통일과정은 각기 차이가 있다. 베트남은 무력에 의한 강점에 의해서, 독일은 평화적이지만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에 의해서, 예멘은 평화적인 선거에 의한 통일과 3년 뒤의 내전에 의해서 등이다. 세 가지의 통일노선 중 베트남의 무력 통일 노선은 일찌감치 우리의 통일 노선일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독일의 통일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발달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통합이었고, 우리와 같이 남북한 경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통일 비용을 증가시켜 둘 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꺼려지는 통일 과정일 것이다.

여기나온 예들은 독일과 예멘을 다루며 외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이며, 통일 이후의 과정에서 내적 통일을 가져오기 위한 양 통일국가의 노력과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 국가에서 주는 교훈에 대해 설명한다.

4.1 독일

독일 통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지만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부러워한 나머지 그들의 실체를 우리 스스로 왜곡하는 경향이 없지 않

다. 통일독일은 동독의 체제가 서독의 체제로의 이입을 뜻하며, 정치적으로 서독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적 구조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사회적으로 구동독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서독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위치 속에서 구동독의 변화만을 강요하는 기형적인 상태를 유발하고 있다. 분명, 제도적 통합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절대적 뒷받침인 문화적 통합은 아직 요원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사고방식 및 가치관에서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독일의 통일 방식에 대한 맹목적 칭송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에서 제도통일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것의 우리 나류대로의 교훈으로서 통일특구가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할 것이다.

4.1.1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제도적 통일(외적 통일)

1960년대 베를린 장벽의 설치 이후 독일의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느껴졌으나 1972년 12월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통일의 실마리를 만들어 간다. 그 이후에 꾸준히 추구했고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86년 5월 6일의 문화협정(Das Kulturabkommen)⁵⁾으로서 정부간 차원에서 공식적인 문화 교류에 대한 길을 확보함으로써 종전의 공공교류에서 민간교류 차원으로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협정은 문화의 개념을 이전의 음악, 연극, 미술, 연극, 영화 등의 좁은 의미에서 교육과 학문, 도서관 제도, 자료기록실조직, 박물관제도, 기념물 보호 등의 다양하고 넓은 의미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심지어는 TV, 라디오, 스포츠분야, 청소년교류도 수용함으로써 제도적 외적 통일의 근간을 이루도록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독 주민들의 통신(TV와 라디오)에서의 상대적인 자유로움은 동독 주민의 서독 경제와 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만들었고 중국에 동독의 라이프찌히에서 월요테모와 이에 이은 동독 주민들의 민중항거로 이끈 기폭제 역할을 했다. TV 시청은 1988년 당시 독일 전체에서 가능했고 동독국민 70%이상이 서독 TV를 시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⁶⁾ 이러한 빠른 속도로의 서독의 동독에로의 문화 유입은 문화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3년 만 만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가져왔다. 문화교류가 얼마만큼 서

5) 정식명칭은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kulturelle Zusammenarbeit 이다. 보통 문화협정(Das Kulturabkommen)이라 함. 이장희, "동서독 문화협정이 남북한 문화협정 체결에 주는 시사점", 『통일의 저력』, 서울:백산문화, 1999, p.334.

6) 앞의책, p.350.

로 이질적인 체제를 넘어 한민족의 정서를 교류하는데 있어 중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생각되어 지며, 그 중에서도 통신의 자유(TV 시청)가 얼마만큼 위력적인 가를 보여준다.

4.1.2 독일 통일 이후(내적 통일)

통독 후 독일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통일을 통합으로의 의미로 사용했었고 독일 통일은 10년이 넘게 흘렀다.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한 나라 안에 두 사회가 있는 듯하다. 동독체제가 없어지고 구동독이 서독의 체제를 흡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적 혼란과 구동독의 사회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향이나 관습은 여전히 과거의 습성대로 진행해 나가는 듯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독일에서는 통합이라는 말 대신 내적 통일(Innere Einheit)이란 말이 많이 통용된다. 독일 통일이 외적 통일(제도적 통일)이라면 내적 통일은 통독후 동서간의 문화적 통합을 의미한다.⁷⁾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동·서독인들은 한마음으로 서로 껴안고, 춤을 추면서 한 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했다. 그러나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는 가운데 동서독의 통합과정에서 한 때의 쾌적감은 점점 사라지고, 상호간의 불신과 오해가 교차했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으나, 마음의 장벽은 형성됐다든가, 서로 헐뜯는 말로 Ossis(동독놈)와 Wessis(서독놈)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1998년 7월 알렌스바하(Allensbach)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은 점점 더 내적 통일에 있어서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동서간의 공통점에 관한 설문에서 1992년의 설문조사에서는 서독이 52%, 동독이 70%이었던 것에 반해 이 1998년의 설문조사에서는 서독의 47%와 동독의 57%가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계속적인 내적 통일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여진다. 독일국민 전체의 23%는 동독의 서독으로의 가입을 오늘날에도 식민지화로 여기고 있다. 동서간의 불만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동독인들의 86%가 서독의 경제가 그들의 경쟁력을 무력화한데서 기인한다고 했다.⁸⁾

통일독일에서의 구동독과 구서독과의 불만은 서로간에 통일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동독이 서독과의 통합과정에서 동독인들이 사회적 결과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지원을 바랬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의 균동화를 위한 일종의 도덕적 요구도 원했다. 하지만 서독인들의 관점에서

7) 이영기,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사례의 한국적용", 통일외의 저력, 서울: 백산문화, 1999, p.85.

8) Die Welt v. 23. 7. 1998.

는 동독인들을 아주 큰 자선을 베풀 빈 친척으로 여겼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 천억 마르크의 지원을 매년해도 특별한 감사를 표하지 않는 동독인들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서독인들의 견해로는 서독도 전후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복지국가를 형성했으니 동독인들도 이제는 스스로 살길을 모색해 보라고 권고하고 싶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이해 부족은 일종의 적개심에까지 이루어졌고, 결국 정신적 분리를 심화시켰다. 더군다나 서독의 모델이 여러 분야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신탁관리청의 민영화작업이라든가 서독의 행정구조, 판사, 검사 등의 동독으로의 이전 등이다. 이것들은 구동독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외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느끼게 했다.⁹⁾

서독 소비문화의 동독에의 투여는 동독인으로 하여금 문화 및 소비쇼크로 받아들여졌고, 동독인의 정신문화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로부터 생성된 동서간의 내적갈등은 근본적인 내적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고, 구동독인들에게 있어 통일이전의 기존 생활감정에 대한 보전의식이 짝뜨기까지 했다. 따라서, 내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구동독 생활감정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증대했다.¹⁰⁾

이러한 내적 통일이 아니라 내적갈등은 정치적으로 표출되는데 1999년 9월 27일 선거에서의 민사당(구동독 공산당의 후신)의 선거성파에서 알 수 있다. 이 선거에서 민사당은 전국에서 5.1%의 득표율을 보여 의회에서 원내구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구동독 지역에서는 21.6%(1994년 선거에서는 18.8% 있음)라는 득표율을 얻음으로서 통독시 민사당의 존립이 시간이 갈수록 감에 따라 쇠퇴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내적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다룬 독일정부의 연구로는 1997년의 독일통일 현황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내적 통일의 저해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동독인들의 기본법에 나타난 정치적 가치질서에 관한 동의 부족.
- 서독인들의 구동독 권력구조 및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 및 이해부족.
- 서독인들과 동독인들 사이의 감정적 편견, 서독인의 교만 혹은 동독인들의 감사부족과 학습의지 부족.
- 동서에 있어서의 시민적 책임, 개인 아니시어티브, 공동의식 및 협조정신과 같은 통일 시민사회의 취할 원칙에 관한 이해부족.
- 종종 2등급시민으로 자기격하하는 구동독인들의 자기비하.¹¹⁾

9) Lothar Fritz, Irritationen im deutsch-deutschen Vereinigungsprozess, au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Das Parlament, B27/95 v. 30. 6. 1995, p.4.

10)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1996, p.54.

11) Ministerium des Innern(Hrsg.), Jahresbericht..., op. cit., p.11.

이와 같은 문화 갈등은 통일이 근본적 사회체제나 생활방식에서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서독체제의 동독에의 이입에 의한 결과로 보여지며, 서로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선행노력이 중요함을 각인시켜 준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이러한 흡수통일 조차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더욱이 서로 간의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은 절실한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이해는 구조적인 교육에 의해 가능한 바 독일의 경우 연방정치교육센터를 통한 동서독 주민에 대한 교육은 그 모범적 예라 하겠다. 이 교육센터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일방의 사고(서독)를 다른 일방(동독)에 전달하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동서통합에 의한 통일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단지 어느 한 쪽이 잘 못 배웠으니 다른 쪽의 체제와 생활을 공부하고 습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쪽 역시 잘 못 배웠으니 같이 하나되기 위한 학습을 하여 통일시민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이다. Deschooling은 여기에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되며 남북문제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구동독에서 2천4백만 마르크의 경비로 13,400회의 정치교육집회를 가졌고, 340,000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지방언론들을 위해 각종 세미나와 회의에 1,000명 이상의 기자들이 참가토록 했다. 또한, 동서독 시민들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상호간의 오해와 편견을 줄이는데 기여했다.¹²⁾

4.2 예멘

남북예멘 정상은 1972년 양국의 통일에 합의한 적이 있고, 그 후 1979년에도 통일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지만, 남북예멘의 사회주의 강경파와 보수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고, 양국의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통일논의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남북예멘 주민들은 산악지대, 항만, 사막지대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었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심하지 않았다. 특히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이슬람을 국교로 신봉하며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공통성은 통일의 기초를 형성하며 1989년과 1990년 초 남북예멘 지도층은 비공개로 통일협상을 진행하고 급속하게 통일을 선포하였다.¹³⁾

북예멘의 자본주의와 남예멘의 사회주의와의 통합은 합의에 의한 통일이긴 하지만 통일을 계기로 정부의 권한과 조직이 확대되자 상대적으로 부족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두려워한 부족장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다. 부족

12) 앞의 책, pp.53~54.

13) 김국신, 「예멘 통합 사례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

장들은 자기부족에 대해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정부는 부족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걸프전쟁을 계기로 부족세력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슬람 개혁당을 설립하고 반정부운동을 전개하였다.¹⁴⁾ 이들 보수주의자들은 곳곳에서 테러와 암살을 자행하고 주민들의 반정부 폭동을 사주하였다. 북예멘 지역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이슬람을 모든 법의 유일한 근원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며 소요를 일으키자 남예멘 지역에서도 사회집단의 시위가 빈발하게 되었다. 남예멘 주민들은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으며, 따라서 이슬람 문화가 독재적으로 지배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았다. 특히 통일에멘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아덴 주민들은 북부 보수주의자들의 불합리한 태도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남예멘 주민들은 통일 직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북예멘 주민들보다 더욱 심하게 겪었지만 통일정부에 대한 불만을 대체로 자제하는 편이었다. 남예멘인들의 반정부 시위는 걸프전쟁의 여파로 경제난이 심해지고 보수주의자들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정치적 폭력이 빈번해지면서 과격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반정부 시위,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주민들의 폭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표면적으로 악화된 경제사정과 불가양동에 있지만 근본원인은 남북예멘인들이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찾아 질 수 있다.

이렇게 예멘의 외적 통일은 남북예멘 주민들간에 정치·문화적 공동의식이 형성되기 이전에 남북예멘 지도층이 상호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달성된 것이다. 통일과도정부는 형식상 단일 정치구조를 형성하였지만 남북예멘 출신 관료들이 동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정부는 실질적으로 연립정부의 성격을 지녔다. 과도기간 중 남북예멘 출신 정치가들은 상호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대다수 예멘인들은 통일정부에 대해 정치적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남북예멘 군대의 통합이 완결되지 않아 남북예멘 출신 정치인들과 부족세력이 각기 독자적으로 무력을 보유하고 그것은 곧 1994년의 내전으로 연결되었다.

4.3 시사점

4.3.1 문화적 통일(내적 통일)의 중요성

독일의 외적 통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외부적 요소도 크게 작용했

14) John Myles, "Yemen's Growing Pains", Middle East International, no. 438 (November 20, 1992), pp.18~19.

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소는 내적 원동력에서 찾아질 수 있으며 1986년 문화협정은 민간교류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함으로써 외적 통일을 이룩하였다고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예멘에 있어 이슬람 문화의 공통성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북 민간인간의 접촉은 통일의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통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은 계속해서 내적 통일에 있어 진통을 겪고 있으며 예멘의 경우는 내전으로까지 치달았다. 이러한 내적 통일의 부재상황이 야기하는 갈등은 남북통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통일이 감상적으로 정부 담당자들에 의한 일시적 통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이해를 충분히 도출한 상태에서 갈등의 폭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증명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상적인 통일주의자들에 의해 성급하게 통일을 불러일으키게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남북간의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공간은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4.3.2 남·남 갈등의 최소화 필요

독일의 흡수통일이 자본주의 방식을 그대로 동독에 이입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서간의 갈등 소지를 없앨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 반면, 예멘은 부족장들의 권한이 강한 관계로 설령 합의에 의한 통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북·북예멘의 갈등소지를 내포하고 있었고, 급기야는 내적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로 1994년에 내전을 겪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남한은 흡수통일을 하기에는 대내외적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그렇게 진행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남북정부와 국민적 합의인 것 같다. 이런 상황은 남한이 남·남갈등의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남한의 보수세력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남한 보수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다. 통일특구는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통일특구의 입지와 공간구조

통일특구의 입지는 그 효과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동안의 교류협력 경험은 그 이전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체감 통일 교류 협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체

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까이 위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 동안의 교류협력의 입지결정은 주로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 단둥이나 연변과 같은 북·중 국경지역의 경제협력과 지식교류협력, 두번째는 중국, 호주, 유럽, 미국 등 제3국을 통한 협력, 마지막으로 평양 등 북한 내부지역에서의 협력 등이다. 하지만, 이들 교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은 멀게만 느껴진다. 이 장에서는 지리학적 입지이론을 사회·문화적 공간에 관해서 해석한 쇄신의 확산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입지 이론적 틀을 공고히 하고 통일특구의 입지를 남북접경지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통일특구가 가져야 할 공간적 의미들을 바탕으로 그것의 개략적인 도시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쇄신 확산 이론과 통일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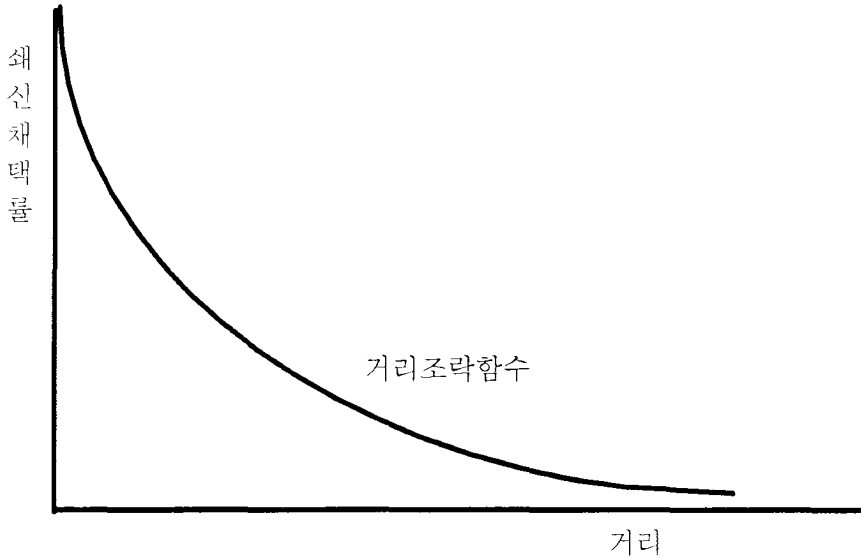
쇄신(innovation)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기존의 사회체제에 새롭다고 인식되는 아이디어나 인위적인 것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경우로서 발명과 모방의 아이디어를 모두 포함한다.¹⁵⁾ 통일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은 지난 반세기의 벽을 넘는 쇄신으로 규정될 수 있다.

모든 인간활동이 그러한 바와 같이 쇄신의 발생은 어느 한 장소 다시 말해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공간 위에서 발생한 쇄신은 공간 위에서 확산(diffusion)된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쇄신 역시 확산에 있어 공간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무작위적으로 진행되는 듯 싶은 교류협력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이 공간 확산 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건(여기서는 통일특구)을 북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15) 김인, 「현대인문지리학: 인간과 공간조직」, 서울: 법문사, 1986, p.202.

5.1.1 거리조락함수와 통일특구의 입지

〈그림 5-1〉 쇄신채택률의 거리조락함수



거리조락함수(distance decay function)는 쇄신의 확산에 있어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쇄신이 거리에 따라 확산하는 정도가 다르며, 거리가 멀면 멀수록 확산의 정도는 낮다는 것을 알려준다. 거리는 정보의 전달에 있어 장벽 또는 마찰의 요인이 된다. 쇄신의 확산은 직·간접적으로 주고받는 자 상호간의 접촉이나 연락이 있어야 함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확산의 정도는 다르다. 여기서 거리는 물리적 거리보다는 시간거리가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 예전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산이나 강은 시간적 거리를 멀게 함으로서 쇄신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역할하였다.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 역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강(비무장지대)에 의해 차단되어져 왔으며, 확산의 길을 우회적으로 3국을 통한 교류협력 이라든가 북한의 북쪽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극복되어야 할 거리가 이미 먼 곳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쇄신의 확산을 위한 접촉빈도가 줄어들 소지를 안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쇄신의 확산을 남한 쪽에서는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것은 남북교류협력은 남한과 북한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쇄신이어야지, 어느 한 쪽이 자기의 우월성을 확산하려는 시도여서는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확산을 가져오기도 힘들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평양에서의 남쪽 인사들의 강제적 3대 헌장 기념탑 방문이 남한 내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남한의 교류협력에 제동

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쇄신의 불확산이라 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은 자본주의의 확산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본주의는 그들의 선택사항이며, 남한의 민중들에게는 북한과 가까이하고 있다는 공간상의 증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쇄신의 확산을 위한 장소 역시 상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장소 이어야 하며, 3국이나 북한 북쪽의 접경지역이 아니라 가급적 북한 동포나 남한 민중이 동시에 쇄신의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함을 이 거리조락함수는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리조락함수에 따르면, 시간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이나 통신의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져 있다면 물리적 정치적 요소에 의한 장벽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경우 항상적인 집속공간이 확보되어 있던 관계로 서로간에 비슷한 도시 환경을 보여주었고,¹⁶⁾ 1986년 문화교류협정 이후에는 TV 시청이 자유로와 동독의 주민들이 쇄신의 팽창확산을 통해 서독의 흡수통일이 가능했었다. 현재 남북한의 관계에서 문화교류협정은 상대적으로 번 일이라면 통신의 부분보다는 교통의 요소가 더 중요시되므로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남북접경지역 만큼 남북교류협력을 남북한 민중들에게 동시적으로 최대화 할 수 있는 곳은 없다.

5.2 남북접경지역과 통일특구

국토연구원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아래 통일 과정이나 이후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간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인데, 이 논문은 그들 가상적인 남북접경지역에서의 전략지역들을 살펴봄으로서 가능한 통일특구의 입지를 선정해 보며, 추가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유추해 본다.

5.2.1 국토연구원의 남북접경지역 연구

국토연구원의 개괄적인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정의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한 비무장지대의 남북한 주변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심개발 전략지역의 선정은 지형과 교통을 중심으로 도시형성의 잠재력, 남북한 연계성, 대외충추기능, 지역생활권의 중심 등을 고려한다. 지형적인 조건은 가급적 평지 및

16) Strobel, R. W., *City Planning and Political Ideology in East and West Germany, 1949 to 1989: An examination of the Urban Design of Public Housing on Both Sides of the Wall*, Thesis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8, pp.279~280.

구릉지로 개발 가능면적이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며, 교통측면의 고려는 기존 도로 및 철도 통과지역으로 교통의 중심 축을 형성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남북한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지역이다. 이들 물리적 요소에 더해서 지역이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주변지역에 확산 효과를 가져옴으로서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거나, 평화시 및 공업단지 나아가 국제적인 경제특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 중심적인 입지 선정 항목이다.¹⁷⁾

〈표 5-1〉 대상지역의 비교평가

종 합	도시형성	남북연계	도로	철도	항만	중심성	대외중추
교동	0	0	0		0		0
월곶	0		0				
장단	0	0	0	0		0	0
장남	0	0					
철원	0	0	0	0		0	
해안	0	0					
현내	0	0	0		0		0

자료출처: 김영봉,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 『통일정책연구』 9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50.

이들 선정 기준을 통해 〈표 1〉이 구성되어 졌으며, 강화군의 교동지역, 파주시 장단지역, 철원군 구철원지역, 고성군 현내지역 등이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로 선정되어 있다.

교통의 조건중 도로와 철도에서 장단지구는 경의선과 국도 1호, 철원지구는 경원선과 국도 3호, 현내지구는 동해북부선과 국도 7호가 통과하며, 공항의 경우 장단과 철원지구가 김포공항 현내지구가 속초공항 이용이 가능하며, 항만의 경우 현내지구가 속초항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들 3개 지역은 구릉지 내지 평야 지대로서 도시 가용 면적이 많고 수도권에 가깝거나 남북연계망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되어 졌다.

5.2.2 북한지역의 추가

이들 전략지역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선정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통일특구에 대한 특수성 속에서 위의 3개 지역이외에 북한에

17) 김영봉,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 『통일정책연구』 9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49.

있는 지역들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통일특구가 전략적 개발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정치적인 이유들이 이 지역선정에 작용하는데, 북한은 체제위협 의 한계에 항상 직면해 있는 관계로 설불리 이들 3개 지역에 대응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3곳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지만 여기서 피력하는 것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지역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의 장소는 개성과 금강산 일 것이다. 최근의 남북 노동자 대회나 6·15 민족 대토론회에서 보여주듯이 북한은 남한과의 직접적 접촉보다는 북한 지역 안에서의 일회성 행사를 계획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교류협력을 이용하고 있다. 다분히 계산적인 이들 정치적 교류협력은 북한이 체제위협 의 한계를 벗어나는 틀에서 교류협력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통일특구의 위치를 정하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통일특구의 입지는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는 속에서 더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전개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러한 입지들이 남한에도 그렇게 해될 것이 없다면, 개성이나 금강산은 그리 나쁜 위치는 아니며, 현재적으로 이들 장소들은 어느 정도 남북간에 이미 교류를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가장 우선적인 남북간 개발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면 통일특구가 남북간에 인적, 물적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했을 때, 특구의 남북쪽 창구를 통한 인적, 물적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 지리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3 통일특구의 입지 원칙

남북접경지역에서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이들 사이의 쇄신과 확산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몇 가지 입지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인적·물적이동의 용이성, 비용효율성, 대북한 정치적 흡인력 등이 그 주요한 원칙으로 소개되어 진다.

5.3.1 인적·물적이동의 용이성

위에 영토 해결적 방식으로서의 통일에서 지적하다시피 그 위치 선정은 통일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은 만남의 용이성을 확

보하는 길일 것이다. 북한을 다루는 각종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북한이나 남한이나 서쪽 중심의 인구 경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을 주변으로 하는 인구 경제 밀집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성극화 현상이 그것인데, 남북한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은 서쪽 일대의 접경지역이 가장 그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논문은 꼭 서쪽 일대의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위에 제시된 중부 철원 지역, 금강산 지역, 동도 훌륭한 후보지로 간주하며 접근의 용이성이 확보된다면 서쪽 접경지역보다는 입지적 요건이 떨어 진다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5.3.2 비용 효율성

그 간의 남북교류에 있어 약속의 남발로 인한 기대의 상승으로 인해 남북 교류협력은 오히려 대 국민적인 신뢰의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가 그 가장 큰 예인데, 국제 정치적 이유가 물론 큰 이유로 지적되어 지지만 애초 실현 가능하지 않은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개성공단은 남한의 큰 비용부담을 안김으로서 정치적으로 남한정부를 더 곤욕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언제든지 정치적 변수가 생기어 유야무야 하는 것보다는 애초 자그마하지만 건설시기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그 파급효과가 큰 통일특구와 같은 건설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특구가 가져야 할 입지 조건은 비용 효율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 사용의 용이성과 사용 억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토지 사용의 용이성은 토지 사용을 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투기유발과 그로 인한 건설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건설 비용 중 약 90% 이상이 이들 투기성 토지 사용을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남한 땅보다는 서중동부 비무장지대나 개성이 그 좋은 위치로 부각된다. 특히 북한의 토지 사용은 중앙정부에서 관리 유지되는 바 투기자본의 형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무장지대 역시 형식상 유엔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한 중앙정부에서 관리되는 관계로 자본적 논리의 투기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 사용 억제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안보 문제와 관련 있다. 남한에 있어 토지 사용 억제는 자본적 논리의 투과속에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그린벨트라는 우리의 주요한 도시 팽창 억제 수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통일특구는 이러한 자본적 논리에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특구 주변에 관광특수산업을 형성함으로써 도시 팽창을 가져옴에 틀림없다.

또한, 한정된 공간 속에서 실험적 모델로 구상하는 통일특구에서의 인구이동, 다시 말해서 탈주자 또는 망명자들의 욕구를 이들 인접한 상업 거주공간이 부추김으로서 남북한의 긴장을 고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적리성이 이 특구가 지켜줘야 할 도시계획적 임무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이나 서중동부 비무장지대는 무분별한 도시팽창이나 안보문제에 있어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인구 이동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형편이며 그들이 자본주의적 경제특구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격리된 공간이 그들의 안보에 크게 우려를 끼치지 않으리라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또한 북한의 소규모 도시 지향적인 도시계획은 1960년대 이후 도시 팽창을 억제하는 주요한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장점은 남한내의 어떤 지역 보다 북한의 개성을 그 주요한 통일특구의 위치로 가능하게 한다. 비무장지대 역시 남북의 철책에 둘러싸인 관계로 도시 팽창과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로 부각되어 진다.

5.3.3 대 북한 정치적 흡인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응답이 떨어지면 질수록 우리가 제시하는 통일특구의 입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일반적 입지적 조건에서 서해안 비무장지대나 개성이 가장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택은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당장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남한 내의 장소는 그들의 체제위협적 상황에서 힘든 일이라고 이 논문은 주장하고 있고 실현 가능성을 최소화해 버리는 일일 것이라는 점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은 무엇일까? 현재의 그들 상황이 가급적 인구 집중 지역인 평양에서 원거리에 있는 개방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나진선봉 경제특구가 그러하고 금강산 관광특구가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거리조락함수를 확산의 정도를 축소하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통일특구의 입지는 그런 의미에서 서해안 보다는 금강산 일대나 중부 철원 지역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중요한 것은 꼭 이 지역이어야만 한다고 제시하기보다는 가급적 북한이 여러 대안 지역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4 통일특구의 디자인 원칙과 디자인

전환기의 통일도시계획은 과도기적인 도시계획으로서 통일이후의 전면적

인 통일도시계획과는 다르며, 무엇보다도 실험적 모델로서 통일이후의 과정에 남북한 정서에 부합하는 모델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특구의 디자인은 제 2장에서 언급되어진 V자의 우하향 곡선에 일치하도록 고안되어 지는데 다음 네 가지 원칙은 공간의 제한성에 더해서 디자인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5.4.1 선거주 후체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통일특구는 남북한 동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로서 서로 간의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을 한꺼번에 한 거주공간에 거주토록 하려면 많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입법, 경찰, 교육, 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이 먼저 연구 검토 되어야 하고 이것들의 연구과정과 남북한간의 토론과정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와 남북한간의 토론과정은 이 시범적 특구에서 시행하고자하는 것이 특구의 목적이며 최대한 한꺼번에 모여 살게 됨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를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선거주 후체제정비의 원칙을 통해 세부적 사항은 그 생활공간 안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거주공간의 분리는 초기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이것을 여기서는 구획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1950년대의 베를린은 장벽이 없이 서로 간의 이동은 비교적 허용되는 편이었으나 거주 공간이 서쪽과 동쪽으로 구분되어 있어 모든 정치 경제적 상황이 이분화 되어 있었다.

5.4.2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도시계획

문화적 차이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의 초 중 고등학생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고생 42%가 6·25 발발 년도를 모른다던가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40%에 달했다.¹⁸⁾ 새로운 세대는 실리적 차원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며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감각은 점차 사라지는 듯하다. 한편 이와 비슷한 때에 조사된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는 남북관계의 시급한 과제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33.9%)를 지적함으로써 문화적 차이 극복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27.6%),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17.7%), 남북경제협력 활성화(16.4%)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⁹⁾ 이들 두 다

18) 빈 뉴스 매거진 「포브틴」 설문조사 주제: 남북관계와 통일

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설문조사 제목: 정상회담 이후 지난 1년간 대학생들의

른 설문조사는 현재의 문화적 이질성이 심각한 상황이며 만남의 장이 전심히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며 여기서 제안되어지고 있는 통일특구는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실행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의 내용적 구체성은 가장 저 단계로부터 출발하여야하며 이 논문에서는 캠퍼스 타운으로 그것의 실용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캠퍼스 타운의 장점은 보다 적은 인력을 통해 다각적인 분야의 연구 토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이질적인 많은 분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타운의 중앙에 대학과 연구소를 동시에 건설함으로써 남북한의 기주공간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5.4.3 지방 자치적인 도시계획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공히 중앙집권적인 정치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의 영향은 남북한교류가 자칫 경협이 그러하듯 국내외적 요소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통일특구의 경우는 가급적 이들 중앙정치에 영향받지 않는 조건 속에서 그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조건의 창출은 경제적 자율성과 토지이용의 권한 확보 속에 자치의 상당부분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자율성은 관광이라든가 학교 벤처기업의 수익에 관해 통일특구의 가칭 남북특구위원회가 관리하며 모든 수익의 학교 재정관리에 필요한 재투자와 주거지역의 시설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²⁰⁾ 또한 경제적 자율성을 위해 남북특구위원회는 남북한 정부 또는 민간의 초기 건설 투자 자본에 대해 상환할 수 있어야한다. 토지이용 역시 이러한 의결기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남북한 중앙정부가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서로 다른 토지이용 체계를 경험한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토지이용 체계의 사용을 자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서로 간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디자인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면 남북한 구획의 적절한 배치에 의해 중앙의 역할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50년대의 베를린은 구획을 동서로 구분하는 양분법이 시행되어졌는데, 이 양분법의 문제는 중앙 정치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1960년대의 장벽 건설에서 보여준다. 통일특구는 서·동독이 동서를 남북으로 선

통일의식 변화와 김정일 위원장 서울 답방.

20) 남북특구위원회는 특구의 남북협업체로서 전체적 특구의 제반 문제를 남북한 농수의 대표자들이 의논하는 기구이며, 책임과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특구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이다. 특구가 캠퍼스 타운이기 때문에 초기 교수 대표자들에 의해 운영될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구획간의 통일이 달성될 때 선거에 의한 시장 선출과 사법, 입법, 행정부의 구체적 분할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을 가르는 것에 반해서 가급적 여러 구획들을 설치함으로써 남한 거주지역과 북한거주지역을 서로 서로 이웃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중앙의 간섭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계획될 필요가 있다.

5.4.4 문화관광과 비용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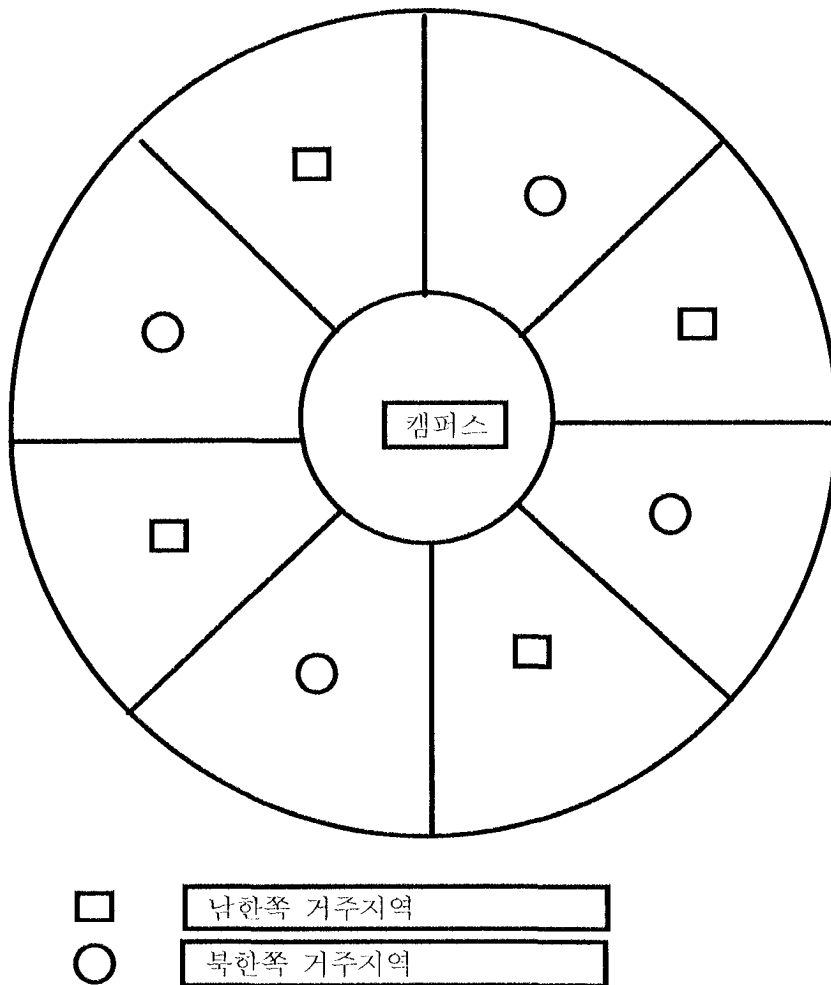
통일특구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비교적 자립 자족적인 공간의 형성이 그 주된 경제적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 특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남북한 일방 특히 남한의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연관광에서 문화관광이라는 세계적 관광 추세 속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통일문화라는 요소는 국내적인 관광수요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현재적으로 경협이 상대적으로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 치중한 반면 통일특구는 비용효율적이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개성공단이 비교적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와 건설을 필요함으로써 비용면에서 초기자본의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통일특구는 초반기 교육이나 연구 사업 위주로 편성 될 것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한의 경제 위기 속에서 무리한 투자를 공단에 투자하기보다는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통일특구는 훨씬 더 경제적이며 장단기적으로 입장로나 문화관광 특수를 통해 특구 유지수입을 올림으로서 자체적인 자립 기반들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 이후에 공단 조성에 필요한 사회 간접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지금의 남북한 경제 난국 상황을 풀어 나가기 위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천년고도인 개성에 공해 유발 산업인 임·가공업을 유치하여 지정학적으로 바람이 잘 안 통하는 지역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일 것이다. 지식 기반 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서해안 통일특구의 초기 교육 연구 사업은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 현재 서울과 평양 인근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분산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원칙을 통해 <그림 5-2>와 같은 캠퍼스 타운의 대략적 모습이 그려 질 수 있으며, 이외의 해결해야 될 과제는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문제는 구성원의 초기 신변 안전문제와 구성원의 특구 바깥으로의 망명과 같은 정치적 사항이 민감한 문제들인데, 자칫 특구 자체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초기 신변 안전문제는 양 중앙 정부의 경찰인력들이 각 자기 남북한 구획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민생치안에 그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망명의 문제는 남북한 구성원들이 거

주할 때 망명자에 대한 신변의 본국 송환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서 근저부터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통일특구의 개념적 디자인



6. 결론

6.1 요약 및 토론

남북통일의 역사에 있어 6.15 남북정상회담은 가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나 시대에 맞는 통일논의의 부족은 우리 한민족에게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지도 모른다. 이 논문은 남북교류협력의 현 시점을 일대 전환기로서 파악하며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남북한 공동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제 2 장에서 전환기의 북한 도시 및 지역계획은 현재의 북한 발전 방향이 개방의 추세임을 명확히 밝히며, 현재 북한이 체제위협과 경제증진과의 갈등에 놓여있는 관계로 가급적 특구 위주의 개방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북한내부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고 더욱 더 많은 개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남한측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통일특구는 장기적으로 문화적 갈등의 최소화를 통해 북측의 개방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라고 설명한다. 물론 대외적(특히 대미관계) 요소가 현재의 통일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은 우리에게 적절한 통일 대응방안을 마련할 곳을 요구한다.

제 3 장에서는 기존 통일논의가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파악하는데 그 하나는 상층부 위주의 통일논의이고, 둘째는 구체적 대안이 없는 통일논의 이다. 아래로부터의 통일논의가 현 시점에서 중요하고 긴요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 대안으로서 통일특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제 4 장에서는 앞에 2, 3 장에서의 통일특구에 대한 제안을 증거보충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예로서 독일과 예멘의 통일 사례를 연구 분석하고 있다. 두 나라에 있어 외적 통일이 내적 통일로 이루어진다는 공식은 성립되지 못하며, 문화적 통일 또는 내적 통일은 아직은 요원한 상태인 것 같다. 두 나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큰데, 그것은 내적 통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가를 교훈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적 통일 마저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금을 내적 통일의 기회로 삼아 나간다면 감상적 통일에 의한 외적 통일보다 훨씬 빠르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일의 길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내적 통일의 길을 확보하기 위한 길로서의 통일특구에 대한 입지 요건들을 분석하였는데, 입지적 조건이 가장 우수한 곳은 남북한 접경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한 이유로는 거리가 멀 경우 남과 북의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장

최근의 예로 8.15 방북단의 평양 방문이 북한의 정치선전 수단으로 사용되어 짐으로써 공식적으로 합의된 바 있는 3대 현장 기념탑의 방문 취소를 무시한 채 북한이 이를 강행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그것일 것이다. 서로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상태는 거리 조절에 있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으며 가급적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이 논문은 지적한다.

6.2 기대효과

6.2.1 단기 기대효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 방문은 6·15 회담의 결정적 증거로서 김대중 정부의 향후 정치 일정을 좌우 할 것이다. 경제적인 악조건 속에서 유일한 정치적 돌파구인 이 방문의 성사는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경제협력은 담보상태이며, 민간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이산가족 상봉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상층부 위주의 통일 논의가 가져올 수 밖에 없었던 한계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며 교류협력의 새로운 차원의 모색을 필요로 한다.

남북한 정상회담은 새로운 차원의 모색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 남한 입장에서 북한의 의중을 통찰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체제위협 요소의 분석과 경제증진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북한이 현재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경제·특구와 관광특구를 건설하고 경영하는 것이다. 남한 역시 가급적 협력 자체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때 그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남북한 교류의 명분은 북한의 특구정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남한의 특구정책이다.

통일특구에 대한 제안은 북한의 특구우선정책에 대한 남한의 방편으로서 제시되어 질 수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특구는 남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교류협력의 상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원거리 특구정책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남북한 통일특구는 남북한 정상의 의제가 되기에 충분하며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의 단초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6.2.2 장기 기대효과

통일특구는 정치적으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통일논의에 있어 일

회적·추상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 정책을 실시하게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특구는 대외적으로 분단이 갈등보다는 화합의 상징으로 내비치도록 함으로서 동북아 갈등의 일정정도 해소에 공헌 할 것이며 세계의 평화 공존 지대로 자리 매김 하도록 기능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통일특구는 세계에서 남북한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화합 공간으로서 우리의 중요한 관광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세계적 관광 패턴이 자연 관광에서 문화 관광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 화합 문화공간은 세계인의 관심과 방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 남북한 이질화된 문화의 격차 해소와 통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경험을 토대로 장래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특구의 초기 형성에 있어 학교와 연구소의 형성이 주요한 바 현재 남한 내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박사학위 이상 고급인력의 반실업 상태를 상당히 경감할 수 있으리라 보이며 한국학의 세계화에 공헌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6.3 결어

남북한 공히 현실정치는 지배 구조의 유지와 그 유지를 위한 경제 사회 체제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현재적으로 그 지배구조에 대해 위협받고 있는 곳은 남한이라기보다는 북한이 더 강할 것이다. 북한에 있어 현재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남한과 중국 그리고 서방국가와의 외교적 결함을 통한 무역 파트너 늘리기 작업이 21세기초에 두드러진 현상이며, 혹시라도 그러한 개방정책이 북한 대중들의 자본주의화를 부추김으로서 자신들의 존재 기반들을 위협하지나 않을까 하는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해있다. 위의 독일의 예에서와 같이 대중의 자본주의화 내지 자본주의 물질에 대한 동경은 동독 주민들에게 라이프찌히에서 출발한 민중항거를 유발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했고, 그러한 항거는 곧바로 통일이라는 형태로 이어 졌다. 이것은 북한 정부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남한 정부도 위에 지적한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북한 주민들이 급작스런 통일이 가져다주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길 원할 것이며 그것의 완충적 설명지대로서 통일특구에 대해 매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 두 가지 통일특구의 기능은 지금까지 위에 설명한 것의 압축이며 통일특구의 장점들이다.

6.3.1 전면적 통일의 한계

통일특구는 전면적 통일에 대한 반대 급부적 의미이며 제한적 전술이라는

의미이다. 현재적으로 남북한의 전면적 통일은 서로 간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남북한 통일을 바라보는 학문적 그리고 일반론적 관점인 것 같다. 예를 들어, 남북한이 지금 통일을 이룩한다고 가정 할 때 몇몇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시피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인구이동을 억제한다 해도 서독이 동독에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가히 상상하고도 남는다. 그것은 남북한 공히 공멸의 길로 치닫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남북한 대중들은 전면적인 통일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통일특구는 전면적 통일논의가 자칫 불러올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3.2 완급 조절 기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일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우리에게 통일의 시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안이하게 느리지도 않은 매개체가 필요하다. 그것은 통일의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통일특구는 그 매개체로서 우리 남북한 정치 담당자나 국민 모두에게 통일되어 가는 과정과 우리에게 적합한 모든 제도적, 교육적, 사회·문화적 틀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한민족에 맞는 통일 방법과 시기를 보여줄 것이다.

사실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이고 북한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그 통일의 시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당국자나 대중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정말로 북한의 경제력이 그 시점이라는 평가됨이 될 때 적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일부 햇볕정책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적대적 상황은 집안에 호랑이를 키운 격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제안서는 공간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항상적인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서 통일특구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고, 남북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한 민족이고 피를 나눈 형제임을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 승화하여 진정 새로운 통일시대의 문화로 뛰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되기 이전의 동서 베를린에서의 문화교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며, 통일 이후에도 문화교류협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통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분명, 제한적이지만 장벽 없는 통일특구는 한국에 있어 남북한 문화의 용광로이며 통일을 이끄는 역사적 장소로 기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곽영훈, 사랑방 도시, 현대건축사, (1998).
- 김국신, 예멘 통합 사례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
- 김영봉,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 통일정책연구원. Vol. 9. No. 1. pp.33~62. (2000)
- 김원배외 4인, 동북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전략-열린 국토의 조성을 위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동북아, 남북교류부문). 국토개발연구원, (1999)
- 김 인, 현대인문지리학 : 인간과 공간조직. 서울 : 법문사, (1986)
- 리화선, "조선 건축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 (1989)
- 이상준, 개혁 개방에 따른 북한의 지역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원. Vol. 9. No. 1. pp.135~160. (2000)
- 이상준, 통일 이후 북한지역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및 도시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8)
- 이영기,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독일사례의 한국적용. 통일의 저력: 독일 반세기의 역동성. 서병철 편저. 도서출판 백산문화. pp.83~112. (1999)
- 이장희, 동서독 문화협정이 남북한 문화협정 체결에 주는 시사점. 통일의 저력: 독일 반세기의 역동성. 서병철 편저. 도서출판 백산문화. pp.331~362. (1999)
- 이재하,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지역균형개발 방안 모색, 한반도 평화정착의 제도화와 협력 증진, 제19회 통일문제세미나, (1996)
- 조진철, The Evolution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North Korea: 1945-1998. 박사학위 논문, Portland State University. (2000)
- 하경준, 북한의 도시규모 분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1995)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Bonn, S. 54. (1996)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n DPRK, Tabulation on the Population Cens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cember 31, 1993. (1995)

- Darwent, D.F. Growth Poles and Growth Centers in Regional Planning: A Review. In: Friedmann, J., and W. Alonso. (Ed.), *Regional Policy*. Cambridge, The MIT Press, pp.539~565. (1975)
- Dewar, D., A. Todes & Watson, V. *Regional Development and Settlement Policy*. London, Allen & Unwin. (1986)
- Die Welt v. 23. 7. 1998.
- Eberstadt, N., & Banister, J.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2)
- Forbes, Dean and Nigel Thrift. *The Socialist Third World: Urban Development and Territorial Planning*. Basil Blackwell Ltd. (1987)
- Friedmann, J. *Urbanization,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73)
- Han Kyung Hyung. "Estimation of Major City Population in Korea Using LADSAT Imagery".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Utah, (1985)
- John Myles, Yemen's Growing Pains, *Middle East International*, no. 438. (1992)
- Kirkby, R. J. R. *Urbanization in China: Town and Country in a Developing Economy 1949-2000*. A.D. London, Croom Helm. (1985)
- Lothar F. Irritationen im deutsch-deutschen Vereinigungsprozess, au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Das Parlament*, B27/95 v. 30. 6. S. 4. (1995)
- Murray, P and Szelenyi, I. The City in the Transition to Soci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8 (1), pp.90~107. (1984)
- Ponchaud, A. J. *Cambodia Year Zero*. Harmondsworth, Penguin, (1978)
- Strobel, R. W. *City Planning and Political Ideology in East and West Germany, 1949 to 1989: an Examination of the Urban Design of Public Housing on Both Sides of the Wall*. Thesis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8)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양 문 수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요약문】	187
1. 머리말	189
2. 북한 개혁·개방의 조건과 전망	191
3. 북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구조	198
4.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과학기술중시정책	205
5. 맺음말	219
※ 참고문헌	222

【 요약문 】

이 글에서는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 전략을 정리, 평가해 보고 이 전략의 미래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다만 '개혁·개방'과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축으로 해서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의 제변수는 크게 보아 ①국내 정치적 요인, 즉 개혁·개방이 물고 울 체제위협 요소의 통제가능 여부, 개혁 주도 전문관료층의 형성 여부 등, ②대외적인 정치·경제적 요인, 즉 미·일과의 관계 정상화 여부, 남북관계 개선 여부 등, ③국내 경제적 요인, 즉 열악한 SOC 및 협소한 내수시장 해소 여부, 개혁 초기 조건의 불리함의 극복 여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개방의 제변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경제적 요인은 중단기적으로 달라지기 어렵고 대외적인 정치·경제적 요인과 국내 정치적 요인은 중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힘들겠지만 소폭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제한적·점진적 개혁·개방을 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큰 틀로 보아서는 개혁보다는 개방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개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중단기적으로 개방의 폭이 대폭 확대되기는 어렵고 소폭 확대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북한의 개혁·개방의 제변수에 대한 검토를 통한 개혁·개방 전망 결과는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한 전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김정일 시대의 공식 개막 이후 북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핵심 요소는 컴퓨터이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①공장·기업소의 기술개건 등 과학기술의 전통산업에의 보급, ②정보화, ③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3대 축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

과학기술중시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 해서 기존의 경제개발전략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 소비 희생의 강제저축과 고(高)축적, 중공업 우선 정책, 자력갱생 및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정신적 자극 우선 원칙 및 대중노선과 같은 기존 전략의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즉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은 현 시점에서 보면 기존 전략은 그대로 둔 채 '과학기술 중시'라는 요소를 추가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 전략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개발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육성에 기초한 '도약형' 경제개발구상은 중장기적 과제 내지는 중장기적 개발전략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생산기반의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즉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이후에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중장기적인 것이다.

경제개발 전략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과학기술중시정책이 새롭게 등장, 기존의 경제개발 전략에 추가된 사실의 의미는 적지 않다. 이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의 방향성이, 제도(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변혁하기보다는, 즉 본직적인 경제개혁보다는 기술진보에 힘을 쏟는 쪽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에서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등장한 것은, 북한이 종전의 사상중시 유형에서 벗어나되 제도중시 유형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상중시 유형과 기술중시 유형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이 산업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이것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하지 않고서도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현재의 제반조건 하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첨단산업 육성책을 전개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IT인프라의 구축과 IT 장비의 확보, 전통산업의 생산 기반 정상화 등은 막대한 자본, 초기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북한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 스스로의 힘에 의한 기술발전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외부세계와의 협력이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성과를 좌우할 최대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 전략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열쇠는 기본적으로 북한측이 쥐고 있지만 한국측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1. 머리말

이 글은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 전략을 정리, 평가해 보고 이 전략의 미래상을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만 개혁·개방과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축으로 해서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동안 국내외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이른바 경제개발의 대안적 모델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중국식 모델, 베트남식 모델, 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 등이 그것이다.¹⁾ 이러한 논의는 특히 지난해의 남북정상회담과 올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상하이 방문 이후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러한 모델들은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 전략을 고찰하고 전망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다만 이들 모델들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혹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전제 또는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중국식 모델이든 베트남식 모델이든 개혁·개방의 국내외 조건, 개혁·개방의 추진방법의 면에서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본격적인 개혁·개방이라는 큰 틀은 다르지 않다.

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만 해도 그렇다. 이 모델의 특징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의 강력한 정부 주도의 성장, 수출 주도형 개발, 소수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투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전제로 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²⁾

따라서 북한이 중국식 모델이든, 베트남식 모델이든, 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이든 이들 모델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 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개혁·개방의 전망은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북한의 경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북한당국의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의 개막 이후 북한당국은 '과학기술중시'를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규정하는 등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북한당국은 과학기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 이 밖에도 ①스웨덴 모델, ②서독식 모델과 중국식 모델의 혼합형, ③아일랜드 모델, ④ 쿠바 모델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역시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중국식 모델과 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이다.

2)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로는 정갑영, "한국적 개발전략의 북한 적용 가능성 진단", 『통일경제』, 1999년 12월호를 들 수 있다.

동시에 올 들어서는 남북경제협력에서 제조업 분야의 협력은 지지부진한 반면 정보기술(IT)분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활기를 띠는³⁾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북한당국의 관심이 IT분야로 모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놓고 국내에서는 몇몇 선행연구들이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발전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다.⁴⁾ 북한은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보기술(IT)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축으로 해서 경제제건을 모색하는 이른바 '도약형' 경제개발 전략을 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⁵⁾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석들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북한경제를 둘러싼 제반 조건들을 점검해 보고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 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정책의 등장이 향후 북한경제의 진로와 관련,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예컨대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개혁·개방의 관련성이다. 또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얼마만큼 성과를 기둘 수 있을지 사전적으로 점검해 보고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제반조건은 무엇인지, 아울러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하 제2절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제변수와 그 전망을 정리한다. 이어 제3절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구조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과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관련성을 검토한 뒤 제5절에서 이 글의 논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3) 대표적인 것이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설립 추진, 남북IT합작회사인 하나프로그램센터, 평양 시내 벤처 단지 조성 등이다.

4) 예컨대 김근식(2000)은 생산 정상화를 위해 농업과 동력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는 '혁명적 경제정책'과 상기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김정일 시대의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3대 세일주의에서 과학기술중시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 2000 참조.

5) 김근식, 위의 글 및 배종렬, "2001년 북한의 경제정책방향과 남북협력의 과제", 통일경제연구협회 공개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001. 2. 최신립, "부시정부 출범과 남북경협 환경변화", 대한상의 제 2차 남북경협위원회 발표자료, 2001. 2. 홍순직, "김정일 총비서의 신사고와 북한의 개혁·개방", 『통일경제』 2001년 3·4월호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2. 북한 개혁·개방의 조건과 전망

2.1 개혁·개방이란

경제개혁이란 무엇인가. 경제개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정식화가 있을 수 있다.⁶⁾ 이 글에서는 경제개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즉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경제체도의 대폭적인 변경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의 이용, 혹은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이 그 변경의 핵심요소이며 동시에 집권적 시스템의 분권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다만 종래의 사회주의의 틀을 넘어설 정도의 경제체도의 대폭적인 변경은 '개혁'이라기보다는 '체제전환', '체제이행'이라고 불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집권적 계획경제에 있어서 경제개혁은 왜 필요한 것일까, 혹은 필연적인 것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집권적 계획경제가 언젠가는 벽에 부딪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구소련·동구·중국 등의 집권적 계획경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크게 뒤지게 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양면에서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고 생산성이 정체 내지는 하락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경제가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면에서 큰 문제를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집권적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 문제점의 대표적인 것이 ①처리해야 할 정보량과 실제의 정보처리 능력 사이의 극심한 불균형, ②사회내부에 존재하는 상이한 이해관계의 조정의 어려움이다.

이들 두 가지 요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구소련·동구·중국 등 현실의 사회주의 경제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심한 불균형으로 고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상부)에서 하부로는 명령정보가, 하부에서 상부로는 보고정보가 흘러감으로써 운영된다. 그런데 중앙이 개개 기업의 투입과 산출, 기업 상호간의

6) 예를 들면, 中兼和津次는 경제개혁을, 모든 면에서의 시장화(marketization)의 추진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中兼和津次, "經濟體制改革の推移と課題", 關口尙志ほか編, 『中國の經濟體制改革 - その成果と課題』, 東京大學出版會, 1992, p.28 참조. 또한 Kornai는 개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변화의 조건으로 첫째, ① 공식적 지배 이데올로기 또는 공산당 지배에 의한 권력구조, ② 국가소유권, ③ 관료적 조정 메커니즘 등의 3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에 변화가 발생하고, 둘째, 그 변화는 적어도 '적당히 급진적'(moderately radical)이지만 시스템이 완전한 변혁까지는 달하지 않을 것을 들고 있다.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61,388 참조.

생산제유통 등을 그 세목에 이르기까지 집권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가공·전달해야 하나 중앙계획기관은 그렇게 큰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중앙이 처리해야 할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중앙의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증대하는 정보량에 쫓아가지 못한다.

정보량이 정보처리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명령정보의 지연이나 명령정보간의 부정합(不整合) 등에 의한 혼란이 발생한다. 기업이 수행 가능하다고 사전에 판단한 명령(계획)만을 중앙 계획 당국이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중앙 계획 당국이 기업에 대해 계획당국의 명령(계획)을 실행하는 수단, 특히 자재·설비의 보장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기업이 단순히 중앙의 명령에 따르기만 한다면 실패(계획 미달성)할 확률이 매우 높게 된다.

사회내부에 존재하는 상이한 이해관계의 조정의 어려움은 이른바 '자극 비양립성(incentive incompatibility)'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앙의 계획당국, 중간적 행정기관, 기업 경영자, 노동자는 각각 목적함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자의 경우 목적함수는 보너스 등 물질적 이익의 획득,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신망의 유지, 현재의 지위 유지 내지 승진, 평온한 생활, 실패·저질 위험의 최소화이다. 그것은 전체 사회의 이해 또는 지도부의 이해가 반영되는 중앙의 목적함수와는 상당히 다르며 중앙이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하는 애국심이라든지 중앙 명령에의 복종 등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런데 집권적 계획경제는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오히려 중앙은 사회 내부에 상이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중앙은 기업과 개인의 이해가 사회전체의 이해와 합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은 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이해를 사회의 이해에 합치시키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이 그 요구에 따른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갖가지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이는 생산성의 정체 및 하락, 경제성장의 정체를 초래해, 경제개혁에 대한 내부적 압력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경제개방을 살펴보자. 대외경제개방은 다방면에 걸친 것이다. 이것은 ①사물의 개방 즉, 무역의 확대, ②자금의 개방 즉, 외국인투자 유치가 중심이다. 하지만 사람의 개방 즉, 해외에서 관광객이나 기업관계자의 방문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경제개방은 왜 필요한 것일까. 혹은 개방의 의의 내지 목적은 무엇

일까. 사회주의 제국의 경우, 국내자금부족 보충의 필요성, 기존기업의 낡은 기술, 설비의 개조, 효율화의 필요성과 같은 것들이 대외경제개방에 대한 압력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며, 또한 외국의 자본·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용이하게 자본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의 확대는 기업 또는 국민경제가 국제경쟁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제품이 국제시장에 수출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제품이 가격·질의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훨씬 심하다. 기업 또는 국민경제는 기술혁신이나 신제품의 개발, 제도개선, 산업간 자원의 재분배 등을 통한 생산성의 상승에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역의 확대는 국제경쟁압력에 의해 효율성의 개선을 강제하게 된다.

그렇다면 개혁과 개방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⁷⁾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과 개방은 수레의 양쪽 바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 세트로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개혁이라는 것이 효율화를 키워드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제도적 결함에 기인하는 내재적인 개혁압력이 한쪽에서 개방을 필연화하고 그 개방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개혁을 요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개혁(제도개혁)이 대외개방의 국내적 조건을 정비·제공하고 대외개방은 제도개혁을 국제적 측면에서 지원·촉진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2.2 북한 개혁·개방의 제변수

이때까지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아니 못했던 이유는 크게 보아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북한 개혁·개방의 제약요인이기도 하다.

첫째, 국내 정치적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몰고 올 체제불안의 위험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착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에서 경제개혁의 실시는 정치개혁의 실시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가능

7) 개혁과 개방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上原一慶, 『中國の經濟改革と開放政策: 開放體制下の社會主義』, 青木書店, 1987, pp.1320. 劉進慶, 『對外開放と開發戰略』, 山内一男·菊池道樹編, 『中國經濟의新局面: 改革의軌跡と展望』, 法政大學出版局, 1990, p.183 참조.

성이 큰 바, 최고지도자와 지배 엘리트들은 이 점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본격적인 경제개혁·개방을 전개한다는 것은 기존의 경제정책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아버지인 故김주석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으므로 자신의 권위의 원천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경제개혁·개방의 전개는 극단적으로 보면 김주석에 대한 부정, 따라서 자신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최고권력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사태전개이다.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경제개혁이 일단 시작되면 주민들은 필연적으로 정치개혁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달리 보면 개혁·개방은 시장주의적 요소 혹은 자본주의적 사상의 북한 내 유입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원적 요소의 유입은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북한의 일원적 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북한의 현재의 정치권력구조, 나아가 체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경제난의 체제 위협 정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수준도 개혁·개방을 제약하는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북한 지도부는 경제난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는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었다고 판단, 위협부담이 수반되는 개혁·개방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개혁·개방 추진을 위한, 지배 엘리트와 이데올로기상의 변화의 어려움 등이 개혁·개방을 제약하는 국내정치적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테크노크라트층이 출현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상·군사 엘리트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 체제의 사상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에 어떤 형태로든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까지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두 번째 원인은 대외적인 정치·경제적 요인이다. 국제적으로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데다 체제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외국자본에 대해 문을 활짝 열기도 힘들었다.

지난해부터 EU 국가들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국교가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미국 및 일본과 적대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었다. 또한 지난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었으나 부시 행정부의 동장으로 벽에 부딪치고 있으며 일본과는 8

년 만에 수교협상이 재개되었으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사실 한국과도 작년의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는 오랜 기간 대결과 반목의 시대였다. 그리고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던 작년과는 달리 올 봄 이후 6개월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놓였다.

설령 북한이 문호를 개방한다고 해도 외국자본들이 선뜻 들어오기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실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의 대 북한 경제재조치도 완화될 리가 없고 북한이 갈구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 지원도 실현 불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니 북한에서 만든 물건들을 이들 나라에 수출하려 해도 관세상의 불리함⁸⁾ 때문에 수출의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이때까지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세 번째 원인은 국내 경제적 요인이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생산의 기본적인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이는 북한이 개방을 한다 해도 외국자본이 선뜻 들어오기 어려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력이 턱없이 모자라고 철도·도로·항만 등 SOC도 열악한 상태이고 자재난으로 인해 북한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자가 거의 없으며 기계설비는 낡은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당분간은 북한의 내수 시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단행할 당시 경제가 어려웠다고 하나 지금의 북한처럼 경제의 재생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난은 아니었음은 지적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이른바 개혁의 초기조건도 중국 등에 비해 불리한데 이는 북한이 개혁을 한다 해도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동시에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전환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중국에 비해 계획경제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침투해 있었고 또 더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 이는 북한이 경쟁 촉진적, 시장형성 촉진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를 개혁의 초기조건으로 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⁹⁾

이렇게 보면 국내정치적 요인은 개혁·개방에 대한 착수 그 자체를 직접

8) 미국이 현재 북한에 적용하고 있는 'Column 2' 관세는 정상 교역 관계(NTR)나 일반특혜관세(GSP) 대우를 받는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Column 1' 관세보다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까지 높은 수준이다. 'Column 2' 관세는 수출 금지 관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섬유·의류, 전기·전자제품, 신발·가방·완구 등을 놓고 보면 북한산 제품의 대미수출은 경쟁상대인 중국제품에 비해 수출단가(FOB기준)면에서 30~50% 정도 불리하다. 일본·EU 시장도 상대적일 높은 관세로 제약이 많다. 북한은 최혜국 대우를 부여받지도 않고 있으며 WTO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자세한 것은 양문수, "북한과 중국의 계획화 시스템의 비교", 『경제학연구』, 제49집 제1호, 2001을 참조.

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고 국내경제적 요인은 개혁·개방의 성과를 제약함으로써 개혁·개방을 간접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며 대외적인 정치·경제적 요인은 이들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개방의 저해요인들로부터 북한의 개혁·개방의 제변수들을 도출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북한 개혁·개방의 제변수

구분	내용	성격
국내정치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개방이 몰고올 체제위협요소의 통제가능 여부 - 경제난의 체제위협정도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수준 -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관료층의 형성 여부 - 개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상의 변화 여부 	개혁·개방에 대한 직접적 변수
대외 정치·경제 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여부, 테러지원국 해제 및 경제제재 해제 여부, 국제금융기구 자금지원 여부 -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일수교 배상금 유입 여부 - 남북관계 개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협 활성화 여부 	개혁·개방에 대한 직접적 및 간접적 변수
국내경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경제난, 열악한 SOC의 해소 여부 - 개혁의 경제적 초기조건상의 불리함 극복 여부 	개혁·개방에 대한 간접적 변수

2.3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이러한 개혁·개방의 변수들에 대한 관찰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망하는 데 유용하다. 즉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개방의 변수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 경제적 요인은 중단기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 북한당국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차원의 것이 아니다.

대외적인 정치·경제적 요인은 북한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나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외관계 개선의 핵심 고리라 할 수 있는 북미관계가 풀려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큰 관건이다. 북한은 체제 생존과도 직결되는 핵·미사일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¹⁰⁾ 북미관계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는 한 북일관계도 진전되기 어렵다. 다만 북한과 EU간의 관계는 최근 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정치적 요인은 북한 당국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이기는 하다. 최근의 몇 가지 움직임은 보면 북한 지도부는 이 요인을 부분적이거나 변화시켜 보기로 마음을 먹은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올 1월의 중국방문에 군부 등 지배 엘리트층을 대동해 개혁·개방의 현장을 보여준 이유의 하나도 개방의 공포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김 위원장이 방문한 상하이의 발전상을 TV를 통해 보여준 것도 북한이 나아갈 길을 주민들에게 암시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보도매체들이 이른바 신사고(新思考)와 관련, 20C를 김일성의 세기, 21C를 김정일의 세기로 주장하고 1960년대와 현재의 상이함을 강조하는 등 김정일 시대와 김일성 시대에 일정 정도 선을 그으면서 운신의 폭을 확대하고자 시도하는 조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그리고 북한의 최근 몇 달간의 움직임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조짐이 보이는 듯 했던 올 초보다 상당히 가라앉은 듯한 인상이다.¹¹⁾

이러한 제반상황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변화 움직임은 개혁·개방의 관점에서 전망한다면 제한적·점진적 개혁·개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식이 아니라 북한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이면서 동시에 지그재그식, 즉 진행시키다가 체제위협요인이 커지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속도를 떨어뜨리고 다시 생각해 보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 중단기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테러사태여파이다. 지난 9월에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가 발생했고 10월에 미국은 아프간에 대한 공습으로 맞받아쳤다. 미국이 테러에 대한 본격적인 응징전을 시작했으나 미국은 모든 국가역량을 '전쟁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더욱이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미대화의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며 북미관계도 당분간 별다른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 조종련(제일본조선인총연합회)측은 올 초 북한의 움직임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아니라 '우리식대로의 주체노선의 전면화'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즉 조종련 기관지 조선신보 2월 9일자 사설에서, 지난 1월의 김정일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을 중국식 개혁·개방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외부의 견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이다. 이 신문은 또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성공업단지 등이 곧 개혁·개방 정책의 도입과 국내 경제체도의 재편이라는 결론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날은 사회주의 시장이 존재하던 지난날과 달리 사회주의경제도 자본주의경제와 자본, 금융, 기술, 무역 등 여러 형태의 연계가 불가피하지만 북한은 자본주의의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더라도 중국식의 정책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북한이 급진적인 개혁·개방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개혁·개방의 대외적 정치·경제적 요인과 국내 경제적 요인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급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정책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은 큰 틀로 보아서는 개혁보다는 개방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개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개방이 개혁보다 체제위협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더욱이 북한은 현재 경제의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므로 경제개발을 위한 자원을 외부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개방이 개혁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중단기적으로 개방의 폭이 대폭 확대되기는 어렵고 소폭 확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개방 확대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중국·한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경제특구의 추가지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경제특구 내에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 여부, 외국기업의 자본주의적 경영의 허용 여부 등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3. 북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구조

3.1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등장

김정일 시대의 경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다. 이른바 과학중시사상, 과학중시정책이다.

북한은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해 1월 김정일 위원장이 과학원을 현지지도한 이후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지칭했다.

나아가 2000년에는 과학기술이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까지 지위가 격상되기에 이른다. 이 해 신년공동사설은 사상, 총대와 함께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3대 목표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강국 건설의 핵심 정책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지도 하다.

그리고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은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며 과학기술중시를 재천명했다. 특히 올해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을 "현존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민경제의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改建)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

한편 북한이 현재 내세우고 있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한가운데에는 컴퓨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후술할 북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구조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겠지만,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행보로부터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중국 베이징 방문 때는 중국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는 중관촌(中關村)지역에 있는 련상(聯想)그룹의 컴퓨터 생산공장을 방문했으며 올해 1월 상하이 시찰 때도 IT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둘러보았다. 또한 지난해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도루슨트 테크놀로지사를 방문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기관지 조선신보 2월 16일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인민경제의 컴퓨터화를 실현할 데 대해서와 컴퓨터기술무역, 과학기술역량 보충문제 등과 관련한 친필지시를 최근 4개월 남짓한 기간에 무려 18번에 걸쳐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중시'는 국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반영되었다. 과학사업비예산은 1999년에 예산편성 기준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고 집행실적기준으로는 6.3% 증가했다. 이는 같은 해 북한의 전체 예산지출의 예산편성 기준 증가율(1.8%)과 집행실적 기준 증가율(0.015%)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2000년에도 이어져 과학사업비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해 북한 전체 예산지출의 예산편성 기준 증가율(1.9%)을 상당히 상회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문일봉 재정상은 올해 4월 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의 예산지출 편성과 관련, "과학기술 수준의 세계적 향상과 공장·기업소의 기술개건에 많은 자금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것들은 '과학기술중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과학기술중시정책은 '자력갱생'의 의미도 변화시키고 있다. 민주조선 올 2월 6일자는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간부들에게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떠난 자력갱생이란 있을 수 없다"며 "경제건설에서의 자력갱생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앞서 노동신문 1월 30일자는 "강성대국 건설의 새 세기에는 자력갱생의 요구도 한 단수 더 높여 요구한다"며 "오늘날 우리의 자력갱생은 최신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자력갱생"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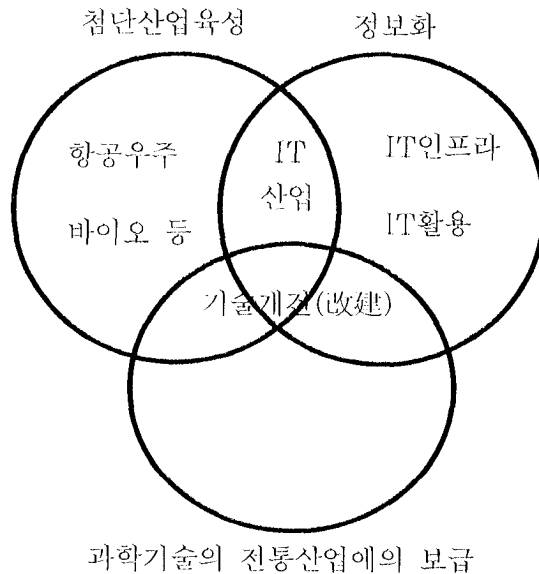
또한 북한은 올 초에 이른바 '신사고(新思考)'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

면서 모든 분야에서의 변혁과 혁신을 역설한 바 있는데 이 '신사고'는 과학기술 중시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일본조선인 중앙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월 18일, 북한이 연초부터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사고와 발상의 전환은 당의 정책인 과학기술중시사상에 입각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2 북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구조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지향점은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의 해결, 생산기반의 정상화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지향점을 가진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크게 보아 다음의 3가지를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 3가지 범주는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북한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구조



3.2.1 공장·기업소의 기술개건 등 과학기술의 전통산업에의 보급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첫 번째 축은 공장·기업소¹²⁾의 기술개건(改建)을 비롯해 과학기술을 전통산업의 생산현장에 보급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설명에 의하면 기술개건이란 공장, 기업소들을 새로운 현대적 기술로 장비를 갖추는 것이다.¹³⁾ 여기에는 이미 있던 낡은 기술적 장비들을 현대적인 기술장비로 바꾸는 것도 있고 종전에 없던 것을 현대적 기술에 기초하여 새롭게 꾸미는 것도 있다.

이러한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에 대해 올해의 신년공동사설은 “현 시기 경제사업의 중심고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표현했다. 또한 북한 과학원의 리광호 원장은 2001년 1월 2일의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과학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기술개건의 주된 내용은 노후설비의 보수·정비·교체와 생산공정의 자동화(현대화)이다. 북한은 현재 전 산업의 공장가동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장나거나 노후화된 기계 설비로는 공장의 정상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고장나거나 노후화된 기계 설비를 보수, 정비, 교체하거나 생산공정의 자동화(컴퓨터화)를 통해 생산기반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모든 생산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조작되는 최신설비를 갖춘 본보기 공장을 각 지역별로 건설하고 이 경험을 인근 공장들이 따라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개건사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각 도의 기초식품 생산기지, 평양시의 주사기 공장, 약품연구소, 타조목장과 대흥단군 감자 전분공장 등이 본보기 공장으로 건설되었다.

올해는 기존 공장·기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개건사업을 경제부문 중점과업으로 설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중앙 및 지방차원에서 다각적인 계획을 세웠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각 성이 제출한 계획에 입각하여 기술개건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각 시·도도 지역특성에 맞게 관할 주요 공장·기업소의 기술개건사업을 금년도 중점 경제목표의 하나로 설정했다. 예컨대 함

12) 북한에서 ‘기업소’는 “경영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로 정의된다. 공업부문의 기업소는 공장, 광산, 탄광 등과 함께 인민경제의 기층단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차이도 있다. 즉 기업소는 경영단위의 성격을 반영한다면 공장, 광산, 탄광 등은 생산의 조직기술적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소가 하나의 공장일 수도 있고 몇 개의 공장이 합쳐 하나의 기업소로 될 수도 있다.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302 참조.

13) 『경제사전 1』, p.290 참조.

경북도에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등의 설비 현대화가, 자강도에서는 운봉·위원 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설비 보수·정비가 올해의 기술개건사업 목표로 정해졌다.

북한은 이러한 공장 기술개건과 함께 전력난, 식량난 등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 개발과 이러한

〈표 2〉 2001년도 북한의 시·도별 기술개건사업 목표

평양시	만경대·서포 닭공장 등의 설비교체
함경북도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등의 설비 현대화
함경남도	룡성기개연합기업소 등의 생산공정 현대화
자강도	운봉·위원 발전소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 설비 보수·정비
평안남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설비 보수·교체
황해북도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기존설비 교체

자료: 통일부

기술의 생산현장에서의 보급을 독려하고 있다.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부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성과의 선전, 개인·단체에 대한 상훈수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각 부문의 기술발표회, 과학기술축전 등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3.2.2 정보화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두 번째 축은 이른바 정보화이다. 이는 IT산업의 육성·발전, IT인프라의 구축, IT기술의 활용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IT산업의 육성부터 살펴보자. 북한은 IT산업의 육성을 위해 김정일 시대 개막 이후 컴퓨터 인력의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그동안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하드웨어 분야보다는 인간의 두뇌와 창조력만 있으면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해왔다.

지난 1999년 김일성 종합대학에 컴퓨터 과학대학을 신설한 데 이어 평양·함흥 전자계산기 단과대학을 컴퓨터 기술대학으로 개편했고 각급 대학에 컴퓨터 공학과와 정보공학과, 정보공학 강좌들을 개설했다. 또 지난해에

는 전국 고등중학교 학생 컴퓨터 프로그램 및 타자 경연(2000.11~12), 전국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2000.11)을 실시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컴퓨터 분야의 조기 영재교육에도 착수했다. 지난 4월 1일 새 학기에 맞추어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평양 학생소년궁전, 평양 금성제1고등중학교 등지에 컴퓨터 수재 양성반을 신설했다.

동시에 북한은 특히 90년대 들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IT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통신시설 확장과 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98년까지 평양~함흥간, 평양~신의주간, 신의주~평안북도내 16개 시, 군 및 노동자구(區) 사이에 광케이블 공사가 완료되었다. 아울러 97년 말까지 평양과 70여 개 시, 군간의 교환기가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북한측은 밝히고 있다.

IT기술의 활용은 북한측의 용어로 하면 '인민경제의 자동화, 컴퓨터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1) 생산 및 공장의 자동화이다. 이는 컴퓨터를 이용해 개별적인 동작기계를 숫자조종화(수치제어)하거나 하나의 흐름선 및 공정들에 유연생산체계(자동화공정)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철소, 발전소 등의 중공업 부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건설된 기초식품공장, 닭공장 등 경공업부문에서도 컴퓨터가 도입되고 있다.
- (2) 컴퓨터 네트워크(인트라넷)의 구축이다. 내각의 각 성(省), 위원회, 중앙 직속기관, 각 보도단위 등이 자체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경제부문에서는 지역별·부문별 컴퓨터망 체계가 개발·운영됨으로써 경영업무를 컴퓨터로 자동 처리하고 있다. 또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전화통신망이 정비됨에 따라 개별적 컴퓨터나 기관·단위의 컴퓨터망을 서로 연결, 통합정보처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내각과 성 및 중앙 기관, 도·시·군급 기관, 기업소간 장거리 통신망을 연결해 컴퓨터 네트워크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동시에 경제부문의 지역별·부문별 컴퓨터 네트워크와 장거리 데이터 베이스, 대학 기관별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해 국가적 규모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것이 97년부터 도입된 '광명'이다. '광명'에 기초한 광역 전산망에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김일성종합대학·인민대학습당·내각·중앙기관 등 기관망, 각 도 지역 중심망, 각지 과학연구 기관·대학·공장·기업소들의 개별적인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광역전산망을 통해 광명프로그램을 이용한 과학기술자료 검색을 비롯하여 전자우편(혜성), 파일전송(자료섬), 전

자소식(별무리), 현대과학기술용어(7개국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지난 한해동안 '광명'에 가입한 말단 컴퓨터 대수가 99년에 비해서 1.7배 이상으로 늘었고 최근 2년 동안에 컴퓨터망의 규모가 4.6배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¹⁴⁾

올 들어서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농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등장, 주목을 끌고 있다. 평안남도 안주시는 올 1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안주시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와 시내 협동농장들 사이에 컴퓨터망을 형성했다. 그리고 안주시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과 연결된 컴퓨터망을 통해 날마다 실태를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각 협동농장을 지도하게 되었다.

- (3) 산업 이외의 분야, 즉 문화·교육·체육 등의 분야에서의 컴퓨터 기술의 활용이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움직이는 화면을 컴퓨터로 만드는 다매체기술이 영화제작에 도입되고 관현악을 컴퓨터 음악으로 연주하거나 작곡·편곡하는 악보프로그램 등이 개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과학교육부에서는 과학기술 계산 프로그램과 외국어교수 지원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으며 체육부문에서도 선수활동 평가 및 영양 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다.

3.2.3 첨단산업 육성과 '도약형' 경제개발 구상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세 번째 축은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육성·발전이다. 북한은 지난해 당 창건 55돌을 맞이하여 발표된 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을 언급하면서 “전자공학, 생물공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첨단분야를 빨리 발전시키면서 전자 자동화 공업과 컴퓨터 공업 발전에 힘을 쏟아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북한 당국과 한국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평양에 설립하기로 합의한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도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IT, 바이오 등의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언제부터인가 과학기술발전과 관련, '비약'이나 '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4일 근로자·노동신문 공동논설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단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들이 걸어온 단계를 순차적으로 답습하기만 한다면 언제 가도 남을 따라 앞설 수 없다. 우리 당의 과학 중시 사상은 기성관례나 기성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과학기술발전에서 비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들이 몇 백

14)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524호”(2001.1.27~2.2) 참조.

년 동안에 한 일을 짧은 기간에 이룩하며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것을 창조해 나가려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7일자 노동신문 정론도 "우리는 단번 도약의 본때를 이미 밟아왔다.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 1호의 탄생도 그것이었고 토지정리의 천지개벽도 그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도약형' 경제개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첨단산업, 즉 IT, 바이오 등에 국내외 자본과 기술을 집중 투자, 이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향후 북한 경제개발전략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재건을 위해,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전통적인 산업발전단계를 밟지 않고 곧바로 첨단산업으로 직행한다는 구상이다. 달리 보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식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이다.¹⁵⁾

4.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과학기술중시정책

4.1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위상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은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기존의 경제개발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경제개발전략'을 경제개발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정책의 체계로 정의하기로 한다.¹⁶⁾

북한체제의 장기적인 목표는 '사회주의의 건설'과 '체제의 생존'으로 요약할 수 있다.¹⁷⁾ 때문에 경제개발의 목적은 국력지향적 경제발전¹⁸⁾으로 압축된

15) '도약형' 경제개발 구상은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연구자들과 언론의 해석, 관측이다.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북한당국이 실제로 이러한 '도약형' 경제개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대북 사업을 위해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한국기업 관계자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최근에 북한측으로부터 이러한 구상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하고 있다.

16)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발전략 내지는 경제발전전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북한의 경제개발전략 내지는 경제발전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질 수는 있다.

17)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주요한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Gregory, P. R. and Stuart, R. C.,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Boston: Houghton Mifflin, 1980, pp.360~361 참조.

18) Eckstein은 개도국의 경제개발 목적을 사회복지 지향형과 국력지향형으로 구분한 적이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계획시스템이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 경제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소비를 희생시켜 높은 수준의 축적을 달성, 축적된 자금을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켰다.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은 자력갱생 및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며 이를 위해 정신적 자극 우선 원칙 및 대중노선에 입각해 주민들을 동원해왔다.¹⁹⁾ 북한은 1950년대에 등장, 60년대에 체계화된 이러한 경제개발전략의 기본골격을 김일성 시대에 수십 년간 유지해왔다. 더욱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개발 전략이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경제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이다.

다만 90년대 중반에 잠시 기존의 경제개발 전략에 변화가 발생하는 듯 했다. 북한은 제 3차 7개년 계획(1987~93년)이 실패로 끝난 뒤 3년간의 완충기 기간에 '3대 제일주의', 즉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 이른바 '혁명적 경제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기존의 중공업 우선 정책과 축적 우선 정책을 다소 수정해 인민들의 기본 니즈 충족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완료한 98년부터 사실상 종전의 전략으로 회귀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98년부터 3대 제일주의라는 용어는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강조만 남겨둔 채 경공업과 무역에 대한 강조는 사라지게 되었다. 아울러 9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97년까지 언급되었던 '혁명적 경제전략'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그 대신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에 힘을 넣는 것이 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98년 이후 중공업 우선 정책과 자립적 민족 경제노선을 다시 강조하고 있으며 '강계의 혁명정신', '제 2의 천리마 운동' 등 자력갱생의 정신에 입각한 대중노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경제관리 방식을 조금 개선해 보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있다. 예컨대 농업에서는 98년에 주체농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농업생

있다. 전자는 국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도로 발달한 경제와 저소득경제 사이의 생활수준격차를 점차 축소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후자는 보다 공업화된 나라와, 발전이 뒤진 나라 사이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인 힘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절실한 요구이다. 개도국은 위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지만 나라별로 양자의 비중은 다르다고 한다. (Eckstein, A., *China's Economic Revolution*, London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石川滋 監譯, 『中國の經濟革命』,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0, pp.37~39). 북한의 경우, 경제개발의 목적은 사회복지 지향적 요소보다 국력지향적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9)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예컨대 梁文秀, 『北朝鮮經濟論: 經濟低迷のメカニズム』, 東京: 信山社, 2000, pp.67~88 참조.

산과정에 지방의 특성과 현지 농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에서 기업들이 원가를 따지고 경제적 타산을 바로 하며 실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기존 경제개발전략의 틀을 바꿀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농업에서는 집단농장체제, 공업에서는 국유기업 중심의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집단농장 및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되는 등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은 종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소비 희생의 강제저축과 고(高)축적, 중공업 우선 정책, 자력갱생 및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정신적 자극 우선 원칙 및 대중노선 등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경제개발전략의 기본골격은 변하지 않은 상태이다.

즉 김정일 시대에 과학기술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해서 이것이 기존의 경제개발 전략에 뚜렷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은 기존 경제개발 전략의 골격은 유지한 채 '과학기술 중시'라는 요소를 추가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경제개발 전략의 핵심요소로 등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이나 '도약형' 경제개발전략이 북한의 21세기 경제개발 전략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개발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과학기술발전 및 첨단산업육성에 북한의 자본이 집중투자되는 등의 형태로, 최소한 기존의 자원배분정책, 특히 중공업 우선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4.2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의미

그렇다고 해도 경제개발 전략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과학기술중시정책이 새롭게 등장, 기존의 경제개발 전략에 추가된 사실의 의미는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은 크게 보아 ①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의 투입 증대, ②생산요소의 생산성(효율)증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내부자원이 사실상 고갈된 북한의 현 실정에서 생산요소의 투입증대는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생산성증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효율성의 향상은 크게 보아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향상과 배분적 효율성(allocational efficiency)의 향상으로 나뉜다. 여기서 배분적 효율성이란 재화·서비스의 수급불균형, 과잉재고 등과 같은 사회적 낭비를 없애는 것으로 주로 기업 경영방식의 개선, 국민경제 운영방식의 개선 등에 의해 달성된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기업의 경영

방식도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바가 크므로 결국 배분적 효율성의 향상에는 제도·정책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²⁰⁾ 그리고 사회주의경제가 심각한 배분적 비효율성을 안고 있었던 것도 국민경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던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²¹⁾

따라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생산성 증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으로서는 배분적 효율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계획에서 시장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름 아닌 '경제개혁'을 의미하고 따라서 '체제'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럽다.

그 대신 기술적 효율성의 향상은 체제문제에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 즉 북한이 최근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내세우게 된 것은 북한당국이 '제도'를 변혁시키기보다는, 즉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술진보, 기술발전 쪽에 많은 힘을 쏟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국가들의 역사적 경로의 분화²²⁾는 크게 보아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 사회주의 제국에는 3가지 사고방식·정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술을 바꾸면, 즉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주의라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제도를 개혁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인간의 의식·사상을 바꾸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주의 제국을 3개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²³⁾ 물론 현실의 사회주

20) 물론 기술적 효율성의 향상에도 '제도'의 역할은 작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1) 좀 더 넓게 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었다는 데 기인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와의 비교의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소유제의 면에서는 사유제가 아니라 국유제, 의사결정의 면에서는 분권제가 아니라 중앙집권제, 국민경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2) 북한을 비롯해 동구, 중국 등 사회주의 제국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소련의 경험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른바 소련 모델이 이식되었다. 하지만 스탈린의 사망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제국은 이른바 소련 모델에서 탈피, 나름대로의 사회주의를 모색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제국의 역사적 경로가 분화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체적인 모습도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적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더욱 뚜렷해졌다.

23) 물론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유형화는 이러한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Montias는 ①동원(mobilization)의 정도, ②시장의 범위, ③의사결정의 집권과 분권이라는 3가지 기준에 의해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동원형(중국, 쿠바 등), 집권-행정형(구소련 등), 분권-행정형(헝가리 등), 시장 사회주의형(유고)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의 제국은 이 3가지 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의 분류·유형화는, 상기의 3가지 측면 중,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세하였는가에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유형, 즉 기술중시 유형의 대표적인 나라는 구소련이다. 그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ASU(자동화 관리 시스템)이다. 이는 컴퓨터의 힘을 빌려 계획편성과 관리(planning and management)를 자동화(automation)함으로써 계획경제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즉 중앙의 계획당국으로부터 말단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위계적(位階的) 계획관리기구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의 수집, 전달, 처리 및 관리·제어조작이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이는 개별공장의 생산공정을 혹은 공장의 모든 경영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정부의 개별 부처(Ministry)와 그 산하기업을 한데 묶어 대상으로 한 것,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다. 구소련은 브레즈네프 시대(1964~82년)에 ASU 분야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쏟아붓는 등 ASU를 정력적으로 추진했다.

〈표 3〉 구소련에서의 자동관리시스템(ASU)의 신규도입상황 (단위: 개)

	1966-70년	1971-75년	1976-80년	1981-85년
기업용 ASU	151	838	389	296
생산기술공정용 ASU	170	564	1,306	2,611
지역조직용 ASU	61	631	454	339
성·국(省·局)용 ASU	19	168	92	60
자동화정보처리시스템	13	108	133	259
합 계	414	2,309	2,374	3,565

자료: Ellman, M., *Socialist Planning*,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43; Cave, M., *Computers and Economic Planning: The Soviet Exper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21(각각 원(原)자료는 *Narodnoe Khozyaistvo SSSR*, various issues).

이러한 분류방식은 70년대 초까지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었다고 한다. Montias, J. M., "Types of Communist Economic Systems", in C.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117~123. Mesa-Lago, C., "A Continuum Model for Global Comparison", in C. Mesa-Lago and C.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5, pp.94~95 참조.

두 번째 유형, 즉 제도중시 유형에 속하는 나라로서는 1950·60년대의 동구, 특히 헝가리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집권화에서 분권화로의 이행, 기업의 권한·사주성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중앙이 기업을 움직이고자 하는 방법(경제규제 방법)이 직접적·행정적 방법에서 간접적·경제적 방법으로 중점이 옮겨졌다.²⁴⁾ 이러한 면에서 두드러진 나라는 헝가리였다. 헝가리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유도시장 모델'이라고 일컬어졌다. 사회주의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은 배제한 채 상품시장만을 삽입한 계획경제였다.²⁵⁾

세 번째 유형, 즉 사상중시 유형에 속하는 나라는 개혁·개방이전의 중국과 북한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의 주관능동성론(主觀能動性論)이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객관적 조건이 나쁘더라도 인간의 의지, 정신에 의해서 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소련이나 동구제국이 물질적 자극을 우선시킨 데 반해 북한과 중국은 공히 정신적 자극을 우선시키고 대중노선을 강조하며 수많은 대중운동을 전개한 것도 이러한 사상중시정책의 반영이기도하다.

따라서 북한에서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등장한 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이 종전의 사상중시 유형에서 벗어나되 제도중시 유형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상중시 유형과 기술중시 유형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3 정보화의 의미

북한에서 최근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은 전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이다.²⁶⁾ 즉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 21세기의 경제·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에서 북한도 자유로울 수

24) 물론 구소련에서도 같은 시기에 경제개혁이 행해졌다. 1965년부터의 코쉬긴 개혁이 그것이다. 하지만 소련에서의 개혁은 동구제국의 그것에 비해 불철저한 것이었다. 더욱이 1968년의 체코사건을 계기로 코쉬긴 개혁은 형해화되었다.

25) 자세한 것은 西村可明, 『社會主義から資本主義へ - ソ連・東歐における市場化 政策の展開』, 東京: 日本評論社, 1995, pp.10~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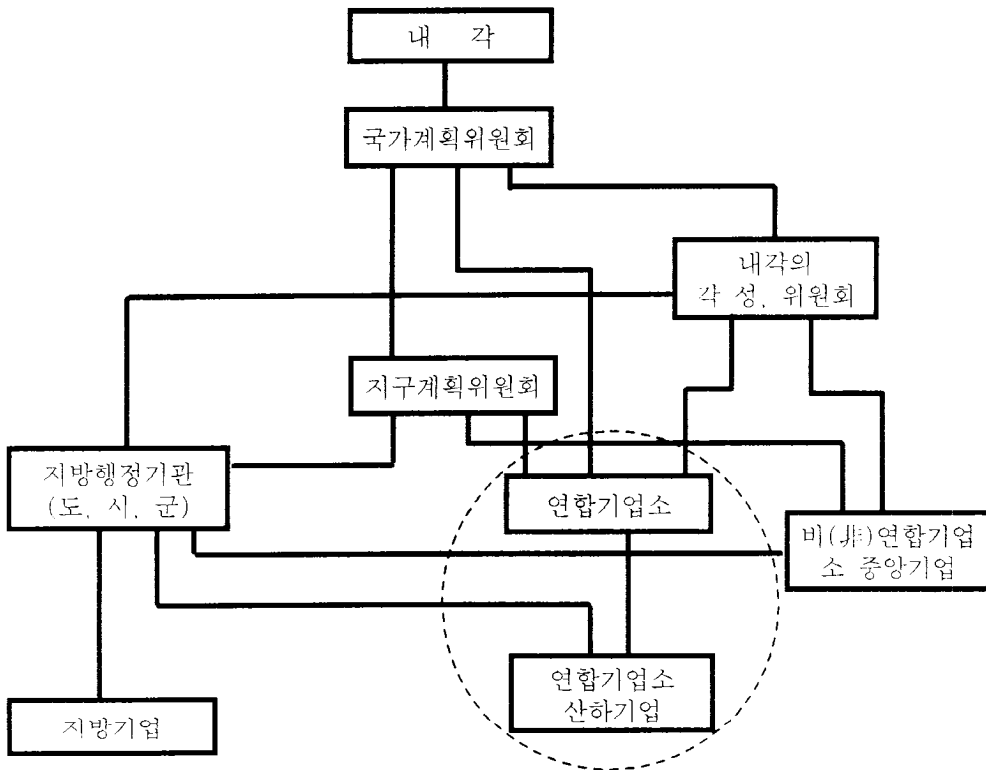
26) 북한 당국이 이른바 도약형 경제개발 방식을 구상하게 된 원인으로는 상기의 정보화 이외에도 다음의 2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지도부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을 통한 전통적인 경제개발 방식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기가 힘이 든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IT산업, BT 산업 등 첨단산업은 전 세계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북한과 다른 나라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기초과학기술 기반이 있으니 북한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단기간 내에 수출경쟁력 갖출 수 있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대체로 타당하다. 하지만 이 요인이 북한의 정보화 추진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정보화의 의미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정보화의 의미와 꽤 다르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개별경제주체에게 분산되어 있지만(즉 分權化),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정부, 특히 중앙의 계획당국에게 집중되어 있다(즉 集權化).

예컨대 자본주의의 기업과 달리 사회주의 기업은 자신의 기업활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즉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원재료 등을 누구로부터 사서 생산물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어떤 노동자를 고용하고 투자는 얼마나 할 것인가, 나아가 이러한 모든 거래가 행해지는 가격에 관한 의사 결정은 중앙의 계획당국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2〉 북한의 계획관리 기구



자료: 통일부, 『북한개요 2000』 및 필자의 탈북자 면담 결과²⁷⁾

그리고 앞서도 밝혔듯이 현실의 사회주의 제국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커다란 요인의 하나가 정보량과 중앙의 정보처리능력 사이의 엄청난 불균형이었다. 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중앙의 계획당국(28)이 개개 기업의 투입과 산출, 기업 상호간의 생산재유통 등을 그 세목에 이르기까지 집권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가공·전달해야 하나 중앙의 계획당국은 그렇게 큰 정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중앙이 처리해야 할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중앙의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증대하는 정보량에 쫓아가지 못한다.

정보량이 정보처리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명령정보의 지연이나 명령정보간의 부정합(不整合) 등에 의한 혼란이 발생한다. 기업이 수행 가능하다고 사전에 판단한 명령만을 중앙의 계획당국이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중앙의 계획당국이 기업에 대해 계획당국의 명령을 실행하는 수단, 특히 자재·설비의 보장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집권적 계획경제에서 많은 낭비와 비효율을 낳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다.(29)

그런데 '인민경제의 컴퓨터화'를 통한 정보화, 즉 이른바 산업 정보화의 확대는 정보량과 중앙의 정보처리능력 사이의 엄청난 불균형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시켜 주면서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인민경제의 컴퓨터화'는 중앙의 계획당국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브레즈네프 시대에 구소련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ASU(자동관리시스템)를 추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 듯하다. 정확한 실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은 현재 매우 초보적인 단계의 ASU 구축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생산 및 공장의 자동화가 그 예이다. 경제부문에서 지역별·부문별 컴퓨터망 체계가 개발·운영됨으로써 경영업무를 컴퓨터로 자동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그 예이다. 또 안주시가 올 1월, 안주시 협동농장 경영위원회와 시내 협동농장들 사이에 컴퓨터망을 형성한 것도 초보적인 단계의 ASU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내각과 성 및 중앙 기관, 도·시·군급 기관, 기업소간 장거리 통신망을 연결해 컴퓨터 네트워크 체계를 확립한다는

27) 이 글에서 '탈북자면담결과'라고 할 때는 1998년 3월에 행한, 탈북자 20명에 대한 필자의 인터뷰를 가리킨다. 탈북자 20명의 리스트는 양문수, "북한 기업의 행동양식: 비교경제체제론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3권 1호, 2000 참조.

28) 북한과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계획위원회, 구소련의 경우에는 연방 고스플란.

29) 자세한 것은 양문수, "북한 기업의 행동양식: 비교경제체제론적 접근", pp.221~225 참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북한이 ASU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의욕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자금과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ASU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ASU의 다음과 같은 2가지 성격에 기인한다. 첫째, 구소련이 브레즈네프 시대에 20년 가까이 ASU를 끌고 왔던 가장 큰 이유는 ASU가,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경제개혁에 대한 새롭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³⁰⁾ 둘째, 소련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ASU가 결과적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집권화(centralization)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즉 계획관리 기구상의 상위 기관은 기업을 포함한 하위 기관에 관한 정보를 보다 많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이 정보들을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계획경제 운영에 있어서 기업을 포함한 하부 기관에 대한, 상부기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4.4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들

여기서는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하는 문제를,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전반적인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대한 검토와 IT산업 육성·발전에 대한 검토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4.4.1 전반적인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북한당국이 중단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생산기반의 정상화에 어느 정도 도움

30) ASU의 도입초기(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고 기대도 컸던 것 같다. 예컨대 구소련의 연방고스플란(국가계획위원회)측은 ASU 도입후 보다 합리적인 계획화의 결과, 기계의 유희시간이 줄어들고 자재재고가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국가위원회측은 1971년부터 74년 사이에 ASU의 사용으로 인한 추가이윤은 12억 루블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ASU 도입의 선두에 섰던 소련 학자 그루시코프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ASU에 투자하는 것이 보통의 선반이나 기계에 투자하는 것보다 2배반 내지 3배정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서방측 경제학자들은 ASU, 특히 기업레벨의 ASU가 도입초기에 일정정도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소련당국이 주장하는 만큼의 성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소련 내에서도, 경제에 ASU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데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힘을 얻어갔던 것 같다. 들인 돈과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소련의 지도부 일각에서는 고르바초프시대(1985~91년)로 들어가서 케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ASU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듯했다.

을 줄 수는 있다. 에컨대 공장·기업소의 기술개선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다만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할 재정적 여유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국가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속에서도 과학기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북한당국의 노력은 읽을 수 있다. 과학사업비 예산은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전년대비 10%, 5.4% 늘어나 전체예산지출의 증가율(1.8%, 1.9%)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99년에는 농업(11%), 석탄공업(10%), 전력공업(15%)의 예산도 과학사업비 예산증가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났다. 더욱이 2000년에는 농업(5%), 석탄공업(12.3%), 전력공업(15.4%)의 예산이 과학사업비 예산과 비슷하거나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과학기술발전도 중요하지만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등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에도 자금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북한의 고민이 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경제는 체제특성상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도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새로운 기술을 생산현장에 도입하는데는 항상 위험부담이 수반되는데 자본주의경제에서는 기업가(혹은 경영자)가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한다.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거나 기존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면 기업의 이윤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사실 사회주의경제가 안고 있던 커다란 고민의 하나는 기업내 혁신(innovation)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경제에서 기업의 최대 임무는 정부, 즉 중앙의 계획당국으로부터 명령의 형태로 하달된 해당 기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제의 대표적인 것은 제품의 생산량목표(계획)의 달성이다. 기업은 대체로 생산량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비용, 이윤, 특히 기술혁신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생산현장에서 그 달 혹은 그 분기의 생산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 혹은 채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생산목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제안은 상부기관에 제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상부기관이 승인하고, 또 기업에서 실험에 성공했다 하자, 이 때 상부기관이 다음 해의 계획에 이러한 생산성 향상분을 반영해 기업의 생산계획목표를 상향조정한다면 기업으로서는 아무런 득을 볼 게 없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안이 실패할 경우의 위험 부담, 즉 생산량 목표 미달성, 경영자의 위신의 추락 등을 무릅쓸 인센티브도 사라지게

된다.³¹⁾

어느 탈북자는 “북한에서 기술혁신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기술자 혼자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개발이 성공한다는 확실한 전망이 없으면 현장의 사람이든, 공장 지배인이든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기술자가 생산 현장에 가서 이런 것을 실험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면 현장사람들은 화를 낸다.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바쁘데 무슨 실험이냐는 것이다. 실험을 한다고 해도 현장 사람들이 득을 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는 반응들이다.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²⁾고 밝히고 있다.

故김일성 주석이 “지금(1987년) 공장, 기업소의 적지 않은 일꾼들이 당면한 생산에만 치중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는 거의 낯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일꾼들은 … 노동자들과 기술자들 속에서 좋은 기술혁신안이 제기되어도 현행생산이 바쁘다는 구실 밑에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³³⁾고 심하게 질책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4.4.2 IT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

이어서 IT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현재로서는 북한에 IT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북한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자본과 기술이 집중 투입되면서 나름대로 발전해왔던 군수부문의 IT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문제는 민수부문이다.

첫째, 열악한 통신 인프라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SOC 부문이 국가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데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통신 인프라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다. 평양 등 몇몇 대도시에서는 전화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갈수록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1993년 현재 북한의 전화회선수는 103.5만 회선이며 전화보급률은 100명 당 4.3대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해 한국 전화회선수(2,022만 회선)의 20분의 1, 한국 전화보급률(100명 당 37.9 대)의 9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의 통신 기반 시설은 한국의 70년대 후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31) 사회주의 경제에서 기업내 기술혁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Nove, A., *The Soviet Economy. An Introduction*, 3rd edi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68, pp.181~186, 速水佑次郎, 『開發經濟學 - 諸國民の貧困と富』, 東京: 創文社, 1995, pp.160~164 가 자세하다.

32) 평남 순천시 행정경제위원회 지방공업부 생산과 지도원 출신 탈북자와의 면담 결과.

33)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13.

〈표 4〉 남북한 통신시설 현황 비교

구 분	단위	북한(A)	한국(B)	비교(B/A)
전화 회선수(1993년)	천 회선	1,035	20,223	20배
100명당 전화보급률(1993년)	대	4.3	37.9	9배
국제전화 회선수(1993년)	회선	215	12,051	56배
공중전화 시설수(1996년)	대	2,720	339,240	125배
1,000명당 공중전화 시설수(1996년)	대	0.12	7.45	62배

자료: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2000 ; ITU,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1998*.

물론 북한은 특히 90년대 들어 통신시설 확장과 현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힘입어 통신사정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북한의 전반적인 통신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표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인 광명의 경우, 최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전화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통신상의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통신 인프라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IT 장비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북한의 전체 산업 중 가장 뒤떨어진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컴퓨터의 핵심부품 중 극히 일부만 국산화되어 있는 등 하드웨어 생산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대부분의 핵심부품이나 완제품을 일본, 러시아 등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의 낙후와 함께 외화의 절대적인 부족이 컴퓨터 장비의 절대부족을 가져오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북한당국이 북한 내 이산가족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남한측에 사무용 PC 1,000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민간 부문에서 PC 보급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현재 군사부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민간부문이 대략 13만 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386급이 10만 대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486급은 3만 대, 586급 이상은 500 대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 PC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큰 고민이지만 그나마 있는 것도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 구형제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이다. 북한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기는 하나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인터넷이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 자본주의 사상의 침투 통로라고 보고 일반 주민들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외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은 국제정보를 필요로 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

북한당국이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정보화가 다름아닌 체제위협요인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북한당국이 인터넷 개방보다는 북한 내부의 인트라넷을 통해 정부기관, 연구소, 공장 사이를 연결시켜 정보수집·전달의 효율성 제고에 힘을 쏟는 것도 바로 체제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 제한 제도이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IT 관련 설비를 수입하거나 반입함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486급 이상의 컴퓨터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전자장비·통신 등의 전략물자를 대북반출 제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96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바세나르 협정(중전의 COCOM)이라는 국제협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바세나르 협정은 이중용도 품목, 즉 민수용으로도 군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북한과 같은 분쟁우려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제협약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또 미국은 대북경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부품이나 미국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이중용도 제품의 대북 반출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생산장비, 통신 장비 등 기술집약적 제품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IT관련 장비를 북한에 가지고 들어가려 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북한의 IT산업 발전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섯째, 굴뚝산업으로도 불리는 전통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것은 물론, 전반적으로 생산의 기본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90년부터 98년까지의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심각한 식량난, 극단적인 물자부족 등이 보여주듯이 북한은 현재 경제의 기본적인 재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산업인 IT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물론 개도국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차세대 첨단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현재의 정보통신 혁명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구축해 가지만 개도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로 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피할 수 있으며 어떤 분야에서는 선진적인 사례를 모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는 거셴크론(Gerschenkron)의 후발성의 이익(advantage of back-

wardness), 즉 개도국은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막대한 개발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비교적 싼 가격으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경제발전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개도국이 어느 정도의 기술 및 산업적 기반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북한과 같이 기술 및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차세대 첨단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전략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이 최근 힘을 넣고 있는 공장의 기술적 개진,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공장 자동화도 자동화 이전의 것, 자동화보다 더 기본적인 곳에 분체가 쌓여 있으며 이것이 공장 자동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정전되는 경우가 많고 전압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자동화 설비의 고장을 초래하기 쉽다.

4.4.3 IT산업 육성정책의 전망

제약요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북한 IT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북한 당국이 IT산업 발전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의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육성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북한의 소프트웨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 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북한의 일부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가 세계적인 수준이거나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울러 북한의 가장 풍부한 IT자원으로 알려진 10만 명의 IT인력도 아직 질이 검증되지 않았다. 사실 북한의 IT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컴퓨터 장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시대에 뒤진 386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들 인력이 모두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 또한 북한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이 자본주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당장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렇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즉 한국을 비롯한 외국이 북한의 인력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종합적으로 보아 북한의 IT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열악하다 할 수 있다. 결국 열악한 통신 인프라, IT장비의 절대적 부족, 정보화와 정보

통제의 병행 필요성, 바세나르 체제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대북 전략물자 반출상의 어려움, 굴뚝산업의 기반의 취약함, 북한 IT인력의 수출 상품 개발 능력의 취약함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북한 IT 산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은 어떠할 것인가. 예측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다만 최근의 여러 정황과 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조건에 비추어 본다면 단기간에 기존의 전략과 크게 다른 전략이 등장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경제개발전략상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북한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무언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다만 북한의 국내적 조건 및 국제적 조건, 혹은 주체적 조건 및 객관적 조건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큰 폭의 변화를 허용치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북한의 운신의 폭과 선택의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이 기존의 것과 똑같다고 잘라 말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앞에서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을 전망함에 있어서 핵심요소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개혁·개방 여부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개혁·개방의 제변수를 도출하고 이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망했다.

즉 북한의 개혁·개방은 제한적·점진적 개혁·개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식이 아니라 북한식이 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이면서 동시에 지그재그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은 큰 틀로 보아서는 개혁보다는 개방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개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중단기적으로 개방의 폭이 대폭 확대되기는 어렵고 소폭 확대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북한의 개혁·개방의 제변수에 대한 검토를 통한 개혁·개방 전망 결과는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한 전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물론 아직은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북한 경제개발 전략의 핵심요소의 지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은 기존 경제개발 전략의 골격은 유지한 채 '과학기술중시'라는 요소를 추가한 단계에 와 있

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북한의 21세기 경제개발전략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개발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현재는 첨단산업 육성에 기초한 '도약형' 경제개발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구상이 경제개발 전략의 핵심요소로까지 발전될지, 또 실령 경제개발 전략의 핵심요소로까지 발전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식량난, 에너지난, 자재난 등 시급한 경제문제 해결은 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첨단산업 육성만으로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따라서 '도약형' 경제개발구상은 중장기적 과제 내지는 중장기적 개발전략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생산기반의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즉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이후에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중장기적인 것이다. 사실 생산기반의 정비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차원의 것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와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경제개발 전략의 핵심요소로까지 발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개발 전략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요소라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 전략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과학기술중시정책이 새롭게 등장, 기존의 경제개발 전략에 추가된 사실의 의미는 적지 않다. 이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의 방향성이, 제도(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변혁하기보다는, 즉 본격적인 경제개혁보다는 기술진보에 힘을 쏟는 쪽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에서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등장한 것은, 북한이 종전의 사상중시 유형에서 벗어나되 제도중시 유형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상중시 유형과 기술중시 유형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이 산업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이것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하지 않고서도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이 현재의 제반조건 하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첨단산업 육성책을 전개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IT인프라의 구축과 IT 장비의 확보, 전통산업의 생산 기반 정상화 등은 막대한 자본, 초기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북한의 힘만으로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 북한 스스로의 힘에 의한 기술발전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외부세계와의 협력이 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성과를 좌우할 최대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중국,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된다. 특히 미국의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은 중국에 대해 생존을 위해 곡물과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개발 전략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중국이 북한의 첨단산업 육성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함과 동시에 북한 첨단산업 제품의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북한이 울들어 제조업 분야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지만 IT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부세계와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³⁴⁾ 최소한 첨단산업 분야에 관한 한,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외부세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단기적으로 개방의 폭을 지금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개방의 폭이 얼마만큼 확대될지, 특히 한국기업의 자유로운 왕래, 북한의 인력 관리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얼마나 허용할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이다. 외부세계와의 교류·협력의 증대는 체제불안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데 과연 북한 당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개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된 바가 없다.

결국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특히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북한측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협력을 매개로, 북한과 협력하면서 북한이 개방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한국측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겠다.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 전략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열쇠는 기본적으로 북한측이 쥐고 있지만 한국측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34) 북한이 한국기업과의 경제협력에서 기대하는 것은 단순 임가공을 통한 외화획득과 고용 창출(확대)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한국기업과 위탁가공 협력을 하면서도 섬유산업에서의 협력과 전자산업에서의 협력에서 태도가 확연하게 달랐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전자산업에 대해서는 남북경협, 특히 한국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했고 자신들이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남북경협, 특히 한국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에 대해 경직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북한이 남북IT협력을 통해 기대하는 가장 큰 것도 IT기술의 습득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3대 제일주의에서 과학기술중시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 2000.
- 김연철, “북한의 경제체제 재편과 개혁·개방 전망”, 『분단구조재편과 북한체제의 변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 배종렬, “2001년 북한의 경제정책방향과 남북협력의 과제”, 통일경제연구협회 공개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001. 2.
- 양문수, “북한 기업의 행동양식: 비교경제체제론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3권 1호, 2000.
- 양문수, “북한과 중국의 계획화 시스템의 비교”, 『경제학연구』, 제49집 제1호, 2001.
- 오승렬,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경협”, 제 22차 통일전략포럼 발표자료,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1.2.
- 이일영·양문수, “6·15 이후의 북한경제, 어디로?: 축적전략 변경 및 시스템 개혁에 대한 전망과 평가”, 『동북아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2001.
- 이종석, “2001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2001.1.
- 이지평, “IT기술이 몰고 오는 신산업혁명”, LG경제연구원, 2000.
- 정간영, “한국적 개발전략의 북한 적용 가능성 진단”, 『통일경제』, 1999년 12월호.
- 조동호·김상기, “북한 경제정책 구도 및 향후 경제정책 전망: 2001년 신년 공동사실 분석을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2001년 1월호.
- 조명철,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분석”, 『KIEP세계경제』, 2000.5.
- 최신림, “부시정부 출범과 남북경협 환경변화”, 대한상의 제 2차 남북경협위원회 발표자료, 2001. 2.
-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각호.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2000년대 유망산업시리즈- IT산업』, 2000.
- 홍성국, “2000년도 북한경제와 2001년 전망”, 『통일경제』, 2001년 1·2월호.
- 홍순직, “김정일 총비서의 신사고와 북한의 개혁·개방”, 『통일경제』, 2001년 1월호.

2001년 3·4월호.

-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グルシコフ&モーイェフ, 『コンピュータと社會主義』(田中雄三譯), 東京: 岩波書店, 1976.
- 西村可明, 『社會主義から資本主義へ - ソ連・東歐における市場化政策の展開』 東京: 日本評論社, 1995.
- 速水佑次郎, 『開發經濟學 - 諸國民の貧困と富』, 東京: 創文社, 1995.
- 梁文秀, 『北朝鮮經濟論: 經濟低迷のメカニズム』, 東京: 信山社, 2000.
- Cave, M., *Computers and Economic Planning: The Soviet Exper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Eckstein, A., *China's Economic Revolution*, London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石川滋 監譯, 『中國の經濟革命』,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0).
- Ellman, M., *Socialist Planning*,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Gregory, P. R. and Stuart, R. C.,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Boston: Houghton Mifflin, 1980.
-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Mesa-Lago, C. "A Continuum Model for Global Comparison", in C. Mesa-Lago and C.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5.
- Montias, J. M. "Types of Communist Economic Systems", in C.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 Nove, A., *The Soviet Economy, An Introduction*, 3rd edi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68.

< 부록1 >

권 별 수 록 논문 일 랑 표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	•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내 통일논의의 사회적 가치함의에 관한 연구	김진향 (경북대 강사)
	• 남북한화해시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계	노병렬 (증산도 사상연구소 연구위원)
	• 대북포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박재민 (연세대 사회과학 연구소)
	•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이완범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부교수)
II	•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	김영하 (대구교대 강사)
	• 우리나라 대학의 통일교육과 대학생의 통일 의식 변화	김주찬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이창식 (한서대 부교수)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극대화 방안	최승규 (부산대 강사)
	• 초등학교 재량 활동을 위한 구성주의적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병완 (춘천교대 조교수)
III	•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김갑식 (서울대 한국정치 연구소 연구원)
	•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와 체제 군사화(軍事化)에 관한 연구	김용현 (동국대 강사)
	• 북한의 개혁과 개방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박선원 (연세대 통일연구소 연구원)
	•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이해변화' 분석	박정진 (고려대 아세아 연구소 연구원)
	•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와 군사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태섭 (인제대 전임강사)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형 연구 • 북한의 경제체제진환 분석 : 점진적 이행의 CGE모형 •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시범적 통일로서의 통일특구에 관한 연구 •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p>고영삼 (부산발전연구원 전문위원)</p> <p>이영훈 (고려대 강사)</p> <p>유승훈 (호서대 전임강사)</p> <p>조진철 (미국 포틀랜드대학 방문교수)</p> <p>양문수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p>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 • 국가주도형 심천모형과 시장주도형 상해모형의 북한적용가능성 연구 • 북한의 사회법률직업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언어공학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 •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p>김수암 (통일교육원 책임연구원)</p> <p>박병광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연구위원)</p> <p>이동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p> <p>이봉원 (고려대 언어정보 연구소 연구원)</p> <p>조수선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연구원)</p>

< 부록2 >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6~2001년)

'96년

<통일정책 분야>

-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교류 · 협력분야>

- 남북한 신뢰구축
-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 북한 “인민”생활세계 연구
- 북한의 화법(話法) 연구
-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통일환경 분야>

- 한·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 동북아 평화체제구성과 전망에 있어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의미와 역할
- 북한의 대미집근과 한국의 대응방안
-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97년

<통일정책·통일환경 분야>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
-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淸한반도 기본전략
- 독일통일 후 과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 실태 일연구
-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 북한 사회주의체계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교류협력·인도지원·남북협상분야>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홍보분야>

-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98년

<통일정책·통일환경 분야>

- 남북한 통일상사법의 정립방향

-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 다자간 안보협력과 지도국의 역할
- 남북협상 과정상의 대북협상 모델연구
- 남북한 전력유통 상황 아래에서의 전원설비 개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구
- 체제전환기의 노사관계 변화
-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 방안
-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북한체제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연구
-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소비생활양식 및 소비문화와 통일후 적응문제 연구
- 북한사회의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남북회담 · 교류협력 · 인도지원 분야>

-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육로 직수송방안에 관한 연구
-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십 연구
- 대만 · 중국의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델
- 도서관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 바람직한 남북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체결 방안

<통일교육 · 홍보분야>

-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 통일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재정립 및 구체화 방안
- 통일 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일 연구
- 새통일 한국의 영 · 음 교육 연구

'99년

<통일정책 분야>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군사적 방안연구
-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연구
- 對조총련 '포용정책'필요성과 전개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한국의 근대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통한 북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방안
-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 연구
-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 통일운동 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북한실태 · 인도지원 분야>

- 북한의 이차경제 발흥과 정치적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개발방향 연구
- 북한이탈주민 자립 · 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연구
- 기후변화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법적지위와 이에 대한 지원 및 송환방안

<통일교육홍보 · 기타>

- 정보화시대 통일부의 효율적인 홍보전략
-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그 실현방안
-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방안
- 남북한 초등학교에서의 도덕교육내용 비교 연구
- 김일성 담화체계의 실화적 모티프 연구
- 놀이문화에서 찾아내는 남북공감대 모색방향 연구
- 북한관련 TV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000년

<통일정책 분야>

- 일·북수교와 한국의 정책과제
-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기반 확충방안
- NGO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한·중 경제교류 협력의 발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통일이후 동·서독 임금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본 사회통합 연구
-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북한실태 분야>

- 동북아시아 국가의 사막화 현상이 북한 산림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후 복구계획
- '9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 발전과 정보화
- 북한의 국가능력약화와 분권화 가능성
- 김정일체제의 사회통제와 주민의식 변화 연구

<통일교육, 홍보, 교류협력, 기타 분야>

- 남북한 「도덕」 교과에 나타난 가치덕목 연구
- 초·중등생 및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추이 조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 방안 모색
- 북한체제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 남북정상회담이후 산업입지 측면에서 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설정
- 한국, 북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 비교연구
-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연구
- 남북한 해역에서 퇴적물 기원 및 오염현황 대책방안을 위한 연구

2001년

<통일정책 분야>

-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내 통일논의의 사회적 가치함의에 관한 연구
- 남북한화해시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계
- 대북포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 분야>

-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
- 우리나라 대학의 통일교육과 대학생의 통일 의식 변화
-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극대화 방안
- 초등학교 재량 활동을 위한 구성주의적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북한실태(정치) 분야>

-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신군정치'(先軍政治)와 체제 군사화(軍事化)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개혁과 개방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이해변화' 분석
-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와 군사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경제) 분야>

-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형 연구
-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분석 : 점진적 이행의 CGE모델
-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시범적 통일로서의 통일특구에 관한 연구
-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사회) 분야>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
- 국가주도형 심천모델과 시장주도형 상해모델의 북한적용가능성 연구
- 북한의 사회범률직업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언어공학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
-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북한실태(경제) (Ⅳ)

인 쇄 : 2001. 12.

발 행 : 2001. 12.

발행처 : 통일부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 02)720-2425~6

인쇄처 : 덕성문화사

☎ 02)2274-5916
